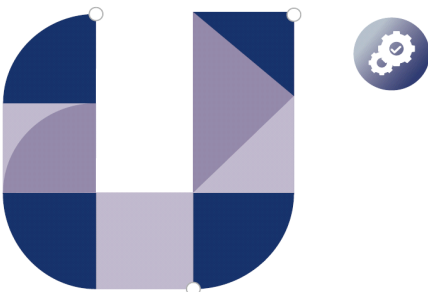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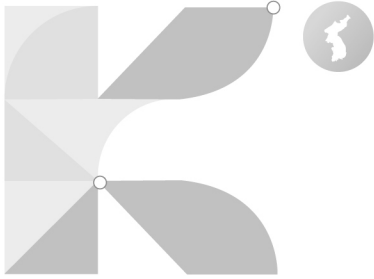
남북 지식협력: 현황 및 추진 방향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김수암 | 최규빈 | 문경연 | 박지연





남북 지식협력: 현황 및 추진 방향



연구책임자

김수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최규빈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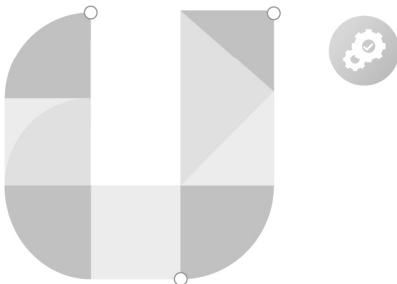
문경연 (전북대학교 교수)

박지연 (전북대학교 교수)



연구지원

홍예선 (통일연구원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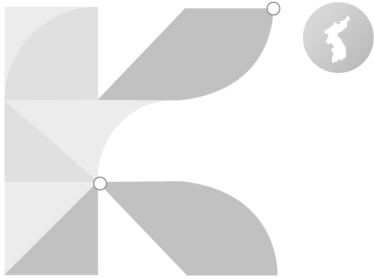
남북 지식협력: 현황 및 추진 방향

KINU 연구총서 21-04

발행일	2021년 12월 30일
저자	김수암, 최규빈, 문경연, 박지연
발행인	고유환
발행처	통일연구원
편집인	인도협력연구실장
등록	제2-02361호 (97.4.23)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전화	(대표) 02-2023-8000 (FAX) 02-2023-8296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세일포커스(주)(02-2275-6894)
인쇄처	(주)계문사(02-725-5216)
I S B N	979-11-6589-053-7 93340
가격	9,500원

© 통일연구원, 2021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02-734-6818), 사무실(02-394-0337)



남북 지식협력:

현황 및 추진 방향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례

요약	9
I. 서론	17
1. 연구목적	19
2.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21
II. 지식협력 사업: 논의와 사례	25
1. 지식협력 사업의 이해	27
2. 지식협력 사업에 대한 논의	40
3. 주요 기관들의 지식협력 사업 추진 사례	49
4. 한국의 경제발전경험 공유 사업(KSP) 추진 동향	65
III. 국제사회의 대북 지식협력 사업 추진 현황 및 평가	77
1. 유엔 다자기구의 대북 지식협력 분석	79
2. 국제NGO 및 기관의 대북 지식협력 사업 추진 현황	95
IV. 한국의 대북 지식협력 사업 추진 현황	117
1. 정부의 대북 지식협력 사업 추진 현황	119
2. 국내NGO의 대북 지식협력 사업 추진 현황	127

V. 남북 지식협력 추진 방향	161
1. 지식협력과 북한의 입장 및 여건	163
2. 추진 방향	168
VI. 결론	183
참고문헌	188
부록	197
최근 발간자료 안내	203

표 차례

〈표 I-1〉 심층 설문조사 대상 단체	23
〈표 II-1〉 각 주체별 KSP 사업 현황(2019년 기준)	67
〈표 II-2〉 한국개발연구원의 KSP 사업 현황(2019년 기준)	68
〈표 II-3〉 산업연구원의 KSP 사업 현황(2019년 기준)	70
〈표 II-4〉 국토연구원의 KSP 현황(2019년 기준)	72
〈표 II-5〉 사회주의 국가 대상 KSP 사업 현황(2019년 기준)	72
〈표 III-1〉 유엔전략계획(UNSF) 상 주요 내용	79
〈표 III-2〉 ‘유엔전략계획 2017~2021’ 4대 우선순위 및 세부목표	83
〈표 III-3〉 UNDP의 대북 지식협력 현황	86
〈표 III-4〉 UNESCAP의 대북 지식협력 현황	87
〈표 III-5〉 국제NGO의 대북 지식협력 사업 기관별 추진 현황	96
〈표 III-6〉 조선익스체인지 대북 지식협력 사업 주요 추진 현황	97
〈표 III-7〉 한스자이델재단 북한 지식협력 사업 주요 현황	99
〈표 III-8〉 아시아 재단의 대북 지식협력 사업 주요 현황	108
〈표 IV-1〉 통일부 대북지원 직무 현황	119
〈표 IV-2〉 국내NGO의 대북 지식협력 사업 추진 현황	128
〈표 IV-3〉 교육 유형 대북 지식협력 추진 현황	140
〈표 IV-4〉 어린이어깨동무 북한 의료인 교육사업 현황	141
〈표 IV-5〉 월드비전의 남북 농업과학 심포지엄 개최 현황	142
〈표 IV-6〉 국제행사를 통한 남북 경험공유 사업 현황	143

〈표 IV-7〉 동북아 산림협력 국제회의 개최 현황	144
〈표 IV-8〉 사업목적 유형에 따른 정부 및 국내 민간단체 지식공유 분류	145
〈표 IV-9〉 국내NGO와 국제기구·국제NGO·제3국 기관 파트너십 형성	148
〈표 IV-10〉 대북 지식협력 추진 주체의 형태	149
〈표 IV-11〉 인재양성센터 교육 과정(2006~2008년)	151
〈표 IV-12〉 인재양성센터 북한 수강생 소속 및 배출 인력 현황 (2001~2008년)	152
〈표 IV-13〉 평양과학기술대학 대학 및 대학원	154
〈표 V-1〉 국내NGO 대북 지식협력 추진계획	177

그림 차례

〈그림 Ⅱ-1〉 지식협력 사업의 유형 구분	32
〈그림 Ⅱ-2〉 지식협력 사업의 시기별 특징과 내용 변화	34
〈그림 Ⅱ-3〉 지식협력 사업의 수원 지역	37
〈그림 Ⅱ-4〉 지식협력 사업의 공여체	38
〈그림 Ⅱ-5〉 지식협력 사업의 분야	39
〈그림 Ⅱ-6〉 독일의 지식협력 사업 추이(2010~2019년)	58
〈그림 Ⅱ-7〉 영국의 지식협력 사업 추이(2010~2019년)	63
〈그림 Ⅱ-8〉 영국의 지식협력 사업 대상 지역(2010~2019년)	63
〈그림 Ⅱ-9〉 KSP 사업 현황(2021년 6월 기준)	66
〈그림 Ⅲ-1〉 UBC의 북한 지식 협력 사업 현황	112

대북지원이 장기화되면서 우리 내부에서 긴급구호에서 개발구호 및 개발지원, 개발협력으로 전환을 모색하게 되었다. 개발협력은 역량 형성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데, 역량 형성을 위한 개발협력은 지식협력과 궤를 같이 한다. 국제사회에서도 개발협력 분야에서 경제·사회 발전에 필요한 물적 인프라 구축과 함께 비물질적 협력 수단으로 지식협력이 강조되는 추세에 있다. 특히 유엔과 세계은행 등 다양한 개발 전문가들과 개별국가들을 중심으로 국제사회는 역량 형성 차원의 개발협력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전개하는 동시에 효율적인 지식협력 사업 이행을 위한 방식과 체계를 나름대로 구비해오고 있다.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 노딜 이후 남북관계의 경색 국면이 지속되면서 개발협력으로의 본격적인 전환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남북관계가 개선의 국면에 접어들게 되면 북한 내 역량 형성을 위한 개발협력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흐름에서 보듯이 북한 내 역량 형성을 위한 주요 방식으로서 지식협력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과제에서는 남북관계가 개선 국면에 접어들어 개발협력이 활성화될 경우에 대비하여 북한 내 역량 형성을 위한 지식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국제사회는 개발협력 추진 과정에서 역량을 형성하고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지식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지식협력 사업은 수원국의 정책 및 제도개선, 그리고 이와 관련된 종사자들의 역량개발 등을 목표로 하며, 최종적으로 수원국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그런데 국제사회의 사례에 대한 연구를 통해 지식협력 사업이 수원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앞으로 대북 지식협력을 추진할 때 남북한 통합이라는 궁극적 목표 아래 대북 지식협력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한계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국제사회와 우리 정부 및 국내NGO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유형의 대북 지식협력 사업을 추진하였다. 특히 국내의 대북 지식협력 사업의 추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에 위탁하여 8월 10일부터 31일까지 15개 소속 단체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국제사회와 우리가 추진한 대북 지식협력 사업을 분석한 결과 사업의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하고 추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개혁·개방에 대한 북한당국의 민감한 태도가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였다고 판단된다. 이로 인해 분명한 목표 아래 수원국인 북한의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투명하게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연속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못하였다. 개발협력으로의 전환과 개발협력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식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대북 지식협력을 추진하여 왔으나 지식협력 자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 국내 민간단체, 국제기구가 수행한 지식협력 사업은 주로 북한 보건의료, 산림, 농축산 분야에 집중되어 있고 교육, 세미나, 토론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기 추진된 대북 지식협력 사업들은 농업, 보건의료, 산림 등 북한이 필요로 하는 분야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민간단체의 지식협력은 조직 및 제도의 역량 강화보다는 개인의 역량 강화에 더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무엇보다 남북관계 경색과 대북제재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코로나19 상황으로 국경이 봉쇄되면서 대북 지식협력은 다른 교류협력 사업과 마찬가지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추진되지 못하였다.

앞으로 남북 통합을 염두에 두고 경제발전, 사회발전이라는 분명한 목표 아래 대북 지식협력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세부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

첫째, 국제사회의 최근 추세를 반영하여 ‘이슈의 포괄성’을 반영해야 한다.

둘째, 주인의식(ownership)에 입각하여 북한의 수요를 가장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셋째, 북한의 수용역량을 고려하여 접근해야 한다. 특히 개혁·개방에 대한 북한의 수용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식협력 사업의 추진 분야는 비정치적인 분야→ 시장경제적 요소를 반영한 과도기 분야→ 시장경제 및 사회발전을 위한 분야로 단계별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비정치적 분야는 이슈의 포괄성, 북한의 수요(유엔 등과 합의한 분야,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에 대한 입장, 남북 분과회담 합의 등 포함)를 종합하여 볼 때 기후변화, 산림협력, 농업협력, 보건의료협력, 식수 및 위생협력, 에너지협력 등의 분야를 최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우리 정부와 국내NGO들이 추진한 지식협력 사업을 살펴보면 주로 개인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일부 기관역량 강화 사업이 추진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대북 지식협력 사업은 개인역량, 조직 및 기관 역량강화를 넘어 규칙 및 규범 등을 반영한 제도적 환경 조성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국제사회는 지식협력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플랫폼 등 기관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추진 방향을 구축하여 오고 있다. 앞으로 국제사회의 지식협력 사업은 다양한 행위자들이 다층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복합적인 국제이슈를 다루는 형태로 진화될 것이다. 우리도 대북 지식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 차원의 추진 방향, 민관협력 체계, 국제사회와의 협력체계 등 대북 지식협력 추진 거버넌스를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또한 FAO, UNECE, 세계은행 등의 사례를 참조하여 한반도 현실에 맞는 지식협력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해야 할 것이다.

대북 지식협력 사업은 남북관계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초기 단계에서는 국내NGO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다. 단계적 분야의 확산 방식과 관련하여 비정치적 우선 분야를 중심으로 국내NGO의 대북 지식협력 사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재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남북협력기금 등 국내NGO의 대북 지식협력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지식협력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절차를 포함하여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보다 본질적인 대북 지식협력 추진의 장애 요소는 남북관계 경색, 제재 등 외부 정치적 변수로 인한 인적 교류 및 접촉의 제약, 금지되는 상황이 지속된다는 점이다. 대북제재의 본질적 제약 요소를 완화할 수 있는 국제협력이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

주제어: 북한, 지식, 지식협력, 개발협력, 플랫폼

Inter-Korean Knowledge Cooperation: Current Status and Policy Directions

Kim, Soo-Am et al.

This project seeks to find ways to effectively promote inter-Korean knowledge cooperation for capacity building in North Korea in preparation for the possibility that inter-Korean relations enter a phase of improvement and that development cooperation is activate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NGOs in South Korea have promoted various types of knowledge cooperation projects with North Korea in diverse fields. In particular the Korea NGO Council for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KNCCK) conducted a survey of 15 of its affiliated organizations from August 10 to 31, 2021, to identify the progress of domestic knowledge cooperation projects with North Korea. The results of an analysis on knowledge cooperation projects conduct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South Korea for North Korea show that such projects have not necessarily been implemented with clearly established goals. North Korean authorities' sensitive attitude toward reform and opening up have been reported as acting as the

key factor in this regard. Due to this attitude, it has not been possible to conduct transparent consultations under clear goals based on a sense of ownership of North Korea, the recipient country, or to implement projects consecutively.

It is necessary that, in the future, knowledge cooperation projects for North Korea are carried out based on a comprehensive plan and relevant, detailed measures established under clear goals of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that take into consideration the possibility of inter-Korean integration.

First, a recent international community trend, “inclusivity of issues” should be reflected in knowledge cooperation projects. Second, North Korea’s needs should be actively reflected based on a sense of ownership. Third, North Korea’s receptive capacity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particular, the level of North Korea’s receptiveness toward reform and opening up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Considering these factors comprehensively, areas in which knowledge cooperation projects should be pursued should shift step-by-step from non-political areas to transitional areas in which market economic aspects are reflected and then to areas that might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a market economy and social development. Knowledge cooperation projects for North Korea are greatly affected by the situation in inter-Korean relations. In the initial stage of their

implementation, the role of domestic NGOs will be the most important fact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established various promotion systems based on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such as platforms to effectively implement knowledge cooperation projects. For the same purpose, South Korea should also establish systematic governance for promoting knowledge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such as a government–level promotion system, public–private cooperation system, and a system of cooperation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addition, a platform for knowledge cooperation that is suitable for the reality on the Korean peninsula should be established, using the cases of the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UNECE) and World Bank as references.

Keywords: North Korea, Knowledge, Knowledge Cooperation, Development Cooperation, Platform

I. 서론



1. 연구목적

1995년 북한이 유엔에 공식적으로 지원을 요청하면서 우리 정부와 국내 민간단체들도 대북지원에 동참하여 왔다. 대북지원이 장기화되면서 우리 내부에서 긴급구호에서 개발구호¹⁾ 및 개발지원, 개발협력으로 전환을 모색하게 되었다. 북한도 2005년 인도적 지원 대신 개발협력으로 전환할 것을 요청하였다.

개발협력으로 전환할 필요성에 대한 목적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 사회와 북한 공히 인도적 위기를 본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다. 북한은 대규모 지원을 통해 인도적 위기를 탈피하고자 하였다. 우리 내부에서는 인도적 지원이 장기화되면서 국제사회의 일반적 현상과 같이 일종의 지원의 피로감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내부의 부정적 인식의 기류 속에서 우리도 북한 내 역량 형성(capacity building)을 통해 북한 내 인도적 위기를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의 전환을 모색하게 된 것이다.

개발협력은 역량 형성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데, 역량 형성을 위한 개발협력은 지식협력과 궤를 같이한다. 국제사회에서도 개발협력 분야에서 경제·사회 발전에 필요한 물적 인프라 구축과 함께 비물질적 협력 수단으로 지식협력이 강조되는 추세에 있다. 특히 국제사회는 유엔과 세계은행 등 다양한 개발 전문기관들과 개발국가들을 중심으로 역량 형성 차원의 개발협력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전개하는 동시에 효율적인 지식협력 사업 이행을 위한 방식과 체계를 나름대로 마련해오고 있다.

1) 이금순, 『대북 인도적 지원 개선방안: 개발구호를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2000), p. 9.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 노딜 이후 남북관계의 경색 국면이 지속되면서 개발협력으로의 본격적인 전환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남북관계가 개선의 국면에 접어들게 되면 북한 내 역량 형성을 위한 개발협력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흐름에서 보듯이 북한 내 역량 형성을 위한 주요 방식으로 지식협력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과제에서는 남북관계가 개선 국면에 접어들어 개발협력이 활성화될 경우에 대비하여 북한 내 역량 형성을 위한 지식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에서 개발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식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배경과 논의 과정, 지식협력의 목표 및 성과와 한계, 지식협력의 유형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유엔의 주요 기관과 국제금융기관, 개별국가의 지식협력에 대한 인식과 이행체계 및 거버넌스, 플랫폼 등 지식협력 사업 수행을 위한 접근 방식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지식협력 사업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주요 기관들의 지식협력 수행사례에 비추어 우리 정부, 국내NGO, 국제기구, 국제NGO들이 기존에 수행한 대북 지식협력 사업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지식협력의 분야, 유형, 이행방식 등을 분석하고 특징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끝으로 국제사회의 논의와 사례, 기존에 추진된 대북 지식협력 사업의 현황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대북 지식협력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만, 남북 지식협력 사업에 대해 전문적인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의 시론적 연구로서 국제사회의 논의와 사례 및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추진 기본방향, 개괄적인 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데 연구를 한정하고자 한다. 국내 추진 현황을 볼 때 국내NGO들

이 주로 대북 지식협력을 수행한 주체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내 NGO의 대북 지식협력 추진 방향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지식협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 및 추세, 유엔과 국제금융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회원국 등 지식협력 사업의 사례에 대한 분석은 문헌 조사의 방법을 통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지식협력 사업의 유형과 규모, 분야 및 공여 주체에 대해서는 OECD 공여국 보고체계(Creditor Reporting System: CRS)를 활용하였다.

국제사회의 지식협력 사업 이행 사례가 방대하다는 점에서 대북 지식협력의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유엔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 유엔 산하의 지역 특화 기관으로서 유럽연합경제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UNECE)를, 국제금융기구는 세계은행을, 개별국가는 OECD 회원국 중 독일과 영국을 연구 대상 사례로 선정하였다.

FAO는 식량안보 분야에서 활발히 지식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으로 FAO의 사례 검토가 향후 식량안보 관련 대북 지식협력 사업 추진 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유엔의 사례로 선정하였다.

UNECE는 아시아를 대상으로 다양한 지식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대북 지식협력 사업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선정하였다.

개발국가로서 OECD 국가 중 독일과 영국에 대해서는 2가지 요소를 근거로 선정하였다.

첫째, 독일은 지식협력 사업 분야에서 최대 공여국으로서 기술협력을 개발협력의 중심에 두고 다양한 사업을 지식협력 사업의 확장으로 다루는 반면, 영국은 일반적인 공여국들과 마찬가지로 개발협력 사업들의 일부로 지식협력 사업을 다룬다는 점에서 대비된다.

둘째, 독일은 독일국제협력공사(GIZ)라는 지식협력 전담 기관을 별도로 두고 있는 반면 영국은 별도의 전담 기관이 없다는 점에서 대비된다.

국제사회 및 국내의 대북 지식협력 사업의 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문헌 조사와 인터뷰, 심층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활용하였다.

먼저 국제사회의 대북 지식협력 사업 추진 현황은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이하 북민협)의 『대북지원 20년 백서』, 우리민족서로돕기 운동,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월드비전의 기록 등 문헌 조사와 인터뷰를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국내의 대북 지식협력 사업의 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문헌조사, 관계자 인터뷰, 심층 설문조사를 모두 활용하였다. 현장에 기반하여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심층 설문조사는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에 위탁하여 8월 10일부터 31일까지 15개 소속 단체를 대상으로 서울에서 실시하였다.²⁾ 〈부록〉에서 보듯이 심층 설문은 대북 지식협력 추진 현황, 대북 지식협력 추진 방향에 대한 견해의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2) 일부 단체들은 자체의 사유로 인해 설문에 참여하지 못하였음을 밝혀둔다.

〈표 1-1〉 심층 설문조사 대상 단체

(가나다순)

- 거래의 숲
- 경남통일농업협력회
- 국제푸른나무
- 굿피플인터내셔널
- 기아대책
- 나이스피플
- 샘복지재단
- 어린이어깨동무
-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 월드비전
- 전남남북평화교류센터
- 지구촌농업협력 및 식량나누기운동
- 통일농수산사업단
- 하나누리

출처: 설문 조사 대상 기관을 정리.

제2장에서는 대북 지식협력 방안 모색을 위해 지식협력의 개념과 국제사회의 논의 및 유엔과 개발협력 전문기관들의 지식협력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례는 앞서 언급한 FAO, UNECE, 세계은행, 독일과 영국이다.

제3장에서는 국제기구와 국제NGO 및 기관의 대북 지식협력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국제기구는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UNDP),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Pacific: UNESCAP)를, 국제NGO 및 기관은 한스자이델재단, 아시아재단, 조선익스체인지, 브리티시 컬럼비아대학교(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이하 UBC)를 사례 조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제4장에서는 우리 정부와 국내NGO 및 기관의 대북 지식협력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위에서 언급한 15개 단체와 문헌 조사를

통한 단체의 추가, 특수 사례로 평양과기대를 사례조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제5장에서는 국제사회의 지식협력 추진방식 및 유형, 기존 대북 지식협력에 대한 평가, 북한의 입장 등 정책환경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향후 대북 지식협력 추진 기본방향, 추진 방향 및 플랫폼, 민간단체 대북 지식협력 추진 방향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지식협력 사업: 논의와 사례



1. 지식협력 사업의 이해

가. 개념

지식협력 사업이란 한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지식을 이전하는 다양한 활동을 의미한다.³⁾ 지식협력 사업은 수원국의 정책 및 제도개선, 그리고 이와 관련된 종사자들의 역량개발 등을 목표로하며, 최종적으로 수원국의 사회, 경제적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의미한다.⁴⁾ 지난 반세기 동안 해외원조(foreign aid)는 물질 자원의 일방적인 이동을 넘어 다양한 자원의 다방향적 이동을 포함하는 개발협력의 개념으로 확장되었고, 그 과정에서 지식의 이동 즉, 지식 협력은 개발협력의 한 형태로 소개되어왔다.

한편 지식협력 사업에서 지식이란 과학적 그리고 기술적 정보로서 특정 국가 혹은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들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지식의 종류는 본질적으로 광범위하다.⁵⁾ 다만, 지식의 종류는 역사적으로 선진국들의 개발 의제와 연관하여 구획되어왔으며, 거버넌스(Governance), 재정(finance), 관리(management)에 대한 지식이 그 예가 될 수 있다.⁶⁾ 이러한 지식은 서구의 경영학과 정치학의 영역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따라서 지식협력 행위

3) Clark C. Gibson, Barak D. Hoffman, and Ryan S. Jablonski, "Did Aid Promote Democracy in Africa? The Role of Technical Assistance in Africa's Transitions," *World Development*, vol. 68 (2014), p. 326.

4) Marcus Cox and Gemma Norrington-Davies, *Technical assistance: New thinking on an old problem* (Open Policy Foundation, 2019), <<https://agulhas.co.uk/app/uploads/2019/02/OSF-Landscaping-Study-on-TA-final-version-2.pdf>> (Accessed April 8, 2021).

5)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Report 1998/99: Knowledge for Development* (Washington DC: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UNESCO, *Declaration on Science and the Use of Scientific Knowledge* (World Conference on Science Budapest, 1999).

6) Susanne Koch and Peter Weingart, *The Delusion of Knowledge Transfer* (Cape Town: African Minds, 2016), p. 14.

는 서구에서부터 시작되는 방향성을 가진다.⁷⁾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ICT) 및 기후 변화 등과 관련한 지식이 새로운 개발 의제와 연계되어 지식협력 사업의 주요 ‘지식’으로 다루어지고 있다.⁸⁾

국제사회에서 수행되어 온 지식협력 사업은 다양한 용어로 소개되어왔다. 먼저 가장 오랜 기간 사용되어온 용어는 기술지원이다. 기술지원은 지식기반의 지원으로 수원국의 정책과 제도 마련 및 해당 정책과 제도의 구현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원국 정부에 제공하는 원조를 의미한다.⁹⁾ 다음으로 기술협력은 기술 원조와 유사한 개념으로서 공여국과 수원국의 동등한 파트너십을 강조하기 위하여 비교적 최근에 도입된 용어이다. OECD에서는 기술지원과 기술협력을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다.¹⁰⁾ 한편 역량강화 사업(capacity building projects, 혹은 역량개발 사업)은 1990년대부터 대중화된 용어로 기술개발 및 기술협력의 자체적 목표가 강조된 용어이다. 해당 개념은 개발 실무자들이 ‘다른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만이 아니라 그 자체 목표로서 역량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대중화되었다.¹¹⁾ 마지막으로 경험공유 사업(experience sharing projects)은 가장 최근에 소개된 용어이다. 국제사회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파트너

7) *Ibid.*

8) Anna-Katharina Hornidge, “Knowledge’ in development discourse: A critical review,” Hornidge and Antweiler (eds), *Environmental Uncertainty and Local Knowledge. South East Asia as a Laboratory of Global Ecological Change* (Bielefeld: Transcript, 2012), pp. 21~53.

9) Marcus Cox and Gemma Norrington-Davies, *Technical assistance: New thinking on an old problem*, p. 2.

10) OECD CRS, “DAC Glossary of Key Terms and Concepts,” <<https://www.oecd.org/dac/financing-sustainable-development/development-finance-data/dac-glossary.htm#TC>> (Accessed April 9, 2021). Technical co-operation (also referred to as technical assistance) is the provision of know-how in the form of personnel, training, research and associated costs.

11) Marcus Cox and Gemma Norrington-Davies, *Technical assistance: New thinking on an old problem*, p. 4, <<https://agulhas.co.uk/app/uploads/2019/02/OSF-Landscaping-Study-on-TA-final-version-2.pdf>> (Accessed April 8, 2021).

십을 논의하면서 개도국 간 협력의 한 형태로 남남협력 사업을 소개하고 있다. 여기서 남남협력 사업의 구체적인 예로서 경험공유 사업이 다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일정한 수준의 발전을 달성한 특정 개도국이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다른 개도국에게 경험지식을 제공 하는 역량 강화의 방식 중 하나를 의미한다.¹²⁾

전술된 용어들은 각기 다른 강조점을 표현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지식’을 기반으로 한 ‘협력’사업을 의미한다. 여기서 지식이란 기술의 상위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협력은 지원보다 확장된 범주의 개념으로 수용할 수 있는바, 본 연구에서는 기술지원, 기술협력, 역량강화 사업, 경험공유 사업을 모두 ‘지식협력 사업’으로 통칭하고자 한다.

나. 유형

지식협력 사업의 유형은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지식협력 사업은 사업의 목적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¹³⁾ 첫째, 공여국들은 수원국에서 수행하는 개발협력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전문가들을 파견하여 수원국과의 지식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데, 이와 관련한 활동을 지식협력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파견된 컨설턴트 및 자문 담당자는 자신이 담당하게 된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을 직접 관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업과 관련하여 예산 수립과 지출 및 인력에 대한 많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게 되는데, 그 결과 해당 유형의 지식협력은 직접적으

12) United Nations Office for South-South Cooperation (UNOSSC), <<https://sdgs.un.org/un-system-sdg-implementation/united-nations-office-south-south-cooperation-unossc-24512>> (Accessed April 8, 2021).

13) Clark C. Gibson, Barak D. Hoffman, and Ryan S. Jablonski, “Did Aid Promote Democracy in Africa? The Role of Technical Assistance in Africa’s Transitions,” pp. 323~335.

로 기술 이전에 기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원의 불법적인 이전을 통제하는 것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¹⁴⁾ 이러한 지식협력 활동은 부패한 리더가 자신의 후원 네트워크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의 크기를 줄여 최종적으로 수원국의 정치, 경제적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받는다.¹⁵⁾

둘째, 수원국의 제도개선을 목적으로 공여국이 다양한 지식을 전수하는 것이 지식협력의 두 번째 유형이다. 기존의 규칙이 비효율적이거나 필수적인 항목이 누락되었다는 공여국의 평가를 바탕으로 사업이 시작된다. 예컨대 공여국들은 수원국의 예산 지출에 대한 모니터링과 회계 처리에서의 관료적 절차를 개선하고자 한다. 자원의 활용을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¹⁶⁾ 또한 제도개선은 유관기관들이 고려해야 할 공동의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다른 원조 사업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확장성을 가진다는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다.¹⁷⁾

목적에 따라 구분되는 지식협력 사업의 마지막 유형은 수원국의 공무원 등에 대한 개인 역량의 강화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수원국 주민들의 역량강화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뿐 아니라 전술된 두 가지 유형, 즉 개발협력 사업의 효과 개선과 수원국의 제도개선을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원국 공무원을 교육하는 활동이 여기에 속할 수 있다. 마지막 유형의 지식협력 사업은 개발에 필요한 과학적 그리고 기술적 정보를 객관적으로 이전하는 데 활용될 수 있으나, 수원국의 리더가 자신의 후원 네트워크에 제공하는 해외

14) *Ibid.*, p. 326.

15) *Ibid.*

16) *Ibid.*

17) *Ibid.*

여행 혹은 지식축적의 기회로 악용할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¹⁸⁾

한편 OECD CRS에서 구분하는 원조의 유형을 통해 지식협력 사업의 종류를 살펴볼 수 있다. 다양한 유형 중 지식협력 사업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으로 전문가와 기술지원을 위한 원조와 연수 및 장학금 제공을 위한 원조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¹⁹⁾ 여기서 전문가와 기술 지원을 위한 원조는 전문가 파견 및 연구의 노하우 제공을 의미한다. 노하우 제공을 위해서는 컨설턴트, 교사, 학자, 연구자, 자원봉사자 등이 수원국에 파견되며, 이를 위한 공공 및 민간단체가 자금을 공여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한편 연수 및 장학금 제공을 위한 원조는 공여국에서 수원국 국적의 학생들에게 장학금 및 기타 비용을 지급하는 형태의 원조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지식협력 사업은 사업 수행의 채널을 기준으로 공공기관을 통한 사업, 비정부기구 혹은 교육기관 등을 경유한 사업, 공공과 민간 간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사업, 국제기구를 경유한 사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²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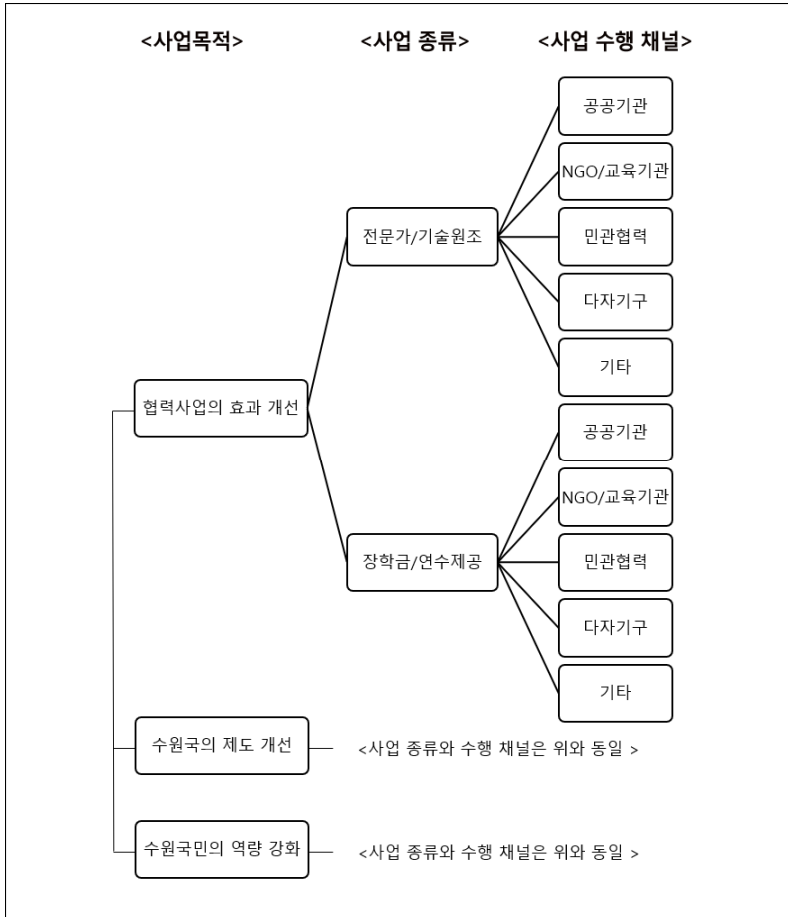
위의 유형 구분을 종합하면 <그림 II-1>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지식협력 사업의 유형이 도출된다.

18) *Ibid.*

19) OECD CRS, <<https://www.oecd.org/dac/financing-sustainable-development/development-finance-standards/type-aid.htm>> (Accessed April 9, 2021) 참고.

20) *Ibid.*

<그림 II-1> 지식협력 사업의 유형 구분



주: 사업 수행 채널은 제공자를 기준으로 함.

출처: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정리.

다. 경과 및 현황

해외원조가 대외정책의 수단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1940년대 후반부터 선진국의 지식협력은 개도국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되어왔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유엔은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위한

사회 경제적 발전의 도모와 그들의 삶의 질 향상의 필요성을 선언하였는데,²¹⁾ 당시 최대 공여국이었던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지식협력의 확대를 통해 전 세계의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²²⁾ 이후 대외원조에서 지식협력에 대한 범주와 방식은 다양하게 진화, 그리고 확대되어왔다.

1970년대 지식협력 사업은 새로운 독립국가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당시 대다수 사업은 공여국으로부터 전문가들을 데려와 수원국에서 함께 일하도록 하며, 수원국 내 인력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형식 혹은 수원국 내 특정 개인을 공여국으로 보내 그들의 개인 역량을 강화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²³⁾ 즉 개인의 역량 강화를 주된 목적으로 삼고 있었다. 이후 1980년대 지식협력 사업은 단순히 개인의 기술 향상이 아닌 광범위한 조직 혹은 기관의 역량개발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²⁴⁾ 조직을 개편하거나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는 등의 사업이 주를 이루었다. 예를 들어, 정책 입안 및 분석을 담당하는 기관 혹은 재화 생산 및 서비스 제공의 효율 증대를 위한 조직 등의 인력과 정보 및 재원을 지원하는 형태이다.²⁵⁾

21) United Nations,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nd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1945),” <<http://www.un.org/en/sections/un-charter/un-charter-fulltext/index.html>> (Accessed April 8,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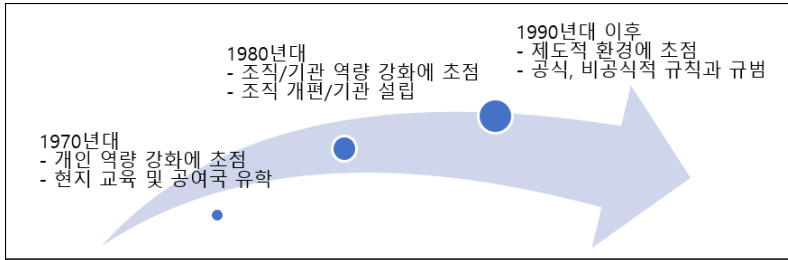
22) “...We must embark on a bold new program for making the benefits of our scientific advances and industrial progress available for the improvement and growth of underdeveloped areas. More than half the people of the world are living in conditions approaching misery...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humanity possesses the knowledge and skill to relieve the suffering of these people...” Truman, HS, “Inaugural address, Washington DC, (1949),” <https://www.trumanlibrary.org/whistlestop/50yr_archive/inagural20jan1949.htm> (Accessed April 9, 2021).

23) Marcus Cox and Gemma Norrington-Davies, *Technical assistance: New thinking on an old problem*, pp. 4~7.

24) *Ibid.*

25) *Ibid.*

<그림 II-2> 지식협력 사업의 시기별 특징과 내용 변화



출처: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1990년대 이후부터 지식협력 사업은 개인과 기관 등이 놓인 제도적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한다. 미시적인 측면에서 특정 조직의 인센티브 구조 개편부터 거시적인 차원에서 주민들의 법/서비스 접근성 개선까지 다양한 범주의 사업을 포함한다.²⁶⁾ 특히 최근 지식협력 사업은 제도적 측면을 강조하는데, 여기서 제도란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관계를 구성하는 공식 그리고 비공식적 규칙과 규범 등을 의미하는바,²⁷⁾ 지식협력 사업의 범주가 크게 확장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시기별로 지식협력 사업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현재까지 그 변화의 방향성은 ‘사업 대상의 다양성’과 ‘이슈의 포괄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초기 지식협력 사업은 ‘행위자’의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시기가 지남에 따라 행위자가 속해있는 ‘조직’의 역량 강화에 집중하였다. 이후 지식협력 사업은 행위자와 행위자가 속해있는 조직의 역량을 결정하는 ‘제도’의 역량 강화로 그 관심을 확장하여 다양한 대상을 포함하게 되었다. 한편 최근 지식협력 사업

26) Sheri Berman, “Ideational theorizing in the social sciences since Policy, paradigms, social learning and the state,” *Governance*, vol. 26, no. 2 (2013), pp. 217~237.

27) *Ibid.*

이슈는 특정 범주로 제한되지 않으며, 전지구적 발전을 위한 협력사업의 전반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어디부터 혹은 어디까지가 지식협력 사업인가로 범주화하거나 규정하기보다는 최종적인 개발 혹은 발전의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칭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가장 진화된 형태의 지식공유사업은 다양한 행위자와 행위조직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여러 대상을 포함하는 동시에 전지구적 발전의 아젠다를 대상으로 추진되어 이슈의 포괄성을 가지는 형태로 제안될 수 있다.

최근 지식협력 사업에서 사업 대상의 다양성과 이슈의 포괄성을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서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지식협력 사업 사례인 ‘유엔 기후변화 학습 파트너십’(UN Climate Change Learning Partnership: 이하 UN CC:Learn)를 살펴볼 수 있다.²⁸⁾ UN CC: Learn은 기후변화라는 전 지구적 이슈에 대응하여 전 세계 모든 개인의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며, 동시에 개별 국가, 국가들이 포함된 특정 지역에 모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식 콘텐츠를 제공하는 파트너십 플랫폼이다. 즉, UN CC:Learn은 전 세계 모든 행위자를 대상으로 하며, 전 지구적 차원의 아젠다를 다루는 지식협력 사업의 예라고 할 수 있다. 본 사업은 2009년 기후변화 정상회담에서 시작되었는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파일럿 단계 동안 도미니카 공화국, 인도네시아, 우간다 등 5개국에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후 2017년까지 에티오피아, 가나 등이 추가되어 11개국으로 해당 사업을 확장하면서 새로운 지식공유 콘텐츠를 개발하고 온라인 지식협력 플랫폼을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더불어 지역 단위 사업으로는 중앙아메리카 통합시스템과 서아프리카 전용 허브를 통한 기후변화 학습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업 등이 있다. 현재 UN

28) 이하의 내용은 다음의 홈페이지 내용을 요약함. UN CC:learn, <<https://www.uncclearn.org/>> (Accessed August 15, 2021).

CC:Learn은 양자 간 또는 지역 프로그램을 통해 30개국과 협력하며,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적응 그리고 대응하기 위한 지식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플랫폼은 구체적인 지식협력 사업을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함으로써 과학기술의 측면에서 전 지구적 개발역량 강화를 촉진한다. 뿐만 아니라 UN CC:Learn은 파트너십 플랫폼으로 기후 관련 국제기구와 더불어 UNDP, 유엔공업개발기구(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UNIDO), WTO, 세계은행 등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주도하는 조직과 협업함으로써 일반적인 개발협력과 지식공유사업 간의 코디네이터로서 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한편 지식협력 사업으로 수원국에 공여된 원조의 규모는 사업 범주의 포괄성과 기관별 데이터의 비일관성 등을 이유로 정확한 측정이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조 공여액 중 지식협력 사업을 활용해 공여된 원조가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설명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²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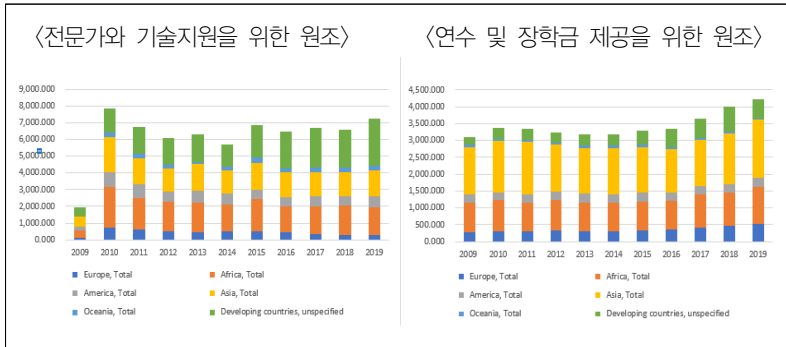
최근 공여 규모의 특징과 변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본 장에서는 비교적 일관된 기준으로 통계를 축적한 OECD의 자료를 활용하여 지식협력 사업의 활동을 살펴본다. 분석에는 원조의 다양한 유형 중 전문가와 기술지원을 위한 원조(experts and other technical assistance)와 연수 및 장학금 제공을 위한 원조(scholarships and student costs in donor countries) 유형만을 포함하며, 2009년부터 2019년까지의 공여가 분석의 대상이 된다.³⁰⁾

29) Marcus Cox and Gemma Norrington-Davies, *Technical assistance: New thinking on an old problem*, p. 3.

30) OECD CRS는 전문가와 기술지원을 위한 원조에 대하여 2009년부터 자료를 제공하며, 연구 및 장학금 제공을 위한 원조에 대하여 2006년부터 자료 제공함. 따라서 두 유형의 합은 2009년부터 수집 가능함.

〈그림 II-3〉 지식협력 사업의 수원 지역

(단위: 백만 달러)



출처: OECD, “Creditor Reporting System.”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 (Accessed April 9, 2021)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국제사회의 공적 공여의 총규모는 약 18조 달러이며, 이 중 전문가와 기술지원 그리고 연구 및 장학금 제공은 각각 685억 달러와 380억 달러 수준이다.³¹⁾ 전문가와 기술지원을 위한 원조의 규모는 연평균 60억 달러 내외이며 증감의 폭은 작지만, 매년 불규칙한 증감 추이를 보인다. 한편 연구 및 장학금 제공을 위한 원조 규모는 최근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2009년 31억 달러가 2019년 42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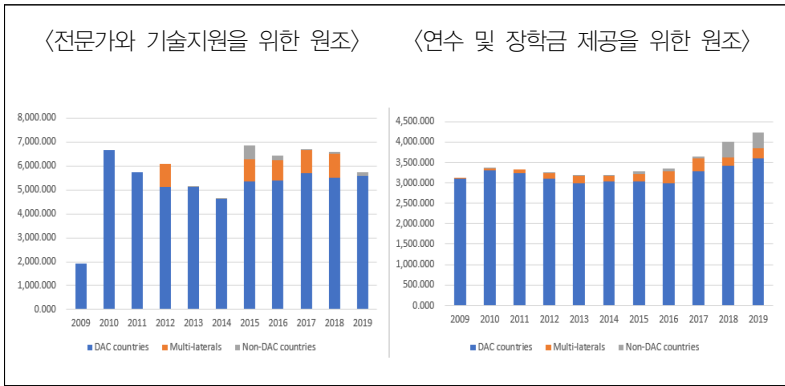
먼저 수원 대상을 기준으로 지식협력 사업의 규모의 특징을 살펴 보면 전문가와 기술지원을 위한 원조는 아프리카에 대한 공여 비중이 가장 높은 편이고, 아시아에 대한 지원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해당 지역에 대한 규모의 차이는 크지 않다. 반면 연구 및 장학금 제공을 위한 원조 중 약 50%의 원조가 아시아 국가

31) 전체 규모 대비 해당 항목들의 비중은 낮는데, 이는 각 회원국들이 제공한 자료 중 전문가와 기술지원을 위한 원조와 연구 및 장학금 제공을 위한 원조만을 선정하여 규모를 산정하였기 때문임. 실제로 다양한 원조 사업에 포함되어있는 지식협력 사업의 관련 예산은 연구자가 작위적으로 추출할 수 없는바, 분석에 포함할 수 없음을 밝힘.

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다음으로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와 유럽에 대한 원조가 일정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요컨대 전문가와 기술지원을 위한 원조는 주로 아프리카 지역과 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나, 연구 및 장학금 지원은 상대적으로 아시아에 대한 지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특징이 발견된다.

〈그림 II-4〉 지식협력 사업의 공여체

(단위: 백만 달러)



출처: OECD, “Creditor Reporting System,”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 (Accessed April 9, 2021)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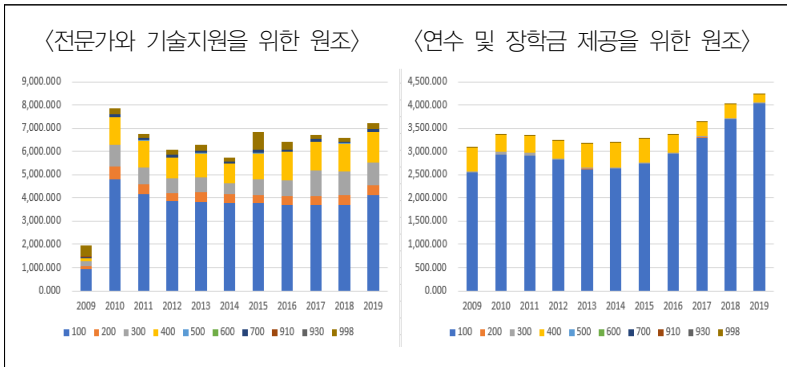
다음으로 지식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공여 집단을 살펴보면, 전문가와 기술지원을 위한 원조와 연구 및 장학금 제공을 위한 원조 모두 대부분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회원국들로부터의 양자 공여의 형태를 띤다. 다만 전문가와 기술지원을 위한 원조는 연구 및 장학금 제공을 위한 원조보다 상대적으로 다자 공여가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최근 DAC 회원국이 아닌 국가들의 연구 및 장학금 제공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식협력 사업은 공여 분야에 대하여 다음의 특징을 가진다. 먼저 전문가와 기술지원을 위한 원조는 대부분 물품제공 및

프로그램 원조 분야에 대한 지식협력 사업이었으며, 그 외 다부문과 경제인프라 분야에 대한 지식협력 사업도 발견된다. 반면 연구 및 장학금 제공을 위한 원조는 80% 이상이 물품제공 및 프로그램 원조에 대한 지원으로 확인된다. 최근 해당 비중은 더욱 높아진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림 II-5〉 지식협력 사업의 분야

(단위: 백만 달러)



주: 100은 사회인프라, 200은 경제인프라, 300은 생산영역, 400은 다부문, 500은 물품제공 및 프로그램 원조, 700은 인도주의 원조 910은 행정비용, 998은 미분류를 의미함.

출처: OECD, "Creditor Reporting System,"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 (Accessed April 9, 2021)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

비교적 일관된 기준으로 통계를 축적한 OECD의 자료가 다양한 현황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전술하였듯이 여전히 지식협력 사업의 범주를 구획하는 것과 통계를 구축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상태임을 고려하면, 해당 자료가 제공하는 정보는 일부분일 것임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2. 지식협력 사업에 대한 논의

가. 지식협력 사업이 경제발전에 미친 영향

대외원조에서 지식협력 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는 “한 국가의 경제성장을 위해서 지식은 필수적이며, 선진국으로부터의 지식 자원 이전이 개도국의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³²⁾ 이러한 전제 하에서 지식협력 사업은 대규모 투자와 인프라 원조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어왔으며,³³⁾ 주요 공여국들은 개도국의 경제개발의 과제 해결을 위한 기술 제공에 큰 관심을 가지고 원조를 공여해왔다.³⁴⁾

한편 지식협력 사업이 수원국에게 미친 경제적 효과를 평가하는 것은 난해한 작업이다. 지식협력 사업은 사업 범주의 모호성으로 첫째, 평가 대상을 선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둘째, 협력으로 이전된 지식 자원이 실제 경제발전으로 연계되는 것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를 고려하여 대부분의 평가보고서들은 지식협력 사업의 사업별 목표 달성의 여부 및 수준에 집중한다. 일부 연구들만이 해당 사업이 수원국 경제 전반에 미친 영향을 논의한다. 본 장에서도 제한적이거나 해당 논의를 대상으로 지식협력 사업이 경제발전에 미친 영향에 대한 문헌 검토를 실시한다.

먼저 토니 랜드(Tony Land)에 따르면, 베트남에 대한 기술 원조

32)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uncil, “Science in underdeveloped countries: World plan of action for the applic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to development,” *Minerva*, vol. 9, no. 1 (1971), p. 102.

33) ActonAid, *Real Aid: Making Technical Assistance work for the poor* (ActonAid, 2006), p. 26, <https://ocw.tudelft.nl/wp-content/uploads/Real_Aid_2_small_pdf_version_for_emailing_572006_143514.pdf> (Accessed April 10, 2021).

34) Susanne Koch and Peter Weingart, *The Delusion of Knowledge Transfer*, p. 10.

의 경제적 효과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왜냐하면 베트남은 강력한 리더십과 개발 아젠다의 소유권을 모두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술 원조로 제공되는 다양한 지식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의 행정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³⁵⁾ 한편 모잠비크는 높은 원조 의존성에도 불구하고 베트남과 유사하게 강력한 개발 아젠다의 소유권을 주장해온 바 있다.³⁶⁾ 그 결과 많은 개발 파트너들이 현지 정보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으며, 수원국 주민의 수요에 기반한 기술 원조가 제공될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³⁷⁾ 그러나 공여국으로부터 이전된 지식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공공행정의 역량이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술 원조가 국가 수준의 발전을 도모하기에는 제한적이었다고 분석된다.³⁸⁾

둘째, 마틴 갓프리(Martin Godfrey)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와 같이 원조 의존성이 높은 수원국에서는 대부분의 지식협력 사업들이 공여국에 의해 발의된 것들이다.³⁹⁾ 따라서 그 세부 내용, 즉 어느 분야에 역량개발이 필요한지 인지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구상 및 실행하는 것 등이 공여국에 의해 결정되어 수원국 내 주민들의 수요가 반영되기 어렵다. 더불어 공여국들로부터 제안된 사항들을 추진하기 위한 수원국의 재정은 항상 부족한 상황이라는 점도 지식협력 사업의 효과를 제한한다. 따라서 공여국은 역량강화의 과정뿐 아니라 그 결과가 적용되는 실행의 영역까지 중장기적으로 대규모 재정적 지

35) Tony Land, "Joint Evaluation Study of Provision of Technical Assistance Personnel What can we learn from promising experiences? European Center for Development Policy," *Management Discussion Paper*, No. 78 (2007).

36) *Ibid.*

37) *Ibid.*

38) *Ibid.*

39) Martin Godfrey et al., "Technical Assistance and Capacity Development in an Aid-dependent Economy: The Experience of Cambodia," *World Development*, vol. 30, no. 3 (2002), pp. 355~373.

원을 보장해야 해당 지식협력 사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⁴⁰⁾ 또한 역량강화는 일관된 사업의 방향성이 전제되어야 유의미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예컨대 캄보디아의 사례에서는 사업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찾아보기 어렵다.⁴¹⁾ 그 결과 캄보디아에 대한 지식협력 사업은 원조 의존성만 확대할 뿐⁴²⁾ 실제로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제공하지는 못했다는 것이 갓프리 등의 분석이다.

셋째, 마무드 리아즈(Mahmood Reaz)는 1971년부터 2014년까지의 시계열과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방글라데시 경제 및 기타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기술 및 비기술 원조가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개도국에 대한 공여국의 기술 원조가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하지 못했다.⁴³⁾ 더욱이 방글라데시의 경우에는 국제사회가 제공하는 기술 원조가 해당 국가의 경제발전 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방글라데시의 경우, 기술 원조 분야에 대한 비밀관성이 원조 변동성을 높임으로써 경제발전 계획 추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40) *Ibid.*

41) *Ibid.*

42) Graham Harrison, *The World Bank and Africa* (The Construction of Governance States, London: Routledge, 2004), p. 88; Geske Dijkstra, "The PRSP approach and the illusion of improved aid effectiveness: Lessons from Bolivia, Honduras and Nicaragua," *Development Policy Review*, vol. 23, no. 4 (2005), p. 62; Duncan Holtom, "The challenge of consensus building: Tanzania's PRSP 1998-2001," *The Journal of Modern African Studies*, vol. 45, no. 2 (2007), pp. 233~251; John Pende, "Country ownership: The evasion of donor accountability," in Christopher Bickerton et al., *Politics Without Sovereignty: A Critique of Contemporary International Relations* (Oxon; New York: University College London Press, 2006), p. 117.

43) Mahmood Reaz, "The Effect of Technical and Non-technical Aid on the Economic Growth of Bangladesh and other Developing Countries," *Conference: 4th Summer Conference on Economic Research*, Economic Research Group (ERG) (May 2018),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328784086_The_Effect_of_Technical_and_Non-technical_Aid_on_the_Economic_Growth_of_Bangladesh_and_other_Developing_Countries> (Accessed May 8, 2021).

있을 뿐 아니라, 기술 원조 전반의 지속적인 공여 유지가 공여국에 대한 원조 의존성을 지나치게 확대하고 있다는 평가이다.⁴⁴⁾

넷째, 사이먼 에버넛(Simon Evenett)은 기관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지식협력 사업이 제한적이지만 해당 수원국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수원국 내 새롭게 생겨난 기관들이 많고, 이들 간의 불안정한 경쟁이 존재하는 상황일 경우, 전문가 파견을 활용한 컨설팅이 해당 기관들 사이의 경쟁을 촉발하여 일시적으로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⁴⁵⁾ 반면 에버넛은 개인 역량강화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자문관 파견 혹은 수원국 관료의 해외 인턴십 참여 등 특정 개인의 역량 강화는 수원국의 기관 역량 강화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궁극적으로 지식협력 사업이 수원국 경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기는 매우 어렵다고 주장한다.⁴⁶⁾

마지막으로 토도 야수유키(Todo Yasuyuki)는 인도네시아 기업에 대한 일본의 기술지원을 평가하며 지식협력 사업의 한계를 지적한 바 있다. 현지 종사자들에 대한 지식공유 프로그램이 참여 기업들의 기술 향상에 도움이 되지만 프로그램의 효과는 참가자에게만 제한되며 비참여자에게까지 파급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⁴⁷⁾ 따라서 지식협력 사업이 국가적 차원의 경제적 효과와 연계되기는 매우 어렵다고 분석한다.⁴⁸⁾

44) *Ibid.*

45) Simon Evenett, *The effectiveness of technical assistance, socio-economic development, and the absorptive capacity of competition authorities* (UN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Caribbean, 2006), pp. 21~22, <<https://repositorio.cepal.org/handle/11362/4984>> (Accessed May 8, 2021).

46) *Ibid.*

47) Todo Yasuyuki, "Impacts of Aid-Funded Technical Assistance Programs: Firm-Level Evidence from the Indonesian Foundry Industry," *Discussion papers from Research Institute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RIETI)*, (2008).

48) *Ibid.*

선행연구 검토 결과에 따르면, 지식협력 사업이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드물게 관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해당 사업이 수원국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한 사업이고, 역량강화 과정과 더불어 그 결과가 적용되는 개발 사업에까지 포괄적인 수준의 자원 이전을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수원국의 사업 이행의 역량이 충분하다면 사업 추진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나. 지식협력 사업이 사회발전에 미친 영향

지식협력 사업을 포함한 광범위한 개발협력 사업들은 개도국의 경제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데, 수원국의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당 국가의 사회 변화 및 발전이 동반되어야 한다.⁴⁹⁾ 이러한 논의의 지속과 확산은 지식협력 사업의 중요한 관심사로 다루어져 온바, 본 장에서는 지식협력 사업이 수원국의 사회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왔는가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소개한다.

먼저, 지식협력 사업이 수원국의 사회발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왔다는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바구라(Bagura)와 기본(Gibbon)은 1980년대 이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이 국제기구로부터 경제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경제적 변화뿐 아니라, 사회적 발전도 경험하였다고 주장한다.⁵⁰⁾ 예를 들어 아프리카에서 다양한 구조개혁프로그램이 여러 분야를 대상으로 이행되면서 수많은 개인은 공적영역뿐 아니라 사적영역까지 공식활동의 범주로 확대하였다. 특히 가나에서 다양한 영역

49) Yusuf Bagura and Peter Gibbon, "Adjustment, Authoritarianism and Democracy: An Introduction to Some Conceptual and Empirical Issues," Peter Gibbon, Yusuf Bangura, and Arve Ofstad eds. *Authoritarianism Democracy and Adjustment* (Uppsala: The Scandinavian Institute of African Studies, 1992), p. 2.

50) *Ibid.*, pp. 18~19.

에서의 공식활동의 증가는 많은 사람에게 정보가 전달되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 정보를 기반으로 경제시스템이 운영되는, 즉 기존의 토착적인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탈피하는 사회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으며, 이것이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된다.⁵¹⁾

다음으로 거버넌스와 개발 센터의 2005년 보고서와 세계은행의 1995년 보고서가 소개하고 있는 사례로 세계은행이 케냐에 제공한 지식협력 사업 사례가 있다. 케냐의 금융분야에 대한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함께 공여된 지식협력 사업의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수많은 금융전문가가 현지에 파견되어 사전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국제기구 담당관들은 현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종류의 부정부패를 발견하였다.⁵²⁾ 부정부패 사례와 연관된 관리자들을 업무에서 배제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금융 거버넌스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었을 뿐 아니라, 현지인들로 하여금 토착적인 형태로 남아있었던 업무처리 방식의 비효율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경험하도록 하였다.⁵³⁾ 특히 해당 지식협력 사업은 토착 세력들의 부정부패로 인한 거래의 비효율성의 문제를 파악하는 계기를 제공하였으며, 그 결과 케냐의 금융분야 종사자들은 투명한 거래의 필요성을 인식, 전반적인 사회적 인식과 인지의 변화를 도모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⁵⁴⁾

유사하게 김슨(Clark C. Gibson) 등에 의하면 공여된 원조 자원들이 수원국의 경제발전이 아닌, 일부 기득권 세력의 자산 증식에 기여

51) *Ibid.*

52) Centre for Governance and Development (CGD), *New law: Political parties to be funded by the state* (Nairobi: Centre for Governance and Development, 2005); World Bank, *Kenya - Financial technical assistance projects* (Washington, DC: World Bank, 1995).

53) CGD, *Ibid.*; World Bank, *Ibid.*

54) CGD, *Ibid.*; World Bank, *Ibid.*

할 수 있는데, 지식협력 사업의 추진은 이러한 부정적인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⁵⁵⁾ 왜냐하면, 지식협력 사업은 일반 공여 사업과 달리 모니터링 등의 과정이 사업의 이행 과정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자원의 전달에 있어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⁵⁶⁾

한편 지식협력 사업이 수원국의 사회발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하인즈 그레이즌(Heinz Greijn) 등에 따르면, 공여국이 지식협력 사업의 목적에 수원국의 사회발전을 포함하는 것은 그 자체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 결과로써 수원국의 사회발전을 기대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불가능하다.⁵⁷⁾ 공여국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지식협력 사업을 성공적으로 종료하는 것인데,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서는 부정부패로부터 이익을 추구해온 토착 세력들의 지지가 필수적이다. 더구나 공여국과 수원국 사이의 비대칭 관계와 편향된 인센티브가 공여자로 하여금 사업의 시작부터 내생적 정치 프로세스의 ‘정직한 브로커’로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 결국 공여국의 사업 담당자들은 제도 마련을 위한 진정한 역량 강화보다는 사업의 성공적인 종료를 위한 적당한 수준의 역량 강화를 실행하게 된다. 따라서 지식협력 사업을 통한 수원국의 사회발전은 본질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⁵⁸⁾

55) Clark C. Gibson, Barak D. Hoffman, and Ryan S. Jablonski, “Did Aid Promote Democracy in Africa? The Role of Technical Assistance in Africa’s Transitions,” pp. 323~335.

56) *Ibid.*

57) Heinz Greijn et al, eds., *Capacity Development Beyond Aid* (SNV Netherlands Development Organisation, European Centre for Development Policy Management, 2015), pp. 22~23.

58) *Ibid.*

다음으로 윌리엄 이스터리(William Easterly)에 따르면, 기술자들에 대한 지식협력 사업은 일반인들에게 더 나은 사회적 환경을 제공하기보다는 오히려 퇴보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⁵⁹⁾ 개도국의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해당 국가의 빈곤을 해결해줄 수 있다는 전제는 가난의 원인이 기술 부족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인데, 현실적으로 오히려 정보와 자원을 독점하고 있는 토착 세력들의 부정부패가 경제난의 원인인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 등 동아시아 발전국가(developmental states)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기술 자문의 확대는 해당 국가가 직면한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해줄 수는 하였지만, 독점적인 세력들만 제한적으로 자원을 확보하게 되어 상대적으로 일반인들에게 제공되는 사회적 편익의 증대를 보장하지는 못했다는 것이 이스터리의 핵심 주장이다.

한편 수잔 코흐(Susanne Koch)가 서술한 남아프리카와 탄자니아에서 보건, 교육, 환경 분야를 대상으로 시행된 6건의 심층 사례를 살펴보면, 외국 전문가를 통한 지식 이전은 현지 특성이 거의 반영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냈다. 이러한 경우 외부 조언이 수원국 정부를 불안한 정치 상황으로 내몰 수 있으며, 그 결과 해당 수원국의 사회적 혼란은 가중될 수 있다.⁶⁰⁾

요컨대 지식협력 사업이 개발도상국의 사회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으나 제한적이다. 해당 지식협력 사업이 현지 상황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는 동시에 기존 토착 세력의 정보와 자원을 활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만 그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59) William Easterly, *The Tyranny of Experts: Economists, Dictators, and the Forgotten Rights of the Poor* (New York: Basic Books, 2013).

60) Susanne Koch, "The impact of foreign experts on policymaking in young democracies – a comparative analysis of South Africa and Tanzania," Ph.D. Dissertation, Universität Bielefeld, 2015.

다. 특징 및 시사점

지식협력 사업은 수원국의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발전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인식되어왔으나, 실제 지식협력 사업의 추진 결과는 다양한 양상으로 관찰되어왔다. 전술한 선행연구들의 논의 결과에 따르면, 지식협력 사업의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효과는 많은 경우 제한적으로 발현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지구적 발전을 위한 지식의 중요성은 여전히 유효하며, 따라서 지식협력 사업 자체가 가지는 중요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다만 특정 조건을 염두에 둔 지식협력 사업일 경우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지식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다음의 요건들을 도출할 수 있다. 먼저 지식협력 사업이 국가 차원의 경제성장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첫째, 수원국의 필요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둘째, 지식공유 사업의 추진과 더불어 그 결과가 반영되는 현지 사업까지 재정적 지원이 연계되어야 한다. 셋째, 중장기적인 방향성을 바탕으로 지속적이며, 일관된 추진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수원국의 사업 이행 역량을 고려한 계획이 마련되어야 성공적인 추진이 가능하다.

한편 지식협력 사업이 국가 차원의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첫째, 현지 사회적 조건을 충분히 반영한 지식협력 사업이어야 한다. 정치체제나 전통제도를 고려한 사업의 추진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토착세력의 정보와 자원의 활용이 지나치게 요구되는 사업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3. 주요 기관들의 지식협력 사업 추진 사례

가. 유엔

1949년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개도국의 발전을 위한 지식 이전의 중요성을 강조한 후, 유엔은 1946년 총회의 결의 내용을 바탕으로⁶¹⁾ 당시 경제위원회(Economic Affairs Department of the United Nations)를 중심으로 기술 원조 사업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유엔의 기술협력 사업은 두 가지 업무 형태로 시작되었는데 첫째는 결의안을 바탕으로 관련 사안을 이행하는 작업이고, 둘째는 유엔 회원국과 산하 기구들의 기술 원조 프로그램 운영을 조정하는 것이었다.⁶²⁾

한편 유엔이 지식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별도의 체계를 마련해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는 지식협력 사업이 가지는 대상의 다양성과 이슈의 포괄성 때문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유엔은 일반적인 개발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⁶³⁾에서 다양한 형태의 지식협력 사업을 활용하고 있는바, 지식협력 사업의 추진 방향은 일반적인 개발협력 사업 추진 방향과 동일하게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유엔 지식협력 사업의 추진 방향을 살펴보면 첫째, 수원국 정부와 유엔 산하 기구가 함께 국가별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면 둘째, 이를 바탕으로 주요 개발과제가 선정되고 셋째, 선정된 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지식협력 사업이 도입되는 것이다.

61) UNECE, <https://unece.org/dam/operact/Technical_Cooperation/resolution58I.pdf> (Accessed June 10, 2021).

62) David Owen, "The United Nations Program of Technical Assistance,"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vol. 270 (1950), pp. 109~117.

63) 최춘흠·김영윤·최수영, 『UN 기구의 지원체계와 대북활동』 (서울: 통일연구원, 2008), p. 9.

유엔 본부 차원의 기술협력에는 United Nations University,⁶⁴⁾ United Nations Research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⁶⁵⁾ United Nations Institute for Training and Research⁶⁶⁾ 등 여러 기관들이 활용된다. 더불어 유엔 산하 기관들은 분야의 전문성, 지역의 전문성, 기타 전문성 등을 바탕으로 다양한 기술협력 사업들을 자체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특히 여러 기관에서는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을 제공하여 지식공유 사업 추진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로 전문기구와 지역기구 및 파트너십 등을 차례로 살펴본다. 먼저 유엔 산하의 전문기구로 FAO를 살펴보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 FAO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첫째, FAO는 최빈국에서 선진국까지 다양한 회원국의 주요 관심 분야인 식량안보를 다루는 기구로 비교적 활발히 지식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둘째, 본 연구가 북한과의 지식협력을 고려하여 논의를 진행하는 바, FAO의 사례 검토가 향후 식량안보 관련 대북 지식협력 사업 추진 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근거한다. FAO는 식품 및 농업과 관련된 연구와 기술 지식의 교환을 확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지식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예컨대 회원국들은 FAO에서 제공하는 일련의 지식공유 프로그램을 통해 자국의 농업 관련 연구를 진전시키게 되며, 이는 최종 상품의 생산과 연계되고, 해당 정보는 전 세계에서 이용 및 접근 가능한 형태로 다시 공유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FAO 지식협력의 기본 메커니즘이다.⁶⁷⁾

64) United Nations University, <<https://unu.edu/>> (Accessed June 10, 2021).

65) United Nations Reserch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https://www.unrird.org/>> (Accessed June 10, 2021).

66) United Nations Institute for Training and Research, <<https://unitar.org/>> (Accessed June 10, 2021).

67) FAO, "Knowledge Sharing," <<http://www.fao.org/knowledge-sharing/en/>> (Accessed June 10, 2021).

구체적으로 식품 및 농업 분야에서 과학 정보와 디지털 데이터의 접근성을 향상하며, 농업 데이터에 대한 접근 및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국제, 지역 및 국가 조직의 참여를 강화하는 지식공유 사업을 추진한다. 예를 들어, FAO는 식품 및 농업에 대한 과학적 정보와 디지털 데이터를 AGORA, AGRIS, AGROVOC, AIMS 등의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이용 가능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2021년 현재 AGORA는 건강, 농업, 환경 및 응용과학 분야에서 최대 100,000개의 주요 저널 및 서적에 대한 사용권을 무료로 제공하며, 120개 이상의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국가에 있는 9,000개 이상의 기관이 AGORA를 통한 무료 또는 저비용 온라인 액세스의 혜택을 받고 있다.⁶⁸⁾ AGRIS는 최대 90개 언어로 된 출판물에 대한 1,200만 개 이상의 기록을 무료로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며 현재 150개국의 연구센터, 학술기관, 출판사, 정부기관, 개발 프로그램, 국제 및 국가 기관을 포함한 500개 이상의 단체가 AGRIS에 참여하여 지식협력을 수행하고 있다.⁶⁹⁾ 한편 AGROVOC은 38,000개 이상의 개념과 최대 40개 언어로 된 800,000개 이상의 용어를 포함한 데이터이며,⁷⁰⁾ AIMS는 정보 및

68) Access to Global Online Research in Agriculture, <<http://www.fao.org/agora>> (Accessed June 10, 2021). 2003년부터 FAO는 저소득 국가의 공공 기관에 식품 및 농업 분야의 주요 과학 저널과 도서에 대한 무료 또는 저렴한 액세스를 제공하는 지식 플랫폼인 AGORA를 운영하였다. 여기서는 대학 및 연구기관, 농업 확장 센터, 관공서 및 도서관을 포함한 기관의 직원과 학생은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저널에 액세스할 수 있다. 세계 최고의 과학 저널 출판사 대부분이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데 해당 파트너에는 15개 이상 세계 최고 수준의 기관(WHO, FAO, UNEP, WIPO, ILO, Cornell University, Yale University Libraries, STM 및 기타 기술 파트너)이 포함된다.

69) International System for Agricultural Science and Technology, <<http://www.fao.org/agris/>> (Accessed June 10, 2021). AGRIS는 농업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농업 분야의 지속가능성 증가를 도모하기 위해 농업 투자, 혁신 및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플랫폼은 최대 90개 언어로 된 출판물에 대한 1,200만 개 이상의 기록을 무료로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식품 및 농업 분야의 미발행 과학 및 기술 보고서, 논문을 포함하여 참조 도서, 저널 기사, 모노 그래프, 도서장, 데이터 세트 및 회색 문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다. 본 플랫폼은 농업 관련 과학 문헌에 대한 접근 격차를 해소하고 식량 및 농업 분야에서 정보의 흐름과 접근을 늘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데이터 관리 분야의 4,500명의 전문가가 관련 컨설팅을 제공한다.⁷¹⁾

다음으로 유엔 산하의 지역 특화 기관으로서 유럽연합경제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UNECE)의 사례를 살펴보자. 본 연구에서 UNECE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해당 기관이 기술협력 관련 정기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아시아를 대상으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어, 대북 지식협력 사업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기 때문이다. UNECE는 유엔의 5개 지역위원회 중 하나로 유럽, 북미 및 아시아의 56개 회원국을 포함한다.⁷²⁾ 해당 지역위원회에서는 기술협력을 위한 정기프로그램(Regular Program of Technical Cooperation: RPTC)을 활용하여 개도국의 제도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RPTC는 특정 국가가 지역 및 세계 경제에 통합될 수 있도록 법, 규범, 표준에 대한 전환을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궁극적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촉진하고자 한다.⁷³⁾ 2020년을 기준으로 RPTC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사업은⁷⁴⁾ UNECE의 조정하에 ESCAP에

70) AGROVOC, <<http://www.fao.org/agrovoc/>> (Accessed June 10, 2021). AGROVOC은 농업에 대한 대중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큰 Linked Open Data 집합이다. AGROVOC은 시맨틱 웹 기술을 사용하여 다국어 지식 시스템에 연결하는 등 데이터 세트 간의 연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데이터 세트는 콘텐츠 색인화 및 텍스트 마이닝을 위한 전문화 라이브러리와 디지털 라이브러리에서 널리 사용되며 FAO 및 제 3자 이해 관계자가 콘텐츠 구성을 위한 전문 리소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그 효과를 증대시킨다.

71) AIMS, <<http://aims.fao.org/>> (Accessed June 10, 2021). AIMS는 전 세계의 (농업) 정보 및 데이터 관리 전문가 4,000명으로 구성된 커뮤니티이다. 정보 및 데이터 액세스 서비스, 정보 및 데이터 관리 개방형 표준화 제공, 기술 및 방법론의 핵심 영역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및 아이디어 제안 등을 위한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공간을 제공한다. 커뮤니티 구성원은 서로 연결하여 모범사례와 프로젝트 및 이벤트를 공유할 수 있다.

72)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https://unece.org/>> (Accessed June 10, 2021).

73) UNECE Regular Programme, <<https://unece.org/regular-programme-technical-cooperation>> (Accessed June 10, 2021).

74) 이하 내용은 RPTC 연간 보고서를 참조하여 요약함. UNECE, “Regular Programme of Technical Cooperation,” <[https://undocs.org/a/74/6\(Sect.23\)](https://undocs.org/a/74/6(Sect.23))> (Accessed June 10, 2021).

의해 실행되었으며, 거시경제정책과 금융제도, 무역 및 투자제도, 교통, 환경, 에너지 등의 다양한 분야에 대하여 추진되었다. 특히 통계 시스템의 역내 통합을 위한 지식협력 사업은 다양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졌는데, 통계 입법 및 정책에 대한 조언 제공과 공식 통계의 확대 사용을 권고하는 등의 국가 이행 촉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자문 서비스, 교육 워크숍, 기술협력 프로젝트 등 다양한 전략을 통해 공여되었다. 해당 사업으로 지출된 공여 규모는 약 70만 달러이며, 이중 컨설턴트 활용에 소모된 비용이 50%를 상회한다. 동일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지출된 공여 규모는 2018년 42만 달러, 2019년 51만 달러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 유엔은 다양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지식협력 사업을 강조해오고 있다.⁷⁵⁾ 그 대표적인 예가 남남협력 및 삼각협력 등이다. 지식공유사업의 영역에서 남남협력은 한 개발도상국이 다른 개발도상국과 기술 노하우를 교류하며 역량개발의 목표를 추구하는 지식협력의 유형이다. 이것은 당면한 공통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선진국의 관행에서 도출된 함의보다 동료의 경험에서 제안된 아이디어가 더욱 유용할 수 있다는 시각을 반영한 것이다.⁷⁶⁾ 한편 삼각협력은 남남협력에 전통공여국 또는 국제기구의 참여가 추가된 유형이다.⁷⁷⁾ 구체적인 사례로 유엔의 남남협력 위원회(United Nations Office for South-South Cooperation: UNOSSC)를 소개한다. 이는 향후 대북 지식협력 사업에 있어 파트

75) United Nations Office for South-South Cooperation, "United Nations System-wide strategy on South-South and Triangular Cooper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https://www.unsouthsouth.org/wp-content/uploads/2021/04/United-Nations-system-wide-strategy-on-South-South-and-triangular-cooperation-for-sustainable-development-2020%E2%80%932024.pdf>> (Accessed June 10, 2021).

76) Marcus Cox and Gemma Norrington-Davies, *Technical assistance: New thinking on an old problem*, p. 7.

77) *Ibid.*

너십 확장 관련 유의미한 합의를 제공해줄 것이라는 판단에 기반을 둔다. UNOSSC는 남남협력 및 삼각협력의 모든 이해당사자들에게 자문 및 컨설팅을 제공하는 지식허브이다.⁷⁸⁾ 해당 기관에서는 다양한 지식공유 플랫폼을 운영 중이다. 먼저 세계 남남 개발 엑스포(Global South-South Development Expo)는 2008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Global South만을 대상으로 한 엑스포로서 남남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부 간 협의를 주선하며, 여러 행위자들이 개발의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한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는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⁷⁹⁾ 다음으로 South-South Galaxy는 UNOSSC가 제공하는 글로벌 지식공유를 위한 파트너십 중개 플랫폼이다.⁸⁰⁾ South-South Galaxy는 초기 단계에서 수원국 사용자가 자신의 개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사한 솔루션을 찾아보도록 하며, 찾지 못하게 되는 경우 해당 과제의 솔루션에 대한 컨설팅을 요청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⁸¹⁾ 다음 단계에서 South-South Galaxy 관리자는 해당 요청을 검토하고 유사한 문제를 해결한 파트너와 연결하거나 자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해당 주제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유엔 컨설턴트와 연결한다. 해당 공간에서 공여국들은 수원국 파트너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혁신적인 우수 사례를 공유할 수 있게 되며, 결과적으로 공여국과 기타 파트너들은 수원국에 의해 제안된 수요 중심 이니셔티브에 따라 지식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78) United Nations Office for South-South Cooperation, “about,” <<https://www.unsouthsouth.org/about/>> (Accessed June 10, 2021).

79) GSSD Expo, <<https://www.expo.unsouthsouth.org/about-expo/>> (Accessed June 10, 2021).

80) United Nations Office for South-South Cooperation, “South-South Galaxy,” <<https://www.unsouthsouth.org/south-south-galaxy>> (Accessed June 10, 2021).

81) United Nations Office for South-South Cooperation, “South-South Galaxy Partnership Brokering,” <<https://www.southsouth-galaxy.org/partnership/>> (Accessed June 10, 2021).

나. 세계은행

세계은행에서 기술지원은 발전을 목표로 지식과 기술이 이전되는 것을 지칭하며, 특히 세계은행은 회원국들에게 대출을 제공하면서 효과적인 자금 운용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기술 원조를 제공해왔다.⁸²⁾ 1990년대 이전까지 세계은행의 지식협력은 금융원조의 효과 개선의 측면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다. 수요자 중심의 기술지원이 아닌 공급자 중심의 단순 기술지원이 수원국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비판이었다.⁸³⁾ 이에 1992년 세계은행은 개발지식과 관련한 중심성 확보를 목표로 은행 내부의 다양한 지식과 기술자원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Department Economic Vice Presidency(DEC)를 설립하였다.⁸⁴⁾ 이후 세계은행은 전 세계적으로 개발을 위한 다양한 지식의 구축 및 보급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펴고 있다.

현재 세계은행의 지식협력 지원 분야는 크게 5가지로 구분되는 데⁸⁵⁾ 첫째, 회원국을 대상으로 특정 기술에 대한 참여와 아웃리치(outreach)에 공감할 수 있는 설명회 등을 실시하는 분야이다. 둘째, 현재 회원국이 가진 기준선을 평가 즉, 회원국 대표 및 데이터 사용자를 대상으로 특정 기술의 활용 역량을 평가하고 해당 기술을 제공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협력이다. 셋째, 회원

82) World Bank, "Technical assistance," <<http://documents.worldbank.org/curated/en/264181468156582056/Technical-assistance>> (Accessed June 10, 2021).

83) 윤미경·김종일·이재인, 『지식공유사업을 위한 개발도상국 발전계약요인 진단』 (세종: 한국개발연구원, 2020), p. 75.

84) World Bank, "about DEC," <<https://www.worldbank.org/en/about/unit/unit-dec>> (Accessed September 18, 2021).

85) 이하의 구분은 다음의 내용을 요약한 것임. World Bank, "Technical Assistance and Funding," <<http://opendatatoolkit.worldbank.org/en/technical-assistance.html>> (Accessed June 10, 2021).

국의 개방형 의제를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 전략, 기술 및 정책 모범 사례에 대한 조언과 교육을 제공하는 원조 분야가 있다. 넷째, 국제 전문가와 현지 인재를 한데 모아 서로 협력하고 동기를 부여하며 데이터를 사용하는 새롭고 가치 있는 방법을 배우도록 주선하는 지식 협력이다. 마지막으로 예산 데이터의 처리 및 사용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오픈 데이터의 효과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시민사회 교육을 제공하는 협력 사업을 실시한다.

오픈 데이터 구축을 위한 기술협력 사업(2012-2017)은 세계은행의 대표적인 지식협력 사업이다.⁸⁶⁾ 2012년 세계은행은 공개 데이터 구축을 통해 저소득 및 중산층 국가들의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후 5년 동안 해당 사업을 통해 50개 이상의 국가에 기술지원과 금융지원을 제공하였으며, Open Data for Development Partnership을 설립하였다. 수천 개의 데이터 세트가 모든 사람에게 무료 디지털 공공 상품으로 제공되었으며, 수백 개의 데이터 기반 제품과 서비스가 개발되어 공급되었다. 그 결과, 정보와 디지털 데이터에 대한 보다 공정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보다 책임감 있고 효율적인 공공행정을 이끌어 결과적으로 회원국들의 경제성장에 이바지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본 사업에 투입된 자금은 약 5,000만 달러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자금이 활용된 프로젝트의 70% 이상이 회원국들의 개방형 데이터 구축을 위한 기술지원에 활용되었으며, 디지털 인프라 개발, 스마트 전송, 전자정부 및 디지털화, 공공부문 등 광범위한 개발 목표에 대한 보편 요소로서 해당 사업이 포함되는 등 다양한 사업들이 연계되어 추진되었다.

86) 이하의 서술은 다음의 내용을 요약한 것임. World Bank, "World Bank Support for Open Data 2012-2017," <<https://openknowledge.worldbank.org/handle/10986/28616>> (Accessed June 10, 2021).

예를 들어, 몽골에서 열린 데이터 프로젝트는 공공 서비스의 접근성, 투명성,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보통신 기술을 사용하고자 하는 SMART 정부 프로젝트의 기초 사업으로 추진되었다.⁸⁷⁾ 세계은행은 현재 몽골의 오픈 데이터 작업을 통해 Open Data Readiness Assessment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데이터 표준 프레임워크와 오픈 데이터 플랫폼(<http://data.ulaanbaatar.mn>)의 개발을 지원하였다. 20개 이상의 정부 기관이 관련 자료를 해당 플랫폼에 보고하였으며, 향후 이러한 정보 공유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몽골의 사례는 세계은행의 몽골에 대한 지식협력 사례인 동시에, 수원국 내부 구성원들 간의 지식공유의 사례로 분석가능하다. 한편 키르기스스탄에서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공화국 행정부와 지방 정부에서의 전자지배구조 도입에 관한 국가 프로그램 시행의 차원에서 세계은행의 오픈 데이터 활동이 추진되었다.⁸⁸⁾ 2015년 3월, 키르기스스탄에는 Open Data Readiness Assessment를 수행하는 Open Data Working Group이 구성되었다. 키르기스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개발자 회의 2015년 5월 오픈 데이터 포털(<http://www.opendata.kg>)을 설립했으며, 여러 정부 기관과 비정부 기관이 76개의 데이터 세트를 이 포털에 게시하여 서로의 지식을 공유해오고 있다.

다. OECD DAC 회원국

(1) 독일

기본적으로 OECD DAC 회원국의 지식협력 사업 추진은 국가 단위의 직접적인 그리고 국제기구를 경유하는 간접인 방식으로 국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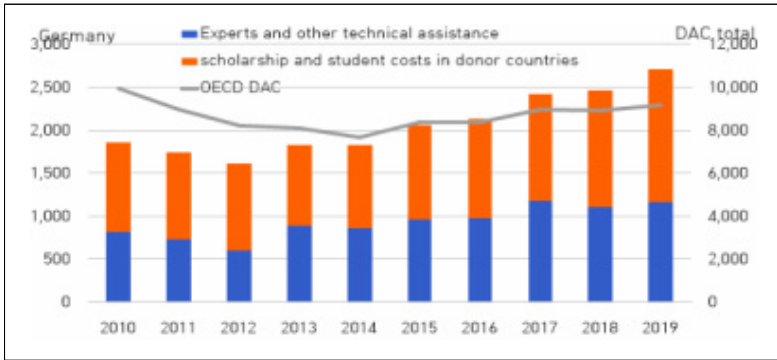
87) World Bank, "World Bank Support for Open Data 2012-2017," p. 41, <<https://openknowledge.worldbank.org/handle/10986/28616>> (Accessed June 10, 2021).

88) *Ibid.*, p. 38.

사회의 원조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쳐왔다. 그중에서도 독일은 지식협력 사업 분야에서 최대 공여국에 해당하는바, 본 연구에서는 독일의 지식협력 사업을 주요 사례로 선정한다. 최근 10년간 독일의 전문가와 기술지원을 위한 원조는 92억 달러이며, 연수 및 장학금 제공을 위한 원조는 114억 달러로 동일 원조유형에 대한 OECD DAC 회원국 전체 공여액의 23%에 해당한다. 특히 연수 및 장학금 제공을 위한 원조의 경우에는 DAC 회원국 전체 공여액의 36%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상대적으로 전문가와 기술지원을 위한 원조는 DAC 회원국 전체 공여의 17%를 차지한다.

〈그림 II-6〉 독일의 지식협력 사업 추이(2010~2019년)

(단위: 백만 달러)



출처: OECD, "Creditor Reporting System."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 (Accessed April 9, 2021)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

독일의 공여는 2010년 이후 지속적인 규모의 증가가 관찰되는데, 예를 들어 2010년 전문가와 기술지원을 위한 원조와 연수 및 장학금 제공을 위한 원조의 총액이 19억 달러였으나 2019년에는 27억 달러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DAC 회원국들이 해당 유형의 원조 공여를 줄였던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에도 독일은 지속적인 공여를 제공하였다. 다만, 앞서 언급하였듯이 OECD CRS에서 제공하는 전문

가와 기술지원을 위한 원조와 연수 및 장학금 제공을 위한 원조는 지식 협력 사업의 정의를 매우 좁은 범주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해당 통계는 지식협력 사업의 일부를 보여주는 것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한편 독일은 독일국제협력공사(GIZ)라는 기술협력 전담 기관을 별도로 두고 지식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국가일 뿐 아니라 전술한 기관들과 달리, 지식협력 사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통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독일국제협력공사는 지속 가능한 개발 및 국제 교육 업무를 위한 국제협력 분야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독일국제협력공사는 경제개발 및 고용 촉진, 에너지 및 환경, 평화 및 안보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50년 이상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유럽 연합 기관, 유엔, 민간 부문 및 기타 국가 정부와의 다양한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지식협력 사업의 효과를 향상시키고자 한다.⁸⁹⁾

독일국제협력공사는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문 지식, 기술 및 관리 전문 지식을 습득하도록 지원하는데, 여기에는 개인, 조직 및 사회 기관의 역량개발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2021년 8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관찰된다.⁹⁰⁾ 먼저 사업의 수는 총 1,464개이며, 해당 사업의 예산 규모는 약 170억 유로이다. 한편 다부문을 제외한 사업 분야를 살펴보면, 사업의 수를 기준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정부와 시민 사회에 대한 사업으로 총 154건이며, 환경보호에 대한 사업이 106건, 중등교육에 대한 사업이 70건 등이다. 사업 예산을 기준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정부와 시민사회로 예산은 총 11억 유로

89) GIZ, "Profile," <<https://www.giz.de/en/aboutgiz/profile.html>> (Accessed August 10, 2021).

90) GIZ, "Projects," <<https://www.giz.de/projekt/region/-1/countries/>> (Accessed August 10, 2021).

이며, 해당 예산은 비즈니스 분야의 예산 7.8억 유로, 중등교육 분야에 대한 예산 7.7억 유로 등을 넘어선다.

독일국제협력공사의 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지식협력 사업의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⁹¹⁾ 먼저 총 사업의 수는 405개이며, 해당 사업의 예산 규모는 39억 유로이다. 한편 사업 분야를 살펴보면, 사업의 수를 기준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정부와 시민사회 영역에 대한 사업이 39건으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환경보호가 34건, 물과 위생이 31건, 중등교육이 27건 등이다. 사업 예산을 기준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물과 위생으로 예산은 4.2억 유로이다. 그 외 정부와 시민사회에 대한 지원 예산은 3.8억 유로이며, 분쟁 해결 및 평화와 안보 분야에 대한 지원 예산이 3억 유로 등이다.

아시아를 대상으로 하는 독일국제협력공사의 지식협력 사업은 인도에 대한 사업이 64건으로 가장 많고, 사업 예산은 3.45억 유로이다.⁹²⁾ 인도지역의 주요 사업 분야를 살펴보면, 환경보호 분야에 대한 사업이 9건이며, 해당 사업에는 총 3,645만 유로의 예산이 책정되어있다. 다음으로 물과 위생 분야에 대한 사업은 5건이며, 2,820만 달러의 예산이 배정되어있으며, 에너지생산과 재활용 분야에 4건의 사업에 대하여 2,641만 유로와 에너지 생산과 분배 및 효율성 분야에 5건의 사업에 대하여 2,365만 유로 등이 예산으로 책정되어있다.

독일국제협력공사의 인도에 대한 지식협력 사업의 예로 직업 교육과 훈련을 위한 인도-독일 프로그램(Indo-German Programme

91) GIZ, "Project in Asia," <<https://www.giz.de/projekt/region/2/countries/AF,BD,CN,IN,ID,IQ,IR,YE,JO,KH,KG,KR,LA,LB,MN,MM,NP,PK,PS,PH,SA,LK,SY,TJ,TH,TL,UZ,AE,VN>> (Accessed August 10, 2021).

92) GIZ, "Project in India," <<https://www.giz.de/projekt/region/2/countries/IN>> (Accessed August 10, 2021).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이 있다.⁹³⁾ 해당 사업은 2015년에 시작되었으며 2023년까지 진행될 예정인데, 예산은 총 35만 유로이다. 사업의 목표는 인도의 산업 발전을 위한 숙련된 인력 양성이며 선정된 클러스터 분야에 대한 청소년들의 직업교육 및 훈련(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VET)을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직업학교 강사 및 사내 트레이너 교육에 대한 품질기준을 도입하고, 지역 및 분야에서의 성공적인 협력 VET 모델을 수립하고 전파하는 것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독일국제협력공사에서 새로 제공한 VET 통합 모델이 장기적으로 인도에 정착될 수 있도록 인도 기술개발기업부(MSDE)는 물론 연방정부에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며 궁극적으로 VET 모델의 전파를 통해 인도의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다.

요컨대 독일은 개별 국가로서 수원국에 대한 기술협력 사업을 가장 큰 규모로 수행하는 주체이다. 독일은 플랫폼 제공의 방식으로 사업 대상의 다양성과 이슈의 포괄성을 추구하는 다자협력 기반의 지식협력 사업에 참여하기도 하지만, 전통적인 형태의 양자 간 지식협력 사업 이행에 여전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정 국가 및 지역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식협력 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당 사업의 범위를 확장하고 그 효과를 전파하는 초기 접근법을 활용하여 사업의 대상과 이슈를 확장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2) 영국

영국 또한 독일과 유사하게 OECD DAC 회원국 중 매우 적극적으로 지식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공여국 중 하나이다. 따라서 본 연구

93) GIZ, "Indo-German Programm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https://www.giz.de/projektdaten/region/2/countries/IN\(show:project/201921881\)](https://www.giz.de/projektdaten/region/2/countries/IN(show:project/201921881))> (Accessed August 10, 2021).

에서 해당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남북한 간 지식협력 사업의 구상에 중요한 함의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영국에서 지식협력 사업은 기술 원조(technical assistance)라고 불리다가 최근에는 기술 협력이란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여기서 기술협력이란 영국과 기타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으로 훈련, 컨설팅뿐 아니라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지원되는 물품의 이전까지를 모두 포함한다.⁹⁴⁾ 단, 모든 형태의 자본 지원(capital assistance)은 제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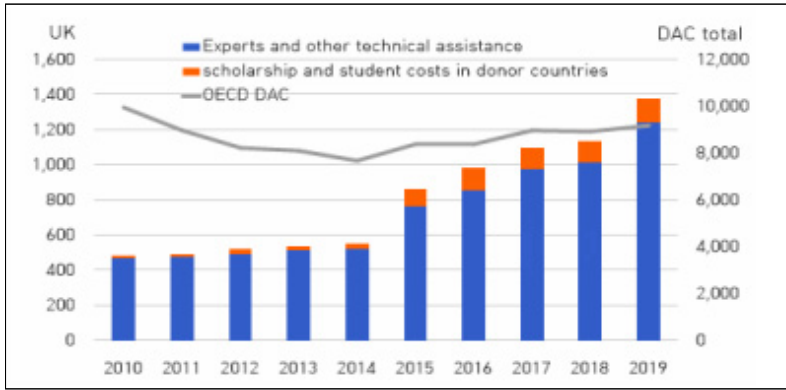
한편, 독일이 기술협력을 개발협력의 중심에 두고 다양한 사업을 지식협력 사업의 확장으로 다루는 것과 달리 영국은 일반적인 공여국들과 마찬가지로 지식협력 사업은 다양한 개발협력 사업들의 일부로 논의한다. 따라서 지식협력 사업만을 대상으로 원조를 계획하고 집행하는 별도의 정부 기관은 없으며, OECD CRS에 제출되는 전문가와 기술지원을 위한 원조와 연수 및 장학금 제공을 위한 원조를 제외하고 별도의 독립적인 통계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제한적이거나 OECD CRS 자료를 활용하여 사업추진 현황을 소개한다.

OECD CRS에 따르면, 영국은 지식협력 사업 분야에서 독일 다음으로 대규모 재원을 투입하고 있는 국가이다. 최근 10년간 영국의 기술지원은 73억 달러, 장학금 지원은 7억 달러로 이는 동일 원조유형에 대한 OECD DAC 회원국 전체 공여액의 9%에 해당한다. 특히 장학금 지원과 비교하여 기술지원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0년 이후 지속적인 규모의 증가가 관찰되는데, 2010년 기술지원과 장학금 지원의 총액이 4.8억 달러였으나 2019년에는 14억 달러로 약 3배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DAC 회원국들이 해당 유형의 원조 공여를 줄였던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에도 영국은 지속적인 공여를 수행해왔다.

94) Peter Williams, *British Aid: Technical Assistance* (London: Overseas Development Assistance, 1963), pp. 13~14.

〈그림 II-7〉 영국의 지식협력 사업 추이(2010~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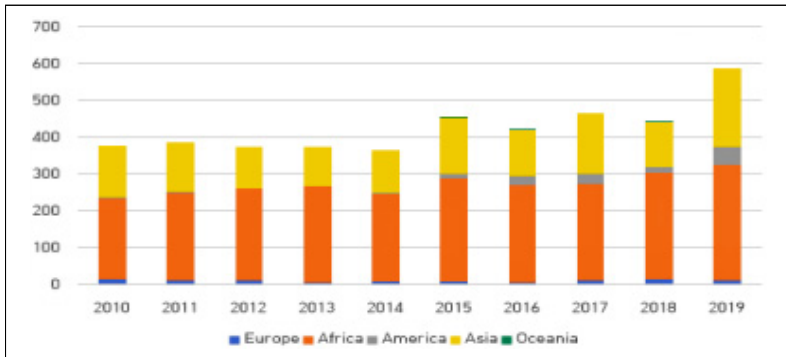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자료: OECD, "Creditor Reporting System,"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 (Accessed April 9, 2021)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II-8〉 영국의 지식협력 사업 대상 지역(2010~2019년)

(단위: 백만 달러)



자료: OECD, "Creditor Reporting System,"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 (Accessed April 9, 2021)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장학금 지원을 제외하고 기술협력 사업만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영국 공여의 특징을 살펴보면,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지원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10년간 총 지원 규모를 기준으로 아프리카에 대한 지식협력 사업의 규모는

26억 달러로 전체의 36%를 차지하며, 다음으로 아시아에 대한 지식 협력 사업이 14억 달러로 전체의 20%를 차지한다. 전통적으로 영국의 지식협력 사업은 자국의 식민경험 수원국에 대한 기술 이전의 목적으로 추진되어온 영향인 것으로 파악된다.⁹⁵⁾

라. 특징 및 시사점

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식협력 사업 사례에 대한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유엔은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지식협력을 촉진하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해당 플랫폼에서는 다양한 지식 정보들이 공유되며, 실제로 해당 정보와 연계되어 특정 수원국을 대상으로 관련 사업들이 확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세계은행의 경우, 전통적인 방식의 금융상품 연계의 지식협력이 개발 전 반과 연계된 지식협력으로 확장되고 있다. 특히 세계은행은 개발에 필수적인 국가 계정 관련 지식을 수집하고 이를 자료화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수원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개별 국가로서 독일과 영국의 지식협력 사례를 고찰한 결과,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대한 지식협력 사업의 비중이 비교적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독일의 경우, 다양한 행위자들을 사업에 포함하여 파트너십 확장을 도모하고 있으며, 에너지, 보건 등 다양한 이슈를 사업에 포함하여 지식협력 사업의 범주를 확대하고 있었다.

앞 절에서 언급하였듯이 향후 국제사회의 지식협력 사업은 다양한 행위자들이 다층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복합적인 국제이슈를 다루는 형태로 진화될 것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주요 행위자로서 국제기구들은 전 지구적 차원의 이슈를 매개한 플랫폼 활용을 통해 수원국의 필요를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궁극

95) *Ibid.*

적으로 지식협력 사업의 효과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개별 국가들 또한 이러한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국의 지식협력 사업 추진의 효과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각국은 자국의 전략을 바탕으로 필요시 자체적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다양한 지식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해당 플랫폼에서 공유된 사항들이 개별 국가 간의 협력 사업들로 확장한다면, 지식협력 사업의 사회경제적 효과는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4. 한국의 경제발전경험 공유 사업(KSP) 추진 동향

‘경제발전경험 공유 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KSP 사업)’은 기획재정부가 정책기관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집행기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술협력 사업으로 한국의 대표적인 ODA 사업으로 자리 잡았다. 이는 물질적 지원을 넘어 북한이 필요로 하는 기술 및 지식협력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그 추진 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과거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KSP 사업은 북한과 유사한 국가들의 개혁개방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지식공유 사업으로 향후 북한에 대한 적용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 현황과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KSP사업 분야는 거시, 미시, 무역, 금융, 조세, 재정 등 경제 분야 뿐만 아니라, 산업, 농업, 수산업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다. 따라서 KSP 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뿐만 아니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다양한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 KSP 사업 참여 기관들에 대한 분석은 향후 북한의 개혁·개방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식공유 사업이 추진될 경우 협력 가능한 기관을 모색하는 데 있어 유용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가. KSP 사업 개괄

KSP 사업은 2021년 기준 14개 분야 819개 사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는 경제정책 분야로 거시-경제정책, 과학·기술, 지역개발, 문화·스포츠·관광, 경제발전계획, 산업·무역정책, 국토개발 분야가 주를 이루며 이들 영역의 사업은 511개로 전체 사업의 62%에 달한다. 다음으로 공공영역 분야로 공공재정과 공공행정에 대한 176개 사업이 이루어졌으며, 사회정책 분야는 총 91개 사업으로 노동시장, 인적자원개발, 건강복지, 환경 분야에 대한 지식공유 및 컨설팅 사업이 진행되었다.

〈그림 II-9〉 KSP 사업 현황(2021년 6월 기준)



출처: KSP 홈페이지, 〈<http://www.ksp.go.kr>〉 (검색일: 2021.6.1.).

KSP 사업 추진 기관과 관련하여 한국개발연구원이 압도적인 실적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산업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KSI국제정책대학원 순으로 한국의 경제, 사회 분야 개발에 있어 실질적인 노하우와 기술 그리고 지식을 가진 국책연구기관이 해당 기관의 전문성에 대한 지식을 전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 각 주체별 KSP 사업 현황(2019년 기준)

(단위: 회수)

No.	기관명	KSP 사업 실시 현황
1	한국개발연구원	148
2	산업연구원	17
3	국토연구원	16
4	한국교통연구원	9
5	KDI국제정책대학원	8
6	과학기술정책연구원	4
7	한국직업능력개발원	4
8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
9	한국행정연구원	3
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
1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
12	에너지경제연구원	1
13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
14	한국노동연구원	1
15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

출처: 비공개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상위 3개 기관의 KSP 사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KSP 총괄수행 기관으로서 한국개발연구원은 148회(2019년 기준)에 달하는 KSP 사업을 수행한 최다 기관으로, 2010년 한국개발연구원 조직 내에 국제개발협력센터를 설립하여 체계적인 지식전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추진하고 있는 주된 분야는 산업·무역 정책 101회, 거시·금융정책 45회, 재정 42회, 경제개발계획 23회 등이다. 〈표 II-2〉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한국개발연구원이 다루는 지식협력의 주제들은 한 국가의 경제발전에 필요한 전 분야를 모두 다루고 있다. 압도적으로 많은 분야를 차지하는 산업 및 무역

정책은 개도국의 경제발전에서 산업화의 중요성과 이러한 산업화를 바탕으로 무역 활성화를 통해 외화를 획득하는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 무역 및 수출 진흥, 산업단지 조성, 경제구조 다변화, 기업환경 개선과 해외직접투자 유치 전략과 같은 경제 발전을 위한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한국이 경제 발전 과정에서 체득한 경험과 노하우를 개도국에 지식협력의 형태로 전수하고 있다.

〈표 II-2〉 한국개발연구원의 KSP 사업 현황(2019년 기준)

횟수*	내용
101	산업·무역정책(중소기업정책, 무역과 수출진흥, 산업단지, 체제전환 및 경제다변화, 기업환경개선, 직접투자, 기타 정책)
47	과학기술(연구개발 및 혁신, 정보통신기술, 기타정책)
45	거시·금융정책(금융기관 및 제도, 금융안정, 통화신용정책, 환율 및 국제금융, 기타정책)
42	재정(재정정책, 공공투자, PPP)
34	인적자원개발(직업능력개발, 교육)
26	행정(공공부문관리, 전자정부, 공기업)
24	국토개발(도시개발, 기반시설투자, 지역균형발전, 기타정책)
23	경제개발계획
17	농촌개발
16	환경(환경 및 자연자원관리)
11	노동시장(노동시장정책 및 사업)
6	보건복지(보건의료, 사회보장)

주: * 한국개발연구원의 KSP 실시 횟수는 148회이나, 각 사업이 단일 분야가 아닌 복수 분야를 다루는 경우가 있어 전체 사업 총합은 148회를 상회함.

출처: 비공개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한국개발연구원이 산업 및 무역정책 다음으로 많이 수행한 지식협력 분야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및 혁신, 정보통신기술이다. 과학기술 분야는 북한이 국가경제발전전략에서 꾸준히 강조해온 분

야라는 점에서 향후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 문제의 해결로 북한에 대한 제재가 해제될 경우 북한이 강하게 요청할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전 지구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지식협력은 북한에게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남한이 가진 비교우위라는 점에서도 한국개발연구원이 과거 이 주제에 대한 다양한 지식협력의 경험을 축적해왔다는 점은 북한에 대한 지식협력 사업을 고민함에 있어 제시하는 함의가 크다고 하겠다.

한국개발연구원이 과학기술 분야 다음으로 집중하고 있는 분야는 거시 및 금융정책 분야로 세부주제로 금융기관 및 제도, 금융안정, 통화·신용정책, 환율 및 국제금융에 대한 한국의 경험과 지식을 전수하는 데 집중하며, 재정 분야에서는 재정정책, 공공투자, 민관협력(PPP)에 대한 지식을 컨설팅해 왔다. 금융기관 및 제도의 개선은 중국, 베트남과 같이 사회주의 국가들이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을 모색할 때 중앙은행의 개혁, 정책 및 개발 금융기관의 설립 운영, 경제체제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부채 처리 노하우 및 재정 안정 정책이 필요했다는 점을 상기할 때 북한에게 매우 필요한 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국제금융 분야에 대한 지식은 국내 자본이 부족한 북한이 향후 경제발전을 모색함에 있어 필요한 자본을 국제 금융기구와 국제 자본시장을 통해 조달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유용한 지식이라는 점에서 한국개발연구원이 개도국을 대상으로 시행한 이러한 지식협력 경험은 향후 북한에 대한 시사점이 크다고 하겠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압도적인 지식공유 사업 실적과는 비교되나 다음으로 많은 지식공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은 산업연구원으로 총 17회의 사업을 실시하였다(2019년 기준). 하지만 산업연구원은 러시아, 쿠바, 베트남 등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경제다변화 및 경제체제 전환 관련 KSP 사업을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북한에

대한 지식공유 사업에 있어 파트너 기관으로서의 역할이 가능하다. 또한 산업연구원은 개도국 산업개발 정책자문, 중국의 산업 및 통상 정책, 한·중 산업협력 전략, 북한 산업 및 기업 실태, 남·북한 산업 협력 전략 연구를 시행한 경험이 있어 북한 지식협력 사업에서 축적된 지식과 정보,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산업연구원은 산업 분야를 넓게 해석하여 한국개발연구원이 집중적으로 다루었던 산업 및 무역정책과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지식협력 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대한 지식협력 사업을 추진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특히 관광 분야는 대북제재가 장기화되고 지하자원 외의 수출품목 개발이 제한된 가운데, 비핵화 문제의 진전 시 북한이 가장 빠르게 국가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로 주목 받고 있다. 실제로 대북제재 하에서도 북한이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분야라는 점에서 산업연구원이 러시아 및 태평양 도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KSP 경험은 북한에 대한 함의가 크다고 하겠다.

〈표 II-3〉 산업연구원의 KSP 사업 현황(2019년 기준)

횟수	내용	대상국
17	산업·무역정책(체제전환 및 경제다변화, 기업환경개선, 무역과 수출진흥, 산업단지 및 클러스터, 중소기업정책, 직접투자)	방글라데시, 러시아, 페루, 태평양도서국, 쿠바, 케냐, 불가리아, 아랍에미리트, 에콰도르, 태국, 가봉, 베트남
5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및 혁신, 기타정책)	불가리아, 페루, 태국, 가봉
3	문화·체육·관광	러시아, 태평양 도서국, 가봉
3	행정(전자정부, 공기업, 공공부문)	불가리아, 에콰도르, 페루
2	인적자원개발(교육, 직업능력개발)	페루
2	환경(환경 및 자연자원 관리)	아랍에미리트, 태국
2	농촌개발	러시아, 가봉
1	경제개발계획	페루
1	국토개발(지역균형발전)	에콰도르

출처: 비공개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끝으로, 국토연구원의 경우 16회의 KSP 사업(2019년 기준)을 실시하였으며, 연구원 소관 분야의 특성과 전문성에 기반한 국토개발 분야에 대한 지식공유 사업에 집중하였다. 특히 국토연구원은 기반 시설 투자, 도시개발, 지역균형개발과 같은 국토개발 분야 그리고 환경·자연자원 관리, 산업단지 및 클로스터 주제에 대한 지식공유 사업에 집중해왔다. 북한은 국가경제발전전략 하에 경제특구 중심의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국제사회를 통해 지원을 요청해 왔다. 경제특구와 관련된 제도적·정책적 지식은 UBC와의 지식협력 사업을 통해 습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경제특구 추진 시 특구의 인프라 개발은 국토연구원이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 국토연구원은 북한의 인프라 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실시하고 있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한국의 경제 및 사회 발전과정에서 국토 인프라 개발 정책을 수립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국책연구원으로서 국토연구원의 전문성은 북한에게 필요한 지식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토연구원은 KSP 사업으로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미얀마 등 13개국에 달하는 개도국의 국토개발 분야에 대한 지식협력 사업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북한에 대한 지식협력 사업 시 합의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이 외에 국토연구원은 글로벌개발협력센터(Global Development Partnership Center: GDPC)를 설립하여 개발도상국의 각종 개발 관련 연구사업, UNDP, ADB 등 국제기구와 한국의 무상원조 전문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연계한 국제협력 사업, 개도국의 연수생 초청사업 등을 수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에 바로 투입 가능한 지식협력 콘텐츠와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하겠다.

〈표 II-4〉 국토연구원의 KSP 현황(2019년 기준)

횟수	내용	대상국
14	국토개발 (기반시설투자, 도시개발, 지역균형개발, 기타정책)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미얀마, 스리랑카, 몽골,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얀마, 자메이카, 브라질, 우루과이, 엘살바도르, 태국
2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	몽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자메이카
1	환경(환경 및 자연자원 관리)	베트남
1	산업·무역정책 (산업단지 및 클러스터)	미얀마

출처: 비공개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나. 체제전환국 대상 KSP 사업 분석

시장경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개도국에 대한 KSP 사업과 달리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기반으로 했던 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한 KSP 사업은 향후 북한을 대상으로 한 지식공유 사업 시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표 II-5〉 사회주의 국가 대상 KSP 사업 현황(2019년 기준)

기관명	횟수	내용	대상국
한국개발연구원	73	산업, 경제, 국토개발 등	다양
산업연구원	7	캄차카지방 수산업 클러스터(산업단지 외)	러시아
		무역진흥기구, 투자진흥기구(무역, 투자)	쿠바
		캄차카지방 투자환경 개선(투자)	러시아
		사할린주 바다양식산업(투자)	러시아
		산업단지개발, 지식경제 외	불가리아
		히버롭스크지방의 투자환경 개선	러시아
		친환경 산업단지	베트남

기관명	횟수	내용	대상국
국토연구원	7	교통정책, 투자계획수립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몽골
		호치민 메트로 PPP노선 선정 지원	베트남
		원전관련 법, 제도 개선 및 주변 지역 지원 정책	베트남
		경제협력 산업단지 정책 자문	미얀마
		하노이 홍강 양안개발 정책 자문	베트남
		양곤 남서부권 지역발전 전략	미얀마
		지리정보 정책 개선 수립 지원	미얀마
KDI국제정책대학원	4	저탄소녹색성장 정책개발(환경, 산업정책)	베트남
		재정적자 보전 외(재정정책)	캄보디아
		제조업육성 수출촉진(경제, 산업)	우즈베키스탄
		개방경제 과제, 대응(금융, 무역 외)	베트남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	비현금지급 시스템 개선(금융제도)	몰도바
		비현금지급 시스템 개선(금융제도)	몰도바
		재정 관리제도(FMS)도입(재정)	베트남, 알바니아, 캄보디아
한국교통연구원	3	고속철도구축을 위한 이행방안(기반시설)	미얀마
		지능형교통시스템 구축(기반시설)	몽골
		내륙항 개발을 위한 철도 물류 인프라 개선	미얀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	직업능력개발 정책	베트남
		녹색직업, 직업능력 개발	베트남
한국행정연구원	1	주민등록 및 인구동태통계(전자정부)	라오스, 미얀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	ICT지식공유(정보기술)	베트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	농산물 수출 증대(농촌개발)	아제르바이잔

출처: 비공개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표 II-5〉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한국개발연구원은 구 사회주의 국가 대상 KSP 사업에 있어서 가장 많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

개발연구원은 KSP 총괄수행기관으로서 개도국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한 합의점이 많은 사회주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지식협력의 경험이 풍부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 조직적 측면에서 한국개발연구원은 KSP 추진을 위한 전문조직으로 ‘국제개발협력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별도로 북한 경제 분야에 대한 연구 기능을 수행하는 ‘북방경제실’은 오랫동안 북한 경제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연구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 경제 분야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의 전문성과 KSP 사업 추진 방향이 결합할 경우 높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산업연구원은 사회주의 국가들의 산업 및 투자 활성화 분야 그리고 KDI국제정책대학원은 금융, 무역 활성화 정책에 대한 지식공유 사업을 주로 실시하였다. 북한과 같이 내수 시장과 내부 자본이 부족한 경제는 국제사회로부터의 투자 유치에 경제발전에서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당면한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외부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유인 전략과 이러한 전략과 연동된 산업 전략을 적절하게 기획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산업연구원은 구 사회주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투자진흥기구 설립 및 운영, 투자환경 개선, 산업단지 개발과 같은 주제를 중심으로 KSP 사업을 수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아울러 KDI국제정책대학원이 캄보디아를 대상으로 한 재정적자 보전과 관련한 KSP 사업은 구 사회주의 국가들에게 경제체제의 전환과정에서 늘어나는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지식 컨설팅이라는 점에서 북한에 대한 시사점 또한 크다 하겠다. 특히 재정적자 및 부채 문제 해결은 베트남과 중국이 체제전환 과정에서 국제사회로부터 기술협력의 형태로 노하우를 전수하여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안정적 체제전환이 가능했다는 평가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북한에도 유의미한

지식협력의 주제라고 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비현금지급 시스템 개선과 같은 KSP 주제 역시 사회주의 국가들에게 현실적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다. 특징 및 시사점

개도국 및 구 사회주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KSP 사업의 경험은 남북 지식협력 사업 사업을 구상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해주고 있다.

첫째, KSP 사업의 이행 주체로 활동한 국내 국책연구기관은 한국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핵심 연구기관들로 소관 분야의 정책에 대한 노하우와 지식을 체계화하고 모듈화하여 이를 다양한 개도국에 전수한 경험을 이미 확보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들 국책연구기관들은 개도국 및 구 사회주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KSP라는 지식협력 사업에 필요한 콘텐츠와 제도, 조직을 이미 구축하여 운용하고 있다. 이들 콘텐츠와, 제도, 조직, 경험은 북한에 대한 기술협력 사업 시 유용한 자산이 될 수 있다.

둘째, 콘텐츠 측면에서 KSP가 다룬 많은 주제들이 경제체제 전환 국가들에게 필요한 기술과 지식이었고, 이러한 콘텐츠는 북한이 경제체제의 전환 및 개선을 모색할 경우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요소들이라는 점에서 북한에 대한 기술협력 사업 추진 시 KSP의 콘텐츠는 유용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분류, 재구성하는 작업을 통해 북한에 전달하는 메커니즘 혹은 채널 구축 시 많은 노력 없이도 효과적인 지식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KSP 사업의 이행을 주관해온 국책연구기관들은 북한에 대한 연구 기능과 필요한 조직을 이미 구축 운영하여 왔다는 점에서

이들 국책연구기관의 북한 연구에 대한 전문성과 KSP 추진 경험이 접목될 때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기술협력 사업의 시작이 매우 용이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앞서 언급한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국토연구원 등은 북한 연구 전문성과 개도국 및 구 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한 KSP 사업 수행 경험을 이미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식 및 기술 전문성과 기술협력 사업 수행 경험을 빠르게 북한에 적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넷째, 국제사회가 추진해온 일반적인 지식협력과 KSP 사업 간 가장 큰 차이는 KSP는 파트너 국가의 상황 분석과 한국의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파트너 국가 맞춤형 지식을 전달한다는 점이다. 반면에 국제기구가 일반적으로 추진해온 지식협력은 특정 분야에 대한 지식을 모듈화하여 불특정 다수가 해당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차이를 가진다. 따라서 KSP의 지식협력은 파트너 국가의 정책적 의지가 결합될 경우 바로 정책화와 이행이 가능한 반면, 프로그램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국제기구가 추진해온 지식협력의 경우 지식전수 프로그램에 참여한 연수자가 정책화하는 데는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특징을 가진다. 또한 국제기구가 북한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식협력 사업의 경우 KSP와 같이 구체적인 추진 방향과 계획, 목적 하에 이행된 것이 아니라 단발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추진 방향과 추진 동기의 부재로 지속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한계를 노출하였다.

III. 국제사회의 대북 지식협력 사업 추진 현황 및 평가



1. 유엔 다자기구의 대북 지식협력 분석

가. 유엔전략계획과 대북 지식협력 추진 전략

북한에 상주사무소 혹은 비상주 형태로 북한과의 협력사업을 추진 해온 유엔 기구들은 사업의 체계적 진행을 위해 2006년에 ‘북한-UN 협력을 위한 전략적 프레임워크 2007-2010(Strategic Framework for Cooperation Between the United Nations and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07-2010: ‘유엔 전략계획 2007-2010’)’을 수립한 이래로, 2010년에는 기존의 전략 계획을 대체하는 ‘유엔전략계획 2011-2015’, 그리고 2016년에는 ‘유엔전략계획 2017-2021’을 수립하였다. 유엔전략계획(UNSF)은 북한과 유엔 기구 간 협력방향과 협력분야를 제시함과 동시에 협력 과정에 있어 준수될 원칙과 규범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을 대상으로 한 지식협력 사업 분야의 선정 및 실행 방식을 수립하는 데 참조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문서라 할 수 있다.

〈표 III-1〉 유엔전략계획(UNSF) 상 주요 내용

	유엔전략계획 2007-2010	유엔전략계획 2011-2015	유엔전략계획 2017-2021
중점 분야	1. 경제관리: 해외직접 투자, 무역, 경제발전 제고 2. 지속가능한 에너지 3. 환경관리 4. 식량가용성 향상 5. 기본적 사회서비스 (사회개발)	1. 사회개발 2. 지식 및 개발관리를 위한 파트너십 3. 영양 4.기후변화 및 환경	1. 식량 및 영양안보 2. 사회개발 서비스 3. 복원력과 지속가능성 4. 데이터와 개발관리

	유엔전략계획 2007-2010	유엔전략계획 2011-2015	유엔전략계획 2017-2021
이행· 모니터링 및 평가 방안	이행측면에서 국가역량, 파트너십, 데이터 취합 및 분석, 어린이와 여성 강조(모니터링 및 평가 언급 불포함)	'No Access, No Assistance'의 통상적 유엔 모니터링 원칙 확인	'사업 관리 및 평가 원칙'으로 아래 요소를 제시 1. 지속가능발전목표 적용 2. 인권중심접근법 채택 3. 성평등과 여성권리 강화지원 4. 환경 지속가능성 추구 5. 제도의 지속가능성 추구 6. 성과기반 관리 적용
특징	- 경제발전을 위한 인적 역량, 재정관리, 무역 및 투자, 제도 및 기술 역량 강화를 기존의 인도적 지원에 초점을 맞춘 지원보다 강조	- 인도적 지원을 최우선 순위로 변경 - 인도적 지원에 이어 개발지원을 강조	- 기존의 사업명, 필요 예산과 같은 구체적인 사업리스트 미제시 - 인도적 지원보다 개발 지원에 초점 - 단기적 지원보다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기술 및 지식협력 강조

출처: '유엔전략계획 2007-2010', '유엔전략계획 2011-2015', '유엔전략계획 2017-2021'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세 번의 유엔전략계획이 담고 있는 내용 및 전략과 방향의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북한의 내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인도적 지원이 여전히 중요한 지원 분야를 구성하고 있지만, 2007년 이래로 인도적 지원을 넘어 지속가능한 개발을 모색하여 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2005년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개발지원의 필요성을 요청한 이후 '유엔전략계획 2007-2010'에서도 북한은 경제개발을 위한 제도 및 인적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 내용으로 무역, 해외투자, 지속가능한 에너지, 환경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후 대북지원이 중단되며 북한의 인도적 상황이 악화된 가운데 ‘유엔전략계획 2011-2015’에서는 다시 보건 및 교육지원 사업을 우선 사업으로 상정하였으며, 무엇보다도 남북 지식협력 추진을 위한 시사점 관점에서 볼 때 지식협력의 주요 내용인 ‘지식 및 개발관리를 위한 파트너십’을 포함하였다. 끝으로 ‘유엔전략계획 2017-2021’은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의 북한 내 이행을 천명하였는데, 무엇보다도 ‘유엔전략계획 2007-2010’과 ‘유엔전략계획 2011-2015’가 구체적인 사업 목록을 제시하는 데 그친 반면, ‘유엔전략계획 2017-2021’은 사업의 이행방안, 모니터링과 평가 방안 등 지금까지 국제사회가 북한과의 협력사업 추진에서 문제시하였던 원칙과 가치, 평가, 투명성 관련 내용들을 포함시켰다. 특히 ‘유엔전략계획 2017-2021’은 북한과 유엔 기구 간 전략적 협력이 단순한 물자지원을 넘어 기술과 지식, 경험공유 등 기술협력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또한 ‘유엔전략계획 2017-2021’은 기존의 두 전략계획과 달리 국제적 규범과 기술표준, 관행, 국제협력의 준수를 위한 협력을 강조하였고, 북한이 이러한 규범을 습득하고 이행하는 데 있어 국제사회와 북한이 노력한다는 점에 합의하였다는 점에서 이전의 두 유엔전략계획과 큰 차이를 보인다.

구체적으로 ‘유엔전략계획 2017-2021’은 북한 외무성과 유엔 13개 기구로 구성된 유엔북한팀이 채택한 것으로,⁹⁶⁾ 동 문서의 서명 주체는 북한 외무성 산하 국가조정위원회 위원장과 유엔북한팀의 유엔상주 조정관이며 ‘유엔전략계획 운영위원회(UNSF Steering Committee)’의 주도로 입안되었다. ‘유엔전략계획 2017-2021’은 4개의 우선순

96) 유엔북한팀은 평양 상주 유엔 기구인 FAO, UNDP, UNFPA, UNICEF, WFP, WHO와 비상주기구인 UNEP, UNESCAP, UNESCO, UNIDO, UNISDR, UNOCHA, UNOPS 등 13개 기구로 이루어져 있음.

위를 정하였는데, ‘우선순위 1: 식량 및 영양안보(Food & Nutrition Security)’, ‘우선순위 2: 사회개발 서비스(Social Development Service)’, ‘우선순위 3: 복원력과 지속가능성(Resilience & Sustainability)’, ‘우선순위 4: 데이터와 개발 관리(Data and Development Management)’ 등이 그것이다. 무엇보다도 ‘유엔전략계획 2017-2021’의 가장 큰 의미는 ‘유엔전략계획 2011-2015’가 사업 목록과 검증 수단, 재원 명시에 그친 반면, ‘유엔전략계획 2017-2021’은 우선순위 내 해당 사업의 방향성과 이행 방안, 모니터링과 평가 방안 등 거시적인 방향성과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남북 지식협력의 관점에서 볼 때 북한과 유엔 기구 간 전략적 협력을 추진함에 있어 단순한 물자 지원을 넘어서 유엔 기구와 국제사회가 가진 기술과 지식, 경험 공유 등 기술협력을 통한 북한 당국의 역량강화 사업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유엔전략계획 2017-2021’의 ‘전략적 핵심 사안’ 부분에서 “...(북한에 대한) 기술지원에 있어 논의의 핵심은 사업 전반에서 북한이 국제적 규범과 기술 표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⁹⁷⁾ “(사업 원칙으로써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유엔의 여러 환경 조약을 비준한 국가로서 조약의 이행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유엔의 지원이 필요하며...”, “(제도적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전략 우선순위 4에서 제시된 체계적인 방식으로 다양한 국제협약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북한의 역량강화에 이바지 한다”⁹⁸⁾라는 문구를 포함하였다.

97) UN Country Team in DPRK, “Strategic Framework for Cooperation Between the United Nations and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17-2021,” 2016.12.20., p. 11.

98) *Ibid.*, p. 14.

북한과 국제사회 특히 국제기구 간 협력의 우선순위, 접근원칙, 기술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북한과 국제기구는 ‘유엔 전략계획 2017-2021’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다.

〈표 III-2〉 ‘유엔전략계획 2017~2021’ 4대 우선순위 및 세부목표

우선순위	세부내용
1. 식량 및 영양안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 원예, 어업, 축산 부문에서 식량 생산, 생산성, 가공의 지속가능성 제고 - 모든 가계가 언제든지 충분하고 다양한 식품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 특히 가장 취약한 집단들의 삶의 질을 제고 - 가임기 여성, 5세 미만 아동, 노인 및 기타 취약계층의 영양상태 개선
2. 사회개발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주민들, 특히 가장 취약한 인구집단과 외딴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일차 의료의 개선 및 일관되고 공평하며 보편적인 보건으로 서비스 보장 - 전염·비전염성 질환, 특히 가장 취약한 여성과 아동들이 겪는 모성·유아 질환에 대한 개선된 의료 서비스 제공 - 보건 분야 긴급 상황에 대한 준비와 대응역량 강화 - 가정, 교육기관, 의료시설, 특히 가장 취약한 가구와 집단들에 대한 적절하고 공평하며 지속가능한 물·위생 시설 보급 - 유치원, 소학교, 중등학교, 3차 교육기관, 그리고 기술 및 직업 교육·훈련 부문에서 양질의 교육 제공 및 형평성 제고
3. 복원력과 지속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 및 기후변화 영향으로부터 지역 공동체, 특히 여성을 포함한 가장 취약한 인구집단 보호 및 대응력 제고 - 지역 공동체, 특히 가장 취약한 집단들의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현대적 에너지원에의 접근 - 환경관리, 에너지, 기후변화, 재난위험관리 부문에서 정부 기관들의 통합적이고 공평한 사업 수행
4. 데이터와 개발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기획 및 의사 결정을 위한 구체적이고 신뢰할 만한 인도·개발분야 정보에 대한 접근과 가용성 제고 - 국제 기술표준을 적용하기 위한 북한의 역량 강화 - 국제 조약, 협약, 기타 체계에 대한 북한의 준수 강화와 증거에 기초한 보고 체계 강화

출처: UN Country Team in DPRK, “Strategic Framework for Cooperation Between the United Nations and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17-2021,” 2016.12.20., 국문 번역본(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제공)을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나. 국제기구의 대북 지식협력 추진 현황

북한에 대한 지식협력이 본격화된 1997년부터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이하 UNESCAP)가 새로운 국제기구로 부상한 2001년 이전까지 유엔개발계획(이하 UNDP)은 북한에 대한 지식협력을 주도하였다.

(1) UNDP

UNDP는 1997년 북한의 통계청 관료 5명을 대상으로 1년간 호주에서 시장경제에 관한 연수사업을 실시하였고, 같은 해 15명의 북한 경제 관료를 대상으로 중국 상하이 산업현장을 둘러보는 현장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UNDP는 회원국의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을 지원하는 기구로서, 북한에 대한 지식협력에서 가장 큰 성과는 1998년 9월 24일 ‘나진기업학교’를 설립함으로써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지식전수가 아닌 상시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식협력 플랫폼을 구축했다는 데 있다. 나진기업학교는 UNDP와 북한이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진출하는 외국기업과의 협력을 담당할 국제무역 관리 기술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1996년 논의를 시작하여 1998년 개교하였고, 기업관리, 금융회계, 전문 경제영어 등 11개 학과로 구성되었다.⁹⁹⁾ 이에 대해 조선중앙통신은 “현대적인 물질기술적 토대를 갖춘 이 학교가 설립됨으로써 나진-선봉지대에 필요한 전문가들을 더 잘 양성해 낼 수 있게 됐다”고 보도하였다.¹⁰⁰⁾ 나진

99) “UNDP지원 나진기업학교 개교,” 『연합뉴스』, 1998.9.30.,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4313509>> (검색일: 2021.8.24.); “北, 羅-先에 무역전문가양성기관 설립,” 『연합뉴스』, 1998.9.1.,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4320927>> (검색일: 2021.8.24.).

100) “UNDP지원 나진기업학교 개교,” 『연합뉴스』, 1998.9.30.,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4313509>> (검색일: 2021.8.24.).

기업학교 개교에 앞서 같은 해 2월 UNDP는 나진기업학교 관계자 14명을 싱가포르국립대로 초청하여 기업회계와 재정, 재무관리 등 시장경제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6명은 태국 방콕대학에서 관광분야에 대한 연수를 받았다. 또한 UNDP는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와 함께 ‘나진정보센터’를 개설하고 동년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나진-선봉 투자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¹⁰¹⁾

1999년 UNDP는 세계은행과 함께 북한 중앙은행 및 재정성 관료 30명을 대상으로 시장경제 관련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이후 2001년 11월 스웨덴 정부의 지원을 받아 북한 외무성 산하 ‘군축 및 평화연구소’ 군축담당 관리들에 대한 교육 사업을 실시하였다. 유엔인도지원조정국(UNOCHA) 평양사무소에 따르면 UNDP는 스웨덴 정부로부터 23만7천 달러를 지원받아 스웨덴 스톡홀름의 국제평화연구소(SIPRI)에서 북한의 군축 관련 연구 및 정책담당 관리들을 대상으로 한 해외 유학연수, 국제 및 지역 군축회의와 워크숍 참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식협력을 추진하기도 하였다.¹⁰²⁾ 2005년에는 우리 과학기술부와 UNDP 간 ‘2005년도 한·UNDP 개도국 개발 지원사업’ 아래 총 약 1,171만 달러의 사업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 사업에는 남북 해양공동 연구센터 설립, 대(對) 북한 기술이전 및 공동 개발을 위한 법적·행정적 제도 개선, 남북 하천복원 기술개발 등 남북 간 과학기술 협력 전반에 걸친 내용이 포함되었다.¹⁰³⁾ 무엇보다도 남북 양자 혹은 북한과 국제기구 양자 간 추진된 기존 사업과 달리 우리 정부

101) “北, 24~26일 나진-선봉투자토론회 개최,” 『연합뉴스』, 1998.9.10.,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4324597>> (검색일: 2021.10.1.).

102) “UNDP, 北 ‘군축 및 평화연구소’ 지원,” 『연합뉴스』, 2001.11.5.,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120201>> (검색일: 2021.8.25.).

103) “과기부, UNDP 통한 남북협력사업 확정,” 『전자신문』, 2005.5.16.,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5&oid=030&aid=0000104944>> (검색일: 2021.8.25.).

와 국제기구가 북한을 대상으로 실시한 첫 지식협력 사업이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렇지만 동 사업은 남북협력을 촉진할 부차적 목적 하에 남·북한 청소년 과학캠프 등 4개 사업에 총 지원금의 80%가 넘는 약 904만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었다는 점에서 대북 지식협력보다는 남북 교류의 성격이 강하였다고 평가된다. 다만, 2006년 이래로 UNDP의 대북 지식협력 사업 현황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표 III-3〉 UNDP의 대북 지식협력 현황

연도	프로그램	주최기관	날짜/기간	참가자 정보	장소	교육내용
1997	호주국립대학 외교관 학위과정 (제1차)	아시아재단, UNDP, 사사카외평화재단, 호주국립대학(ANU)	1997.7. ~ 1998.6.	통계청 관료 5명	호주	시장경제체제에서의 관리경제
1997	산업시찰	UNDP	-	경제관료 15명	중국 상하이	산업현장 방문
1998	-	UNDP	2~6월	나진기업학교 관계자 14명	싱가폴 국립대	회계, 금융관리, 시장경제, 관광산업
1998	나진기업학교 & 기업정보센터	UNDP, 유엔공업개발기구 (UNIDO)	9.24.~ (1~2년 과정)	-	북한 라진	기업 금융, 회계
1999	경제교육	UNDP, 세계은행(IBRD)	4월	중앙은행 및 재정성 관료30명	평양	시장경제 관련 경제교육
1999	관리경제 교육	UNDP	6월	-	미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호주	시장경제원리 강의
2001	군축 및 외교	UNDP	11월	북한 외무성 산하 '군축 및 평화연구소' 군축담당 관리	스웨덴 SIPRI	북한의 국제 및 지역 군축회의나 워크숍 참여를 촉진
2005	과학기술 협력	UNDP, 한국 과기부	-	(실제 실시 여부 미지수)	-	남북 해양공동 연구센터 설립, 대북한 기술이전 및 공동 개발을 위한 법적·행정적 체제 개선, 남·북 하천복원 기술 개발 등

출처: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UNESCAP

2001년까지 UNDP 주도로 활발했던 대북 지식협력은 이후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2004년부터는 UNESCAP을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 된 것으로 파악된다. UNESCAP의 사업 횟수나 규모는 UNDP 및 타 국제기구에 비해 왕성하였으나,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며, 무엇보다도 사업의 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결과 또한 부재한 상황이다. 제한적으로 파악되고 있는 UNESCAP의 사업을 살펴보면 경제교육에 집중했던 UNDP와 달리 UNESCAP은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에너지, 자원, 자연 및 재해, 공공행정 등 폭넓은 분야를 다루기 시작하였고, 무엇보다도 북한의 다양한 지표 형성을 위한 통계역량 강화를 위한 지식협력 분야에 집중하였다는 점이다.

〈표 III-4〉 UNESCAP의 대북 지식협력 현황

연도	사업명	주최	날짜/기간	참가 대상	장소
2004	평양 비즈니스스쿨	UNESCAP, 스위스 개발협력청(SDC)	2004년 ~ 2010년	북한 중견 관리자	평양
2007	EU-북한 무역역량 프로젝트	UNESCAP, 한스자이델 재단, 독일기독교교회연합	2007년 ~ 2009년	북한중견 공무원	평양
2010	공무원 기술교육 및 훈련	UNESCAP, 한국남북협력기금	-	-	인도
2010	고압송전기술 설계 및 운영 훈련	UNESCAP, 중국 공영 첨단 산업 상담센터(BSGHTCC)	7.12.~ 11.10.	전력공업부 등 소속 6명	중국 장자우
2010	공무원 기술교육 및 훈련	UNESCAP, 한국남북협력기금	-	-	인도
2010	화력발전소 효율 증대 및 오염 감소를 위한 기술역량강화 교육	UNESCAP, 중국 공영 첨단 산업 상담센터(BSGHTCC)	7.12.~ 9.10.	전력공업부 소속 6명	중국 장자우
2010	가축배설물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기술교육 훈련	UNESCAP, 중국 농림부 바이오가스 연구소 (BIOMA)	5.25.~ 6.23.	국가과학 연구소 소속 10명	중국 청두

연도	사업명	주최	날짜/ 기간	참가 대상	장소
2010	자연자원과 재해관리를 위한 원격감지 및 GIS기술 활용교육	UNESCO, 북경대학교 원격 감지 및 GIS 연구소	11.1.~ 11.30.	국가과학 연구소 소속 6명	중국 북경
2010	도로사업 프로젝트 평가 및 실현가능성 연구	UNESCO, 아시아공과대학교(AIT)	7.12.~ 8.13.	북한 국토 환경보호성 소속 14명	태국 방콕
2011	새천년개발목표 달성에 필요한 평가업무를 위한 통계역량 강화	UNESCO, 필리핀통계연구훈련센터	5.23.~ 6.16.	북한 통계 중앙국 15인	필리핀 마닐라
2011	북한을 위한 경제개발 교육 프로그램	UNESCO, 한국전문가집단 지원	7월	-	태국 방콕
2011	자연자원과 재해관리를 위한 원격감지 및 GIS기술활용교육	UNESCO, 원격감지응용 프로그램 연구소(RSA), 중국과학원(CAS)	4.11.~ 7.15.	국가과학 연구소 소속 12명	중국 북경
2012	자연자원과 재해관리를 위한 원격감지 및 GIS기술활용교육	UNESCO, BAKOSURTANAL	3.19.~ 3.30.	국가과학 연구소 소속 6명	인도네시아 부고르
2013	무역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중국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UNESCO, 난카이대학교, 국제개발 중국센터	11.15.~ 11.30.	국가경제 발전위원회 소속 12명	중국 톈진
2013	2008년 국가통계 시스템 하의 국제비교를 위한 국가회계컴파일링기술교육	UNESCO, 통계연구 및 교육 센터(SRTC), 필리핀	10.9.~ 11.6.	통계청 소속 10명	필리핀 케손 시티
2014	금융회계 현장학습 및 트레이닝 워크숍	UNESCO, 조선익스체인지 싱가포르	2.17.~ 2.28.	재무부 소속 10명	싱가포르
2015	무역과 투자 촉진을 위한 법률 교육	UNESCO, 중국런민대학교	3.4.~ 3.13.	대외경제 관계부 등 소속 10명	중국 북경
2015	농업기계화 교육	UNESCO, 중국농업대학교	3.31.~ 4.21.	농업과학 연구소 소속 6명	중국 북경
2015	통계 및 지속가능 발전 교육과정	UNESCO, 필리핀 통계연구 및 교육센터(PSRTI)	4.20.~ 5.15.	중앙통계국 소속 10명	필리핀 마닐라

출처: UNESCO 내부 자료 및 남상민 UNESCO 동북아시아사무소 부대표 인터뷰(2019.9.25., 인천 송도)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UNESCAP 사업의 추진 방향 측면에서의 특징은 대부분 사업이 타 기관과의 공동주관으로 이뤄졌으며, 2014년 중국 텐진에서 진행된 북한관료양성에 대한 인력 교육 사업만 단독으로 주관하였다. 이는 경제 및 사회 분야의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UNESCAP의 특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UNESCAP이 대북 지식협력의 플랫폼을 제공하고 필요한 지식은 전문기관들이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공동주관으로 진행된 많은 사업이 중국 농림부 바이오가스 연구소, 아시아공과대학교, 중국과학원, 중국런민대학교, 중국농업대학교 등의 연구 또는 교육기관과의 협력으로 이루어졌으며, 인력 교육의 참가대상은 주로 공무원과 연구자이며 대부분이 기술자 또는 과학자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는 21개의 사업 중 국가과학연구소, 농업과학연구소, 전력공업부, 철도부와 같이 기술·과학 분야의 인력이 참가한 사업이 8건이며 화력발전, 통계시스템 등 기술에 관련한 내용의 사업이 주를 이루었다. 교육 장소 측면에서 UNESCAP은 대부분의 사업을 중국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진행하였는데, 21개의 사업 중 9건의 사업이 중국에서 진행되었고, 그 외 사업은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등 동남아 국가와 러시아에서 진행되었다. 2004년과 2007년 북한 공무원을 상대로 진행된 경제·경영에 대한 인력 교육 사업은 평양에서 진행되기도 하였다.¹⁰⁴⁾

UNESCAP은 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나, 이들 평가가 중간 혹은 과정 직후에 실시되는 과정 만족도 조사에 그치고 연수 사업 이후 연수자들이 본국으로 귀국하여 연수 분야와 관련한 북한 내 어떠한 변화에 기여하였는지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동북아 및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위한

104) UNESCAP 내부 자료 및 남상민 UNESCAP 동북아사무소 부대표 인터뷰(2019.9.25., 인천 송도).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보고서인 “Assessment Report of the Project”에 따르면,¹⁰⁵⁾ 2012년 중간 평가에서는 앞서 진행되었던 11개의 교육과정에 북한 고위관료들이 대거 참가함으로써 교통, 경제, 환경, 에너지, 통계 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뤄졌다고 평가하였다. 연수 참가자들의 연수 만족도를 조사한 2012년 중간 평가의 과정별 평가(5: outstanding, 4: very good, 3: average, 2: poor, 1: fail)에서는 대부분의 평가가 3점과 4점 사이였고 통계 과정은 5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는 2013년~2015년에 진행된 8개 과정에 대한 평가가 있었고, 이 평가에서는 과정들이 모두 북한 환경에 맞는 새로운 지식과 개발능력을 전수했다고 평가되었다.

UNESCAP이 발행한 “Report of the Legal Training on Facilitating Trade and Investment in the DPRK”는 중국 런민대학 법대에서 2015년 3월에 10명의 북한 관료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에 대한 보고서로,¹⁰⁶⁾ 본 과정은 나진선봉 경제무역 구역의 외국인 투자업무를 담당하는 북한 관료들에게 국제적인 규범과 경험을 전수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총 27개의 세션으로 구성된 본 과정에서는 합작 투자(joint venture),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등의 내용의 교육이 이뤄졌으며, 참가자들은 ‘중국의 경제특구와 양자투자협정’ 커리큘럼에 높은 만족도(high level of satisfaction)를 보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105) Assessment Report of the Project: Promoting Regional and Economic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with Particular Focus o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ESCAP 비공개자료).

106) Report of the Legal Training on Facilitating Trade and Investment in the DPRK (UNESCAP 비공개자료).

다. 특징 및 시사점

‘유엔전략계획 2017-2021’에서 제시한 북한과 국제사회와의 협력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대북 지식협력 분야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은 2013년 제3차 핵실험 이후 촉촉해진 대북제재 속에서 인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식량문제 해결에 이렇다 할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유엔전략계획 2017-2021’은 ‘식량 및 영양안보’를 최우선 순위에 배치하고 농업, 원예, 어업, 축산 부문에서 생산성 향상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목표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들 분야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식협력이 최우선 과제라고 할 수 있겠다.

둘째, 1990년 냉전의 해체와 함께 시작된 북한의 경제난으로 인해 무상의료치료제와 무상교육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았고, 선군주의 정책 하에 북한의 빈약한 분야, 즉 보건의료, 물과 위생, 교육 분야는 여전히 열악한 실정이다. 따라서 북한이 이들 분야에 대한 개선을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향후 북한을 대상으로 한 지식협력 사업 모색 시 북한의 보건의료 역량 강화, 물과 위생 분야의 개선, 양질의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하우와 기술 제공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교육분야와 관련하여 ‘유엔전략계획 2017-2021’은 직업훈련을 포함하고 있는데, 직업훈련 분야의 기술협력은 국제사회와 우리 정부가 개도국 대상 협력사업 시 집중하고 있는 분야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취약계층에 대한 재난 및 기후변화 대응력을 우선순위로 제시하고 있다. 이 분야는 북한이 ‘유엔전략계획 2007-2010’, 유엔전략계획 2011-2015’에도 포함한 분야로 경제난에 있는 국가들은 재난 인프라 구축 여력이 부족하고, 지속된 경제난 속에서 생존을 위한

임야 및 토지의 난개발이 낮은 수준의 자연재해에도 큰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 북한의 현실이다. 하지만 재난 대응 분야의 사업의 효과성은 주민 개개인을 대상으로 한 지식협력 사업보다는 정부의 정책과 관련한 역량강화가 더 중요한데, ‘유엔전략계획 2017-2021’이 환경, 기후변화, 재난관리 분야의 정부의 역할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 당국 및 관료 대상 지식협력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넷째, 지역 공동체와 취약계층에 대한 저렴하고 지속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현대적 에너지원에 대한 접근을 사업의 우선 요소로 제시하였다. 생명 유지의 측면에서 더위는 인간에게 치명적이지 않으나, 추위는 치명적인 요소로 WHO는 인간이 생존에 필요한 최소 에너지 열량을 산정할 때 그 국가나 지역의 위도, 지속된 경제난으로 인한 체력 및 영양 상태를 고려하여 추가적인 에너지 열량을 산정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은 위도 상으로 한국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겨울에 적절한 난방이 어려울 경우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다. 특히 북한 주민들은 경제난으로 인해 지속적인 에너지 부족 문제에 직면해 왔으며, 경제난이 초래한 영양부족은 만성적 체력 저하를 초래한 가운데 추위는 북한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러한 가운데 21세기에 인류는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신기술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최소한의 투자와 정책만으로도 값싸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원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에너지 분야의 지식협력은 북한 주민들의 삶에 있어 식량 및 영양안보와 견줄 만큼 중요한 이슈라고 하겠다.

다섯째, 북한은 ‘데이터와 개발관리’를 강조하며 국제사회와의 협력에 있어 필요한 가치, 원칙, 규범, 국제협약 및 조약, 표준, 접근법, 방법론 등 북한 인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사회개발 분야 학습과 관련 역량강화를 위한 지식협력을 우선분야로 제시하였다. 이는 북

한이 자국 내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기구와 협력할 때 국제사회가 준용하는 방식을 내재화하겠다는 것이고 이러한 내재화를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전수받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은 2015년 국제사회가 채택한 SDGs의 이행을 강조하면서 자국의 이행성과를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자발적 국가 검토(Voluntary National Review: VNR)’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기술을 UNESCAP으로부터 전수받아 2021년 7월 북한 VNR을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북한은 UNESCAP의 기술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VNR 보고서 작성이 가능했다고 언급하고 있는바,¹⁰⁷⁾ 이처럼 북한이 국제사회의 원칙과 규범, 표준, 접근법, 국제개발협력 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측정과 평가 기법 등에 대한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지식협력 사업을 북한에 대한 지식협력의 우선분야로 선정할 수 있다.

UNDP와 UNESCAP이 추진한 대북 지식협력 사업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이 2006년 제1차 핵실험을 실시하여 남북 및 북한과 국제사회의 관계가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UNESCAP이 최근까지 대북 지식협력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은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지식협력 사업 수행은 정치·군사적 부침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지속적인 관여가 가능한 방식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개성공단 사례와 같이 남북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남북한 양자 방식의 사업은 남북 정치 및 군사적 이슈로 인해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은 방식이다. 또한 통일 공공외교의 측면에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대북 지식협력 사업을 추진할 때 국제기구와의 협력이 중요한 추진 방식이 될 수

107)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June 2021., pp. 5~6.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남북 당국 간 지식협력이 쉽지 않은 과도기 단계에서 유엔 기구를 중심으로 하는 지식협력 추진을 상정해 볼 수 있다. 과거 UNDP, UNESCAP이 주요 기구였으나, FAO와 WFP는 북한에 대한 지원 사업 과정에서 북한의 역량강화 사업을 병행한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북한과 신뢰를 형성하고 있는 기구들을 중심으로 지식협력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 또한 WHO, WTO, UNESCO, UNICEF 등도 북한에 대한 지원 사업 경험과 관련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식협력 사업을 모색할 수 있는 파트너 기관이다. 특히 최근 북한이 SDGs 이행성과 보고 체계인 VNR에서 목표별 지표값 제시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많은 분야의 지표가 누락되어 있다는 점에서 목표별 유엔 기구를 매칭하여 북한의 통계역량 강화를 위한 지식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북한이 2010년을 전후로 국가경제발전전략에서 경제특구 중심의 경제발전 전략을 강조하고 있는바, 이러한 북한의 변화된 전략은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 사업을 통해 북한이 외부 세계로부터 경제특구 운용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 성과로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북한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발전 및 경제체제 전환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측면에서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시장경제 등 관련 지식과 기술을 전수하는 사업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유엔 산하 각 전문 분야별 운영되고 있는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북한 지식협력 유엔 플랫폼’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 한국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부를 중심으로 외교부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각 분야별 국책연구기관이 해당 기능별 유엔 기구와 협력의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체계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UNESCAP의 사례에서 보듯이 성과 평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대북 지식협력 사업의 양적, 질적 확대 시 성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평가 체계의 수립이 필요하다.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지속적으로 이데올로기 논쟁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는 점에서 어떤 분야보다도 사업의 투명성과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제시가 필요하다. 우리 정부의 대표적인 지식협력 사업의 하나인 KSP 사업은 성과 평가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국제기구의 성과평가 프레임워크인 MOPAN(Multilateral Organization Performance Assessment Network) 역시 불완전하나마 대안적 평가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이들 기존 평가 프레임워크를 북한 문제의 특수성, 사업의 특수성 등을 반영한 프레임워크로 개선하고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2. 국제NGO 및 기관의 대북 지식협력 사업 추진 현황

1996년부터 최근까지 북한을 대상으로 한 국제NGO의 지식협력 사업 현황을 분석하고 주요 특징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대북 지식협력 추진 방향을 모색할 때 국제NGO와의 협업체계 구축 등의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많은 국제NGO 및 기관이 대북 지식협력 사업을 수행하였지만 이 절에서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수행한 조선익스체인지, 한스자이텔재단, 아시아재단, UBC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표 III-5〉 국제NGO의 대북 지식협력 사업 기관별 추진 현황

주최기관	횟수	주최 프로그램	비고
조선익스체인지	53	소매시장조사, 경제연수, 경제특구와 지역경제 세미나, 금융구조 및 제도 개발, 인턴십 정책·경영·법률 분야, 경제연수회, 기업가 정신 워크숍, 미니 MBA 코스, 북한경제포럼, 여성사업가 프로그램(WB), 젊은 기업가 네트워크(YEN) 프로그램, 창업연수회, 특별경제구역연수회	최근 창업연수, 기업가 교육 프로그램 빈번
한스자이델 재단	44	경제연수회, 북한-유럽 무역증진 프로젝트 세미나, 현장학습, 북한 산림프로젝트, 산림관련 국제세미나, 중국산림연수, 특별경제구역연수회, 현장학습	자연, 환경 분야에 대한 지식전수
아시아 재단	18	호주국립대학 외교관 학위과정, 2001 국제컨퍼런스, 북한 도서지원 사업, 도서관 및 정보과학 현장학습, 북한관료 법률세미나	북한 도서 지원사업: 1998~2014년까지 25회 지원

출처: 사업추진 기관 면담 및 각종 언론 자료 등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가. 조선익스체인지(Choson Exchange)

조선익스체인지는 조사 기간인 1996년부터 2019년까지 총 53회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파악되며, 사업 빈도 및 적극성 측면에서 정부, 국제기구와 비교했을 때 가장 왕성한 대북 지식협력 수행 주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조선익스체인지는 싱가포르에 위치한 비영리 단체로 지리적으로 북한과 근접하며, 북한과 싱가포르 간 정치외교적 관계가 부정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지식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우호적 환경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조선익스체인지의 설립 목적과 주요 사업이 대북 지식협력 사업이라는 점에서 북한과 국제사회의 외교관계상의 부침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조선익스체인지의 대북 지식협력 사업의 특징은 북한 관료를 대상으로 할 뿐만 아니라, 민간인과 여성을 위한 맞춤형 지식협력 사업, 그리고 거시적 차원뿐만 아니라 카드결제, 민간은행, 외환취급 은행 설립

과 같이 현장에서, 그리고 시장경제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주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제도 및 시스템 구축 사업을 수행해왔다는 점에 있다.

〈표 III-6〉 조선익스체인지 대북 지식협력 사업 주요 추진 현황

연도	행사명	주최	날짜/기간	참가대상	장소	내용
2011	정책·경영·법률 분야	조선익스체인지	8월	북한관료 (20~30대) 7명, 스웨덴 SIDA 지원	싱가폴	- 정책, 경영, 법률분야 교육 - 김일성대, 고려은행, 대송은행 연수회
2012	경제연수	조선익스체인지	2월	2~3명	싱가폴	- 경제연수
2012	금융구조 및 제도 개발	조선익스체인지	3월	15~20명	북한	- 금융구조 및 제도개발
2012	인턴십	조선익스체인지	12월	20~30대 7명	싱가폴	- 회계법인 인턴십
2014	경제특구와 지역경제 세미나	조선익스체인지	1~3월	경제관료 180여명	싱가폴, 북한	- 경제특구개발 - 투자환경개선 - 지역개발
2014	경제연수회	조선익스체인지, 한스자이델 재단	4월	-	북한 나선	- 경제연수회
2014	소매시장조사	조선익스체인지	7월	평양 여성 (국내 교육 성적 우수자) 8명	싱가폴	- 소매시장조사
2014	금융회계 현장 학습 및 트레이닝 워크숍	UNESCAP, 조선익스체인지, 싱가포르	2.17.~ 2.28.	재무부 소속 10명	싱가포르	- 북한 공무원 및 전문가 (2명의 여성 포함)의 금융 회계 지식 교육
2015	특별경제구역 연수회	조선익스체인지, 한스자이델 재단	6월	나선시 행정부 직원 15명	북한 나선	- 나선시 투자방향 논의
2015	여성사업가 프로그램(WB)	조선익스체인지	-	여성 참가자 127명	북한 평양	- 창업방법, 마케팅, 프로젝트 운영 재무계획 커뮤니케이션 기타 사업 관련 주제 교육

연도	행사명	주최	날짜/기간	참가대상	장소	내용
2015	젊은기업가 네트워크(YEN) 프로그램	조선익스체인지	-	북한금융기관 대학, 경제연구소, 무역회사소속 74명	북한 평양	- 경영 및 은행대출 관련 워크숍진행 - 금융정책과 투자전략 설명
2015	미니 MBA 코스	조선익스체인지	3개월	YEN참가자중 11명 (북한경제 및 경영관료)	싱가포르	- 기업가정신, 창업 - 재정, 회계, 마케팅 및 운영 교육 - 신기술 혁신정책의 중요성, 혁신연구소, 정보기술업계에서 협업 등
2018	기업가 정신 워크숍	조선익스체인지	5.7.~ 5.9.	소상공인, 창업의지가 있는 북한주민 약130명, 전 세계강연자	평양	- 창업아이디어, 신상품구상 - 사업을 위한 비용을 계산
2018	창업연수회	조선익스체인지	11.3.~ 11.9.	조선익스체인지 창업교육 여비반 참가자들, 해외 전문가 16명	평성	- 창업아이디어 및 정보공유 - 온라인사업, 전자상거래 관련 교육 강화
2019	북한경제포럼	조선익스체인지	4.20.~ 4.27.	북한기업인 100여명, 유럽과 아시아 경제 전문가 17명	북한 평양	- 기업가정신 관리 및 경제정책에 대한 공유, 비즈니스 네트워킹 및 멘토링 - 경제 및 사업관련 지식과 경험을 전수

출처: 저자의 2018년 비공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

구체적으로 조선익스체인지는 소매시장조사, 경제연수, 경제특구와 지역경제 세미나, 금융구조 및 제도 개발, 인턴십, 정책·경영·법을 분야, 경제연수회, 기업가 정신 워크숍, 미니 MBA 코스, 북한경제포럼, 여성사업가(WIB) 프로그램, 젊은 기업가 네트워크(YEN) 프로그램, 창업연수회, 특별경제구역연수회 등과 같은 지식협력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교육 대상자 또한 일반 경제 관료에 제한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보였다. 조선익스체인지가 2016년 발표한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년 동안 이러한 지식협력 사업에 1천300여명이 참여했으며, 이중 여성이 230여명에 달한다고 보고하였고, 여성 참여자수는 2018년까지 500여명으로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조선익스체인지가 2015년 시작한 미니 MBA 프로그램을 통해 평양 관리를 대상으로 3개월 간 싱가포르에서 경영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싱가포르의 창업지원센터에서 인턴십 프로그램, 싱가포르 공과대학인 난양기술대학(NTU)과 협력으로 정규 경영학 석사과정, 나진시의 동명산 호텔에서 진행된 나진시 행정부 직원 15명에 대한 특별경제구역 관련 연수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특히 조선익스체인지는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창업훈련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북한 최초 ‘창업지원센터’ 설립을 지원하였다. 그 성과로 조선익스체인지는 북한이 자체 생산한 커피와 가루비누 등 소비재 신상품을 출시하기도 하였으며 2018년까지 약 17개의 스타트업이 설립되었다.¹⁰⁸⁾

나. 한스자이델재단

〈표 III-7〉 한스자이델재단 북한 지식협력 사업 주요 현황

연도	행사명	주최	날짜/기간	참가대상	장소	내용
2004	국제금융 세미나	한스자이델재단, 유럽-한국재단, 한국-유럽기술·경제서비스·경제 내각기구	6.28.~7.2.	중앙은행, 특수은행 관계자, 정부관료, 학자들 참석	평양	- 재정 및 통화정책 교육
2005	국제금융 세미나 II	한스자이델재단, 유럽-한국재단, 북한내각성경제기구	6월	중앙은행, 재정성, 관련기관대표단	평양	- 인플레이션 및 교환비율 교육

108) “조선익스체인지 6년 동안 북한인 1300여명 훈련,” 『노컷뉴스』, 2016.4.20., <<https://www.nocutnews.co.kr/news/4581835>> (검색일: 2021.8.29.); “북한에 스타트업 설립 꿈꾸는 조선익스체인지 창업자 제프리 시,” 『BBC NEWS 코리아』, 2018.6.10., <<https://www.bbc.com/korean/news-44429003>> (검색일: 2021.8.29.).

연도	행사명	주최	날짜/ 기간	참가대상	장소	내용
2006	현장학습	한스자이델재단, NagengstolDeggen- endorf 대학 내 응용과학센터	8월	북한 경제대표단	벨기에, 네덜 란드	- 브뤼셀 방문(산업장 및 교육기관 방문)
2006	북한-유럽 무역증진 프로젝트 세미나 (제1차)	한스자이델재단, 유럽연합	4.26.~ 4.27.	공공기관대표, 기업인40명	평양	- EU가 지원한 아시아 투자 프로젝트 교육 - 다국적 경영방식교육
2006	북한-유럽 무역증진 프로젝트 세미나 (제2차)	한스자이델재단, 유럽연합-한국 산업협력공단	7월	관리자 및 경제 부처 관료들 60명	평양	- EU가 지원한 아시아 투자 프로젝트 교육 - 무역정책의 경제적 효 과 교육
2007	EU-북한 무역역량 프로젝트	한스자이델재단, 독일기독교사회 연합	2007년 ~2009 년	북한 중견공무원	평양	- 국제경영 및 무역이론 전수 - 무역 관련 국제 제도 소개
2013	효율적인 지방행정	한스자이델재단	7월	정부관료 30여명	북한 평양	- 지방행정
2013	특구토론회	캐나다 UBC	10월	경제전문가 70여명	북한 평양	- 특구경험 토론
2014	시장경제 교육	한스자이델재단	연중	-	북한	- 시장경제교육
2014	경제연수회	조선익스체인지, 한스자이델재단	4월	-	북한 나선	- 경제연수회
2014	북한 산림 프로젝트	한스자이델재단, EU지원	2014.9. ~ 2017.10.	북한 대학생	독일	- 산림복구를 위한 재조림사업 지원 - 북한 산림 경영연구, 산림교육 - 지속 가능한 장기 산림 정책
2015	제1차 북한 습지 보호 워크숍	한스자이델재단	10.26.~ 10.30.	북한 행정 공무원	중국 평양	- 국제습지관리 계획 및 협력사업 교육 - 현재 관리 전략 및 미래 협력 방안 논의
2015	세계철새의 날 및 국제 생물다양성 의 날 기념 워크숍	한스자이델재단	5.15.~ 5.21.	북한 관계자, 한스자이델 재단 Korea, IUCN, 북경 임업대학교, 동아 시아-호주 Flyway 파트너십, Birds Korea 관계자 등	중국 북경	- 북한 환경보호를 위한 워크숍 및 교육 - 문덕공과 온천 습습지 방문

연도	행사명	주최	날짜/ 기간	참가대상	장소	내용
2015	Bird Surveys: 2015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한스자이델재단	9월~12월	북한 국토환경보 호성, 한스자이델 재단	북한 고성	- 고성 지역 해양 및 철새 확인조사를 통한 생물다양성 보존
2015	특별경제 구역 연수회	조선익스체인지, 한스자이델재단	6월	나선시 행정부 직원 15명	북한 나선	- 나선시 투자방향 논의
2015	1차 국제세미나	한스자이델재단, EU	5월	한스자이델 재단, 파드레 타살리오 랭어 신부, 북한 산림관리 연구기관 전문가 40여명	북한 평양	- 파종 조림(cluster afforestation)에 관한 교육
2015	1차 몽골 연수	한스자이델재단, EU	9월	한스자이델 재단, 북한 MoLEP, FMRI, 조선-유럽 연합협력조정처 (KECCA) 관계자	몽골	- 산림관리 방법과 연구 결과, 협력 메커니즘 등에 관한 연수 진행
2016	습지보호 워크숍 및 람사르 협약	한스자이델재단	9.2~9.9.	북한 관계자, 한스 자이델 재단 및 람사르 관계자	북한 평양	- 삼일포와 문덕군 현장 답사 - 습지관리 전략 및 람사르 지역 지정을 위한 기준 논의
2016	Bird Surveys : 2016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한스자이델재단	2월~12월	북한 국토환경보 호성, 한스 자이델 재단	북한	- 라선과 문덕군의 람사르 협약 이행 여부 확인 - 고성지역 생물 다양성 보존평가
2016	제10회 INTECOOL 국제회의	한스자이델재단	9.17.~9.23.	한스자이델 재단, 북한 환경부	중국 창수	- 동북아시아 해안가 습지 보존 및 활용 방안에 대한 회의 진행 - 습지 보존 지역 방문
2016	국제세미나 및 워크숍 : 재두루미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습지 생물 다양성 보존	한스자이델재단	8.11.~8.16.	북한 관계자, 몽골 환경관광부, 몽골 야생동물 보존센터, 몽골 과학아카데미, W/UCN Crane 전문가 그룹, IHWON 관계자 등	몽골	- 몽골, 러시아 및 중국의 개리나 재두루미 서식지 확인 - 철새들의 서식지 보존 및 식량 공급을 위한 지역 선정 및 프로젝트 플랜 논의

연도	행사명	주최	날짜/ 기간	참가대상	장소	내용
2016	환경협력을 위한 동북아시아 지역 프로그램 (NEASPEC) 국제세미나 및 워크숍	한스자이델재단	11.24.~ 11.31.	북한 및 한스자이델 재단 관계자	북경	- 국가 간 차후 협력 방안 논의를 위한 생물종 및 서식지 이해 - 동북아시아 국가 간 자연보호 현황 공유
2016	IUCN 멸종위기종 및 보호지역 훈련프로그램	IUCN, 한스자이델 재단, MoLEP 등	3월	북한 관계자, IUCN, 한스자이델 재단, MoLEP 등	북경	- IUCN 멸종위기종 및 보호지역 훈련 교육 진행
2016	재두루미를 통한 동아시아 습지생물 다양성보전 강화 국제 워크숍	ICF, WSCC, 한스자이델재단, EAAFP, UN NEASPEC, MoLEP 등	8월	북한 관계자, ICF, WSCC, 한스자이델재단, EAAFP, UN NEASPEC, MoLEP 등	몽골 울란바토르	- 재두루미를 통한 동아시아 습지생물다양성 보전 강화방안 논의
2016	황해/서해 조간대습지 보전을 통한 동북아시아 습지보전 및 현명한 이용 워크숍	RS, EAAFP, 한스자이델재단, MoLEP, NWC, CAS 등	9월	북한 관계자, RS, EAAFP, 한스자이델 재단, MoLEP, NWC, CAS 등	중국 장수성	- 황해/서해 조간대습지 보전을 통한 동북아시아 습지보전 및 활용방안 논의
2016	산림분야 관련 세미나	한스자이델재단, 국립산림과학원	11월	북한산림경영연구소원장, 연구원2인	북한 평양	- 재조림 산업 지식 공유 - 환경 및 산림 프로젝트 결과 보고
2016	몽골 산림 연수	한스자이델재단, EU	6월	한스자이델재단, 북한 산림 관계자	몽골	- 국가산림조사에 관한 연수 진행
2016	중국 산림 연수(제1차)	한스자이델재단, 북한국토환경보호성	6월	북한 산림관리원	중국	- 중국 광동성의 환경제 품기업 방문, 제품의 사용법과 생산법 교육 - 북경산림대학: 양묘장과 병충해 방제에 관한 발표 - 동관과 선전에 위치한 시범지역 방문

연도	행사명	주최	날짜/ 기간	참가대상	장소	내용
2016	산림관련 국제 세미나 (제2차)	한스자이델재단, 북한산림경영 연구소(FMR), EU지원	3월	독일산림전문가, 북한국토환경보호 성대표부	북한 평양	- 양묘장과 모목 분배 - 상서리, 평양산림 관련 지역 현장 방문 - 대상지(평안남도대동 군상서리) 방문
2016	산림관련 국제 세미나 (제3차)	한스자이델재단, 북한산림경영 연구소(FMR), EU지원	7월	산림분야 전문가	북한 상서리	- 국가산림자원조사 - 조사장비와기술의 현대화 - 독일국제협력단소속 전문가의방문
2016	현장학습	한스자이델재단, 북한산림경영 연구소(FMR), EU지원	-	북한산림경영 연구소 현지전문가들	북한 상서리	- 프로젝트시범지역답사 - 지속가능한산림관리 - 파종법의장점, 국내 산림관리기술및역량 교육
2017	습지관리 방 법론 워크숍 및 람사르 협약	한스자이델재단	3.3.~ 3.8.	북한 관계자, 한스 자이델재단, Birds Korea, 고려대학교, Pukorokoro Miranda Naturalist's Trust 관계자 등	북한 평양	- 습지 관리를 위한 방법 론 트레이닝 워크숍 진행 - 람사르 지역 지정을 위한 삼일포와 문덕군 현장조사
2017	황해 조간대 습지 및 철새보존 및 관리를 위한 워크숍	한스자이델재단	6.10.~ 6.15.	북한 관계자, 한스 자이델재단, EAAFP, IUCN 관계자	북한 평양	- 생태계 보존을 위한 황해 조간 대습지 및 철새 관리 정보 공유 - 국가적 보존 전략 논의
2017	Bird Surveys: 2017 설문 조사를 바탕 으로	한스자이델재단	1월~ 11월	북한 국토환경보 호성, 한스 자이델 재단	북한	- 생물종 변이 확인 및 새로운 연구 지역 탐색
2017	제9차 동아 시아-호주 플라이웨이 파트너십 (EAAFP) 국제회의	한스자이델재단	1.11.~ 1.15.	북한 EAAFP 관계 자 등	중국	- 2년 조류 보존 방안 논의 및 습지 활용을 위한 파트너십 체결

연도	행사명	주최	날짜/기간	참가대상	장소	내용
2017	국제세미나 및 워크숍: 북한의 환경 보존 및 활용 로드맵 개발	한스자이델재단	9.9.~9.15.	한스자이델 재단, 북한 국토환경보호성, WWF Hong Kong, Birds Korea, Ramsar 사무국 관계자 등	중국 홍콩	- 인식 함양 방안 논의 및 습지 기능 이해를 위한 스터디 투어 기획
2017	황해와 발해 만을 포함한 조간대 습지 관리와 보전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IUCN, 한스자이델 재단, EAAFP, Ramsar, RRC-EA, ME, MOF, MoLEP 등	12월	북한 관계자, IUCN, 한스 자이델 재단, EAAFP, Ramsar, RRC-EA, ME, MOF, MoLEP 등	중국 영성	- 황해/서해 보전을 위한 워킹그룹 구성에 대한 논의
2017	산림관련 국제 세미나 (제4차)	한스자이델재단, 북한산림경영연구소(FMRI), EU지원	3월	산림분야 전문가	북한 상서리	- 산림해충과 통합적 병해충관리 - 산림병해충의 예측, 감시, 예방및치료
2017	현장학습	한스자이델재단, 북한산림경영연구소(FMRI), EU지원	9월	북한 산림경영 연구소 소속 연구원 2명	몽골	- 독일국제협력단(GIZ), 몽골자연환경 녹색성장관광부, 산림자원 개발센터(FRDC) 등 방문 - 몽골산림분야의 전반적인 지식 공유 - 토양탄소측정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산림사용자집단의 체계 등을 다루는 프로젝트 현장 답사
2017	산림관련 국제세미나 (5차)	한스자이델재단, 북한산림경영연구소(FMRI), EU지원	9월	북한전문가 70여명 몽골산림전문가 2명	북한 평양	- 몽골에서의 산림 경험 공유 - 양묘관리, 산림병해충 관리, 산림 재고조사 의 법적 조건과 계획 및 이행 등
2018	습지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워크숍: 북한 과 동해안 설문을 바탕으로	한스자이델재단	5.15.~5.26.	북한 관계자, 한스 자이델재단, Birds Korea, EAAFP, IUCN 관계자	북한 평양	- 람사르 지정 지역 보호와 지속가능한 관리에 대한 논의

연도	행사명	주최	날짜/ 기간	참가대상	장소	내용
2018	Bird Surveys: 2018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한스사이델재단	2월~6월	북한 국토환경보 호성, 한스사이델 재단	북한 라선	- 라선 지역 조류 및 양서류 연구 및 새로운 연구 지역 탐색
2018	람사르 협약 국제 회의	한스사이델재단	10.20.~ 10.27.	한스사이델 재단, IUCN, EAAFP, Ramsar 관계자	두바이	- 람사르 가이드라인 하에서 북한의 습지 통합 보존 방법 점검
2018	제10차 동아시아-호주 플라이웨이 파트너십(EAAFP) 국제회의	한스사이델재단	12.9.~ 12.14.	북한 관계자, EAAFP 관계자, 관련 IGOs, INGOs, 기업 등	중국	- 동아시아-호주플라이웨이의 철새서식지 확인 및 미래 협력 방안 논의 - 파트너십 효율성 증대를 위한 방안 논의
2018	붉은기슴 흰죽지 보존을 위한 국제세미나 및 워크숍	한스사이델 재단	3.17.~ 3.21.	한스사이델재단, 북한 국토환경 보호성 관계자	중국 북경	- EAAFP 플랜 점검 및 2018-2019 프로젝트 논의 - 붉은기슴 흰죽지 보존을 위한 방안 논의
2018	황해 및 서해 조간대 습지 보존 및 관리를 위한 국제 세미나 및 워크숍	한스사이델 재단	7.9.~ 7.13.	북한 프로젝트 매니저, EAAFP 관계자, Wadden Sea 사무국 관리자, Birdlife International, IUCN 등	중국 옌청	- 람사르 지역 보존사례 공유 및 협업방안 논의 - 동아시아 습지 보존을 위한 국제네트워크 형성 방안 논의
2018	국제세미나 및 워크숍: 조간대 습지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심포지움	한스사이델재단	11.15.~ 11.17.	한스사이델재단, 북한 국토환경보 호성 관계자 등	중국 옌청	- 황해 조간대습지 관리를 위한 지역적 협력 촉진 방안 논의 - 연청지역 조간대습지 관리 프레임워크 개발
2018	물새 보존 관련 브리핑	한스사이델재단	6.11.	Ramsar, WWF, 한스사이델재단, EAAFP 관계자	한국 인천	- 진행 중인 물새 및 습지 보존 방향에 대한 내용 브리핑
2018	제13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 사전 준비 회의(Pre-COP)	RS, RRC-EA, IUCN, 한스사이델 재단, ME, MoLEP 등	2월	북한 관계자, RS, RRC-EA, IUCN, 한스사이델재단, ME, MoLEP 등	스리랑카 칠라우	- 제13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 사전준비

연도	행시명	주최	날짜/ 기간	참가대상	장소	내용
2018	황해/서해 보전을 위한 워킹그룹 회의	RRC-EA, IUCN, 한스자이텔재단, MoLEP, WWF China, WWF Hong Kong, MoLEP 등	7월	북한 관계자, RRC-EA, IUCN, 한스자이텔재단, MoLEP, WWF China, WWF Hong Kong, MoLEP 등	중국 상해	- RRC-EA 습지관리자 교육 병행
2018	제13차 람사르 당사국총회	RS, RRC-EA, IUCN, 한스자이텔재단, MoLEP, EAAFP, ME, MOF 등	10월	북한 관계자, RS, RRC-EA, IUCN, 한스자이텔재단, MoLEP, EAAFP, ME, MOF 등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 사이드 이벤트 개최
2019	축산 교육	한스자이텔재단	5월	평안남도 목장 전문가	중국 친저우, 핑두	- 중국목장현장방문 - 건강, 위생, 동물약품, 사육, 동물성사료, 소 농장 구성의 현대화 - 친저우 지속적인 지방 개발에 대한 컨퍼런스, 핑두 지속적인 지방 개발을 위한 직업 교육 참여
2019	Bird Surveys: 2019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한스자이텔재단	1월~3월	북한 국토환경보호성, 한스자이텔재단	북한 라선	- 서쪽지역 강가 조류 서식지 조사 및 확인 - 두 차례의 Bird Watching 현장 답사
2019	지역 세미나: 한국 환경 보전 및 협력	한스자이텔재단	5.17	한스자이텔재단, Ramsar, EAAFP 관계자	한국 서울	- 기존 환경보존 및 협력 내용 브리핑 - DPK 프로젝트 이후의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

출처: 저자의 2018년 비공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

한스자이텔재단은 독일의 통일 경험을 공유하고, 남북 간 화해정착과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1987년 서울에 사무소를 개소한 이후 북한의 농촌개발, 남북 화해협력을 위한 교류지원 사업을 실시해왔다. 한스자이텔재단은 서울사무소를 통해 총 44회의 대북 지식협력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집계된다.¹⁰⁹⁾ 구체적인 지식협력 주제를 살펴

보면 경제연수회, 북한-유럽 무역증진 프로젝트 세미나, 현장학습, 북한 산림프로젝트, 산림관련 국제세미나, 중국산림연수, 특별경제구역연수회, 현장학습 등이다.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지식협력 사업 초기 한스사이텔재단 또한 시장경제 등 경제분야에 대한 지식협력을 주제로 하였다. 하지만 북한과 국제사회의 대립이 격화되는 가운데 비정치적, 비경제적 이슈로의 주제 전환을 통해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실제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대부분 자연, 생태계, 산림에 관련된 지식협력 사업이 주를 이루었다.

구체적으로 2016년 14건 그리고 2017년과 2018년 사업은 총 24건에 달한다. 사업형태는 단독 또는 공동의 형태로 개최한 한스사이텔재단은 대부분 산림, 환경보호를 위한 사업을 진행했으며, 2018년과 2019년에는 조류 및 양서류에 대한 주제로 지식협력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환경 분야에 초점을 맞춘 한스사이텔재단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개발과 관련된 프로젝트 또한 진행하였다. 이 분야에 대한 사업으로 2007년 이후 북한 산림복원 지원을 위해 산림전문가 독일연수,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국제조류보호협회 아시아지부(BirdLife Asia)와 국제두루미재단(International Crane Foundation)과 함께 안변 두루미 서식지 복원을 위한 시범사업, 2014년부터 2018년 유럽연합과 북한의 식량안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속가능한 조림프로젝트를 진행하였으며, 이외에도 조류와 서식지(습지) 보호 분야의 지식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¹¹⁰⁾

이처럼 한스사이텔재단은 비정치 분야로 지식협력 사업을 위한 주제 변화를 꾀함으로써 북한과 국제사회 간 대립 상황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북한에 대한 관여(engagement)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특히 비정치적 기관의 강점을 활용하여 북한에 대한 신뢰를 확보함으

109) <표 III-7> 한스사이텔재단 북한 지식협력 사업 주요 현황 참조.

110) 위의 자료.

로써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있는 점 또한 이 사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한스자이델재단의 한국사무소 수석연구원인 최현아 박사가 “(한스자이델재단은) 이러한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남북이 직접 논의하여 진행하는 것보다는 환경, 경제, 스포츠 및 문화, 의료, 장학사업 등 인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독일정치재단을 포함한 국제 네트워크를 활용한 다자간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때 신뢰 구축을 위한 준비단계로 지식 교류와 정보교류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언급한 부분은 대북 지식협력 사업의 추진 방식에 있어 유의미한 함의를 제공한다고 하겠다.¹¹¹⁾

다. 아시아재단

〈표 III-8〉 아시아 재단의 대북 지식협력 사업 주요 현황

연	행사명	주최	날짜/기간	참가대상	장소	내용
1997	호주국립대학 외교관학위 과정(제1차)	아시아재단, 유엔개발계획(UNDP), 사카와평화재단, 호주국립대학(ANU)	1997.7. ~ 1998.6.	통계청 관료 5명	호주	- 시장경제체제에서의 관리경제
1998	북한관료 법률세미나 (제1차)	뉴욕주립대 법대, 중국북경대학, 아시아재단	-	사회과학원, 대외경제 협력부, 김일성 종합대학, 재정성관계자	중국 북경	- 국제분쟁조정법, 사업운영관리법 - 4일간의토론, 현장 학습 프로그램 평가
1998	Books for Asia	아시아재단	1996. ~ 현재		북한	- 평양외국어대학, 인민대학습당, 김책 공업대학, 김일성 대학을 비롯한 우수 기관에 약 20만 여 권에 달하는 사적 재단의 도서 기증 사업을 통하여 지원

111) “[통일광장] 독일정치재단의 남북협력 위한 지원,” 『통일신문』, 2019.10.31., <https://www.unityinfo.co.kr/sub_read.html?uid=30786§ion=sc6> (검색일: 2021.8.29.).

연	행사명	주최	날짜/기간	참가대상	장소	내용
1999	북한관료 법률세미나 (제2차)	뉴욕주립대 법대, 중국북경대학, 아시아재단	-	사회과학원, 무역성, 김일성종합 대학	중국 북경	- 파산, 계약, 합지 관련법규 - 중국 경제자유구역 산업시찰
2000	북한관료 법률세미나 (제3차)	뉴욕주립대 법대, 중국북경대학, 아시아재단	-	사회과학원, 무역성, 김일성종합 대학	중국 북경	- 국제사업계약, 기술 라이선스합의서, 합작회사설립계약 - 중국 경제특구지역 방문
2000	농업 지식 공유	아시아재단,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Cornell University			미국	- 3회에 걸친 북한/ 미국 농업 지식 공유
2001	북한관료 법률세미나 (제4차)	뉴욕주립대 법대, 중국북경대학, 아시아재단	-	사회과학원, 무역성, 김일성종합 대학	중국 북경	- 국제사업계약, 기술 라이선스합의서, 합작회사설립계약 - 중국 경제특구지역 방문 및 질의 응답 시간
2001	국제컨퍼런스	아시아재단	-	북한 경제부처 관료 50명	중국 상해	- 국제법, 무역법 분쟁 조정 과정에 대한 4번의 컨퍼런스 개최
2001	북한관료 법률세미나 (제5차)	뉴욕주립대 법대, 중국북경대학, 아시아재단	4월	사회과학원, 대외경제협력 촉진위원회, 김일성대학, 재정성관계자	중국 상해	- 경제자유구역에서의 조세, 재정·무역, 법률, 행정 및 관리 법 교육 - 5일간의 강의 토론 - 2박 3일간 현장학습
2001	Korean Sharing Movement 컨퍼런스	아시아재단, The Mansfield Center for Pacific Affairs	2001.	유럽, 미국, 남한, 일본 관련 NGO 및 국제기구 대표		- 북한 인권, 식량, 의료 등의 문제에 대한 지원의 방향성 논의
2001	평양 외국어 대학 미국 연수단	아시아재단, Pyongyang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2001.	평양외국어 대학 학생	미국	- 평양 외국어 대학생 대상 미국 연수단 구성 영어 교육 제공

연	행사명	주최	날짜/기간	참가대상	장소	내용
2002	도서관 및 정보과학 현장학습 (제1차)	아시아재단	1월	교육부관료, 김책공대, 인민대학습당관계자들	미국샌프란시스코, 보스턴, 워싱턴 DC, 뉴욕	- 산업시찰
2004	결핵 치료 교육	아시아재단, Eugene Bell Foundation	2004.		황해	- 북한 결핵병원 상태 진단 및 북한 의사 대상 결핵 치료 교육
2013	북한 도서지원 사업	아시아재단	9월	아시아재단 부총재, 이사, 한국지부대표, 인민대학습당 김일성대, 평양외대교수진, 교직원	북한 평양	- 김일성대 의대 도서관, 평양외국어대 방문 - 기증받은 서적을 지방 도서관을 포함한 60개 이상의 기관에 배부
2013	북한의 경제 전환: 타 아시아 국가로부터의 교훈	아시아재단, 아산정책연구원 공동 주관하고, 베트남 국립외교원 주최	2013.	(대만, 라오스, 미국, 베트남, 중국, 한국, 호주) 전문가들	몽골, 베트남 하노이	- 성공적인 체제 전환을 이룬 각 국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의 경제체제 전환 가능성에 대해 토의
2014	북한 도서 지원 사업	아시아재단	-	-	북한	- 약 12,000권의 영문 서적 기증 - 북한 내 60개 이상의 도서관 및 교육기에 기증
2015	동북아시아 시장 포럼	아시아재단		한국, 북한, 몽골, 중국, 일본 등의 주요 도시 시장	몽골 울란바토르	- 녹색 성장을 주제로 한국, 북한, 몽골, 중국, 일본 등의 주요 도시 시장 초청

출처: 저자의 2018년 비공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

아시아재단의 경우 총 18회 대북 지식협력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파악된다. 아시아재단은 국제기구 및 타 기관과 협력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향이 높으며, 아시아재단은 샌프란시스코 본부와 서

울사무소에서 각각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샌프란시스코 본부에서는 북한 대표단을 미국으로 초청하여 인터넷 기술, 포도주 재배, 영어 교육 등 다방면에 걸친 교육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또한 뉴욕대, 시라큐스대, 북경대와 같은 해외 대학들이 아시아재단과 협력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였다.

미국에 본부를 둔 아시아재단의 특성상 2014년에 들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동참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사업을 중단했으나, 이전까지 아시아태평양안보협력회의(CSCAP)를 통해 북한 대표단을 초청하여 지역 안보문제에 대한 논의를 여섯 차례 진행하기도 하였다. 또한 아시아재단은 지식협력의 대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도서관 및 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협력 대상 또한 북한의 대학을 중심으로 하였다는 특징을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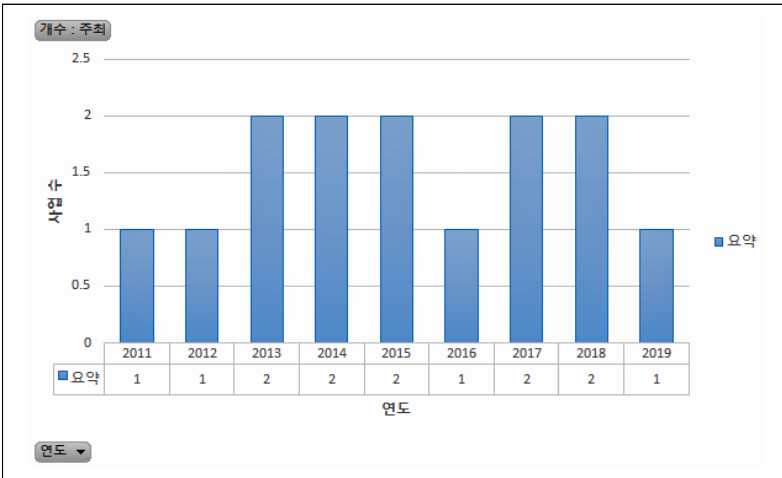
라. 브리티시 컬럼비아대학교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대학교(이하 UBC)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총 11건의 중기(약 6개월) 북한인력 교육 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UBC의 북한인력 교육 사업은 UBC의 한국학연구소의 소장인 박경애 교수 1인의 노력과 헌신에 의해 이루어진 사업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캐나다-북한 지식 파트너십프로그램(Canada-DPRK Knowledge Partnership Program: KPP)’ 하에 추진된 북한인력 교육 사업은 북한 대학교수들을 캐나다로 초청하여 약 6개월 동안 UBC 대학의 거시경제, 미시경제, 조직경영, 무역, 재정 분야 정규 강의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주요 대상은 김일성 종합대학, 인민경제대학, 평양외국어대학 등 북한 내 엘리트 그룹이다. KPP는 UBC에서 이루어지는 교수 연수 프로그램(11회) 외에 북한 내에서 진행되는 국제회의와 해외 현장학습의 형태(3회)로도 진행되었는

데, 북한 내에서 이루어진 사업은 해외 학자들을 북한으로 초청하여 경제특구 활성화 방안과 특구 방문 프로그램이었다.¹¹²⁾

〈그림 III-1〉 UBC의 북한 지식 협력 사업 현황

(단위: 건)



출처: 박경애 UBC 한국학연구소 소장 인터뷰(2019.11.28.~30., 캐나다) 및 보도자료¹¹³⁾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KPP 사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던 데는 교육 분야 및 사업 운영관리 측면에서 비정치적인 접근법을 강조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러한 지식협력 사업의 성과로 북한의 경제특구 관련 지식이 향상된 것으로 추정된다. KPP 교육과정 참가자들은 북한에 돌아가 캐나다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새로운 강의를 개설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저서 집필 및 관료들의 정책 자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112) 〈그림 III-1〉 UBC의 북한 지식 협력 사업 현황 참조.

113) “방북길서 막 돌아온 박경애 UBC 교수 인터뷰”, 『주간조선』, 2017.8.21.,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471100008>> (검색일: 2021.9.28.).

2011년 경제교육을 받고 간 교수들은 2012년 북한의 '6.28조치(협동농장 농민들한테 수익의 30%를 보장한 조치)'를 만드는 성과를 낸 것으로 알려졌으며, 북한 당국의 경제특구 계획이 활성화된 시점이 KPP 프로그램 시행 이후라는 점에서 북한인력 대상 지식교육 사업의 성과가 확인된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¹¹⁴⁾

마. 특징 및 시사점

국제NGO들은 이들이 가지는 정치적 자율성과 단체의 뚜렷한 설립 목적을 기반으로 국제기구나 특정 정부보다 더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대북 지식협력 사업을 전개하였다. 이들 국제NGO의 북한 지식협력 사업 추진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도출되었다.

첫째, 조선익스체인지, 한스자이텔재단의 경우 민간단체로서 갖는 정치적·재원적 자율성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였다는 점이다. 국제기구 및 정부의 대북 지식협력 사업은 사실상 북한이 핵개발을 본격화한 2013년을 전후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이들 국제NGO들은 비정치적 영역의 주제를 중심으로 북한 주민, 당국, 관료, 학계에 대한 지식협력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대북제재 하에서도 북한에 대한 지식협력 사업을 지속할 수 있었다. 재원적 측면에서 조선익스체인지와 UBC, 한스자이텔재단이 북핵 문제와 대북제재가 강화되는 가운데 정부 지원 재원보다는 자체적 예산 확보를 통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 따라서 국내 기관이 우리 정부 재원에 높게 의존하기 때문에 남북관계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점은 향후 북한 지식협력 사업의 재원구조에 대한 함의를 제공한다고 하겠다.

114) 박경애 UBC 한국학연구소 소장 인터뷰(2019.11.28.~30., 캐나다).

둘째, 국제NGO들이 다른 비정치적 영역의 주제들 그리고 지속적인 지식협력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일례로 조선익스체인지의 지식협력 사업의 성과로 17개의 스타트업 기업이 설립된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들 민간기업 설립 및 기업가 정신의 확산은 시장경제의 발전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또한 조선익스체인지의 경우 여성 등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국제사회가 강조하고 있는 젠더적 관점에서의 발전역량 강화라는 전 지구적 노력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한스자이텔재단의 자연 및 환경 분야, 동식물 자원 분야의 지식협력 사업은 북한으로 하여금 식물, 환경, 생태 자원 분야 국제협력 메커니즘에 북한을 포함시키는 성과를 거두었고, 무엇보다도 국제기구 및 정부의 북한 지식협력 사업이 경제 영역에 치우친 가운데 국제 NGO라는 특수성이 있었기에 자연 및 환경 분야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자율성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셋째, 국제NGO의 설립 목적에 기반한 강한 사명감은 사업 주제의 확장성 및 협력 네트워크 측면에서 긍정적 요소로 작용한다. 조선익스체인지는 북한의 긍정적 변화에 대한 지원, 한스자이텔재단은 통일 독일의 경험을 한반도와 공유하기 위한 목표의식을 바탕으로 활동하는 단체이다. 이러한 강한 사명감과 목표의식을 바탕으로 북한에 대한 비우호적 국제 정세 속에서도 다양한 자원, 협력 파트너 모색을 바탕으로 북한에 대한 지식협력 사업을 수행할 수 있었다. 특히 국제NGO들이 특정 주제에 대한 지식협력을 위한 전문가 및 단체를 협력체제로 하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다양한 주체를 포함하는 국제사회의 북한 이슈에 대한 공감대와 인식 확산의 순기능을 기대할 수 있다.

끝으로, 이들 비정부 기구들은 국제기구 및 정부 주도의 지식협력 사업이 북한 관료들에 집중된 것과 달리 북한 주민, 전문가, 학계,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사업 형성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장점을 가진다. 사회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지식협력 사업 계획 시 지식협력 사업의 대상은 정부 관료, 학계, 민간기업, 주민, 전문가 그룹 등 다양하다. 국제기구와 정부 차원의 지식협력이 주로 관료 중심, 전문가 그룹 중심으로 수행된다고 가정한다면, 주민, 민간기업, 기업가를 대상으로 한 지식협력 사업은 국제NGO가 수행하는 분업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국제NGO의 지식협력은 의미가 있다.

IV. 한국의 대북 지식협력 사업 추진 현황



1. 정부의 대북 지식협력 사업 추진 현황

먼저 남북 지식협력 수행을 위한 통일부의 조직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대북지원 업무는 통일부가 관장하는 가운데, <표 IV-1>에서 보듯이 남북 지식협력과 관련이 있는 대북지원 업무는 통일부 조직 내에서 인도협력국의 인도협력기획과, 교류협력실의 개발지원협력과, 교류지원과로 분산되어 수행되고 있다.

<표 IV-1> 통일부 대북지원 직무 현황

<p>인도협력국 인도협력기획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된 통합적 관리를 위한 계획의 수립, 업무의 조정 및 사업 승인 시 협조 - 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된 통계 업무의 종합·조정 - 인도적 대북지원(제8조제7항제1호에 따른 개발지원협력은 제외)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립 - 정부차원의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 계획의 수립·시행 및 사후 관리 - 민간단체 및 국제기구의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에 대한 기획·조정·승인 및 지원 등
<p>교류협력실 개발지원협력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지원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 개발지원협력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립 - 개발지원협력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및 사후 관리 - 민간단체 및 국제기구의 개발지원협력사업에 대한 기획·조정·승인 및 지원 - 개발지원협력과 관련된 남북한 간 실무회담 대책의 수립 - 개발지원협력에 관한 동향의 분석 및 통계 유지 등
<p>교류협력실 교류지원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된 물자 반·출입 관리의 지원 총괄 - 전략물자의 대북반출 관리 정책의 수립·시행 - 남북교류협력 동향의 종합 및 분석 - 남북관계 관련 통계의 총괄 및 대국민 제공에 관한 사항 -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국제협력 업무 - 남북교류협력 관련 기관·단체의 지도·육성 및 관리 등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시행 2021. 9. 24., 통일부령 제116호, 2021. 9. 24., 일부개정), <<https://www.law.go.kr/lawBodyCompareInfrn.do?lsNm=%ED%86%B5%EC%9D%BC%EB%B6%80%EC%99%80%20%EA%B7%B8%20%EC%86%8C%EC%86%8D%EA%B8%B0%EA%B4%80%20%EC%A7%81%EC%A0%9C%20%EC%8B%9C%ED%96%89%EA%B7%9C%EC%B9%99&gubun=Ls&ancYnCnk=0&tblid=81>> (검색일: 2021.8.10.)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

통일부 직제규정 상 지식협력이 명시적으로 적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교류협력실의 교류지원과에서 남북 지식협력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남북협력기금에 지식협력 사업도 편성되어 있는데, 교류지원과에서 남북협력기금의 지식협력 사업을 관장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남북협력기금의 재정지원을 통하여 민간 및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역량 강화를 포함한 지식협력 유형의 사업을 지원하여 왔다.

가. 당국 간 지식협력의 추진

정부는 2000년대 주로 쌀과 비료 등 긴급구호성 물자를 대규모로 직접 지원하였다. 이러한 대북지원의 성격으로 인해 지식협력 성격의 당국 간 직접 협력은 사실상 추진되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남북 당국 사이의 개발협력에 대한 협의 및 합의 과정에서 남북 지식협력도 추진될 수 있는 합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었다.

2018년 4월 판문점선언을 계기로 남북한은 우선적으로 산림 분야와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개발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분과회담을 개최하였다. 2018년 7월 4일 남북은 제1차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을 개최하여 공동보도문을 발표하였는데, “남과 북은 산림 조성·보호 분야에서 이룩된 과학기술 성과들의 교류를 비롯하여 산림과학기술 분야에서 적극 협력”(제3항)하기로 합의하였다.¹¹⁵⁾

또한 2018년 11월 7일 남북보건의료 분과회담을 개최하여 공동보도문을 발표하였는데, 남과 북은 전염병 유입과 확산 방지를 위해 쌍방 사이의 정보 교환과 대응체계 구축문제들을 협의하고 기술협력 등 필요한 대책들을 세워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2018년 내에 전염병 정보교환을 시범적으로 실시(제1항)하기로 합의하였다.

115) 제1차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 공동보도문, 2018.7.4.

이상의 두 분과회담 합의를 통해 남북 당국은 산림분야와 보건의료분야 개발협력을 추진하면서 ‘기술협력’ 형태의 지식협력도 병행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민간 협력의 대북 지식협력 사업의 추진

정부는 당국 간 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으면서 파급효과가 큰 개발지원성 사업은 민간단체로 하여금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는 관계기관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2007년부터 이러한 사업을 정책사업으로 정하고 사업비 전액을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해 왔다.¹¹⁶⁾

정부는 ‘정책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지식협력을 추진하였는데, 구체적 사업의 하나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주관한 ‘북한 의료인력 교육사업’을 들 수 있다.¹¹⁷⁾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2007년, 2008년, 2009년 통일부 정책사업으로서 ‘의료인력 교육 사업(GMP교육사업)’을 진행하였다. 동 사업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1차 5개년 사업으로 ‘독·조 의학협회’와 북한 보건성, 독일 현지병원 간의 협력으로 수행되어 오던 것으로, 한국보건의료재단은 2007년부터 시작된 2차 5개년 사업에 참여하였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독일 NGO 단체인 독-조의학협회(German-North Korean Medical Association)와 공동으로 독일 현지병원에서 향후 5년간 매년 10명씩 북한 의료인 훈련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북한 의사는 구강외과, 흉부외과, 복부외과, 피부과,

116) 통일부, 『남북협력기금백서 2008』 (서울: 통일부, 2008), p. 61.

117) 통일부, 『통일백서 2008』 (서울: 통일부, 2008), p. 225; 통일부, 『통일백서 2009』 (서울: 통일부, 2009), p. 139; 통일부, 『통일백서 2010』 (서울: 통일부, 2010), p. 121; 통일부, 『남북협력기금백서2008』, p. 63;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북한보건의료백서』 (서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2019), p. 332;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10년사: 2006-2016』 (서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2016), p. 201.

척추전문정형외과, 심장내과 각 2인씩으로 독일의 쾰른, 프라이부르크, 아헨지역 대학병원에서 교육연수를 받았다. 2008년에는 북한의 의사 및 간호사를 평양 현지와 제3국(중국)으로 초청해 1년간의 일정으로 기초 및 전염성 질환을 위주로 의료이론 및 임상교육과 의료장비 작동 교육연수를 실시했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과 ‘어린이어깨동무’가 공동으로 추진했다.¹¹⁸⁾ 2015년에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을 통한 북한 의료인력 교육 사업에 기금 1억 원이 집행되었다.¹¹⁹⁾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남한 민간단체가 건립한 북한 제약공장에 원료의약품을 지원하여, 기초의약품 생산으로 북한 주민들의 질병치료에 기여하고자 2008년 ‘제약공장 의약품 생산협력사업’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제약공장 전문가 기술교육을 실시하였는데, 북한의 제약공장 관계자들이 중국 북경에서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였다.¹²⁰⁾

정부는 ‘대북지원민관정책협의회’를 통해 보건의료 등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분야 및 장기적 복구가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민관 ‘합동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였다.¹²¹⁾

2005년에는 5개 시범 합동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축산사료 자급 시범사업’으로 사료공장 시설개선, 사료생산 자재 및 기술 지원, ‘보건의료 인프라 개선 시범 사업’으로 의료기술과 의료장비 수리·관리 기술 지원, ‘모자보건·복지 시범 사업’으로 의료·위생·교육 사업을 추진하였다.¹²²⁾

118)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10년사: 2006~2016』, p. 201.

119) 통일부, 『통일백서 2008』, p. 225; 통일부, 『통일백서 2009』, p. 139; 통일부, 『통일백서 2010』, p. 121; 통일부, 『남북협력기금백서 2008』, p. 63;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북한보건의료백서』, 2019, p. 332;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10년사: 2006~2016』, p. 201.

120)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10년사: 2006~2016』, p. 201, p. 306.

121) 통일부, 『통일백서 2006』, p. 180.

122) 위의, p. 181. 책

2006년에는 5개 합동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강남군 지역개발 사업을 통한 지역주민 종합복지 모델 개발 사업’으로 영양, 보건, 교육, 위생 사업, ‘복토직파신기술을 이용한 남북농업협력 증진 사업’으로 쌀 생산성 향상 및 생력재배기술 보급을 추진하였다.¹²³⁾

2008년에는 2개의 합동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종합검진·검사센터 개설’ 사업으로 의료기술 전수를 추진하였다.¹²⁴⁾

정부는 2005년 북한의 영유아와 산모들의 전반적인 영양 및 보건상태를 시범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고 민간단체가 사업을 실행하는 민관협력 방식의 ‘북한 영유아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다. 북한 영유아와 산모들을 대상으로 분만 및 산전 산후관리, 건강 및 질병관리, 영양, 보건교육, 환경위생 등 모자보건과 관련한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영양개선, 질병관리, 건강관리 부문으로 영역을 나누어 민간단체의 컨소시엄 형태로 추진되었다.¹²⁵⁾

북한 영유아 지원 사업은 계획 수립과 진행 과정에 많은 전문가들이 동참, 기술자문단을 구성하는 모델을 창출하였다. 정부는 북한 영유아 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1월 7일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사업관리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영양사업 추진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통일부의 자문기관으로 선정돼 민간단체들과 함께 사업 현장을 방문하면서 사업의 매 과정을 확인하는 등 자문단으로 활동했다. 기술자문단은 북한 의료 인력에 대한 기술교육 계획 수립 및 기술 지원의 역할도 수행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 결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한 남한 전문가들과 북한의 영양 및 보건의료 전문가들 간의 간담회가 진행되기도 하였다.¹²⁶⁾

123) 통일부, 『통일백서 2007』, p. 139.

124) 통일부, 『통일백서 2009』, p. 138.

125) 통일부, 『남북협력기금백서 2008』, p. 64.

126) 『통일백서 2009』, pp. 140~141;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나눔과 평화의 길, 그스무 해의 여정』 (서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2016), pp. 257~263.

정부는 산림·농축산·환경 등 전문분야의 비정치적인 남북 간 학술 교류를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한 및 국제사회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2019년 「제25차 세계산림 연구기관연합회(IUFRO) 총회」(9.29.~10.5., 브라질)에 참석한 북한 산림관계자와 우리 전문가와의 학술교류를 지원하였다. 또한 2019년 12월 「제25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12.2.~13., 스페인)에서 북한 국토환경보호성 관계자 등과 우리 전문가들이 북한 온실가스·미세먼지 동향 및 감축계획, 환경 분야 관심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¹²⁷⁾

또한 정부는 북한물문제연구회를 통해 북한 관계자의 유럽담수화 학회(European Desalination Society: EDS) 참석을 지원하였다. 2018년 9월 3일부터 6일까지 그리스 아테네에서 개최된 학회에 북한 국가자원개발성·도시경영성·평양신기술정보센터 관계자 및 우리 관계자가 참가하였다. 이 학회를 계기로 남북 상하수도 현황 등 수자원 관련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¹²⁸⁾

정부는 겨례의 숲과 북한의 국토환경보호성이 공동으로 개최한 「동북아 산림협력 국제회의」를 지원하였다.¹²⁹⁾

다. 정부·국제기구·국제NGO 협력을 통한 대북 지식협력의 추진

정부는 국제기구 및 국제NGO와 협업하여 대북 지식협력 사업을 추진하였다.

먼저 정부는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북한의료인력 교육을 위한 지식협력 사업을 진행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영유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06년-2007년 WHO와 북한 보건의료 인력 교육 사업을 실시하였다.

127) 통일부, 『통일백서 2020』, pp. 80~81.

128) 통일부, 『통일백서 2019』, p. 159.

129) 통일부, 『통일백서 2018』, p. 78; 통일부, 『통일백서 2019』, p. 159.

WHO는 북한 보건의로 인력의 교육 강화를 위한 아동 질병통합관리프로그램(Integrated Management of Child Illness: IMCI)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북한 보건의로 인력의 국내외 연수를 실시하였다.¹³⁰⁾

정부는 중장기적 질병관리 차원에서 북한지역의 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여 북한 의료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하였다.¹³¹⁾ 2008년 정부는 WHO의 북한 말라리아 방역 사업에 118만 달러를 지원하였는데, 말라리아 예방·치료약품, 기자재 및 실험실 장비 지원과 함께 WHO의 북한인력 교육훈련 경비도 포함되었다.¹³²⁾

2014년 정부는 WHO를 통해 북한 모자보건사업에 630만 달러를 지원하였는데, 동 사업은 리·군 단위 지역병원을 대상으로 출산, 신생아 응급처치 등을 위한 의료시설 개선 및 의약품·의료물품 공급, 의료인력 교육 등으로 구성되었다.¹³³⁾

정부는 국제백신연구소(International Vaccine Institute: IVI)를 통해 2007년, 2009년, 2012년 진단실 장비, 예방접종과 백신연구와 전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 사업을 지원했다. 특히 정부는 북한의 백신연구 및 전염병 예방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위주의 사업조건을 부과하였다. IVI는 정부의 후원을 받아 뇌수막염 및 일본뇌염 접종,

130) IMCI(Integrated Management of Child Illness)는 5세 미만 아동의 사망, 질병 이환 및 장애 감소와 성장 발달의 향상을 위해 1996년 WHO와 UNICEF가 공동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이다. 국가 및 지역사회 보건의료체계의 변화(적절한 의뢰체계 및 적절한 진단 및 치료 기능 확보 등), 1차 진료기능을 수행하는 보건의료기관 및 중증 질환 아동에게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로 인력이 적절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실제 임상현장에서 적절한 서비스(진단, 치료, 부모 상담 등)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및 표준 교육 자료와 임상지침 개발, 적절한 진단, 치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의 지원 등을 포함한다. 통일부, 『남북협력기금백서 2008』, pp. 65~66.

131) 통일부, 『통일백서 2016』, p. 121.

132) 통일부, 『남북협력기금백서 2008』, p. 82.

133) 통일부, 『통일백서 2015』, p. 122.

뇌수막염 및 일본뇌염 실험실 관련 장비구입 및 기술지원, 복측 연구인력 해외현장실습 및 의료인력 교육 등을 실시하였다.¹³⁴⁾

국제기구와의 협력 하에 북한의 통계 관련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식협력 사업도 추진하였다. 먼저 2008년 유엔인구기금을 통한 북한인구조사 사업을 지원하였다. UNFPA는 통계분석작업을 위해 북한 통계요원을 선발하여 컴퓨터 자료처리 방법, 각종 소프트웨어 취급법, 분석 기술 등을 훈련시키는 등 국제기준에 맞는 분석을 하기 위해 노력해왔다.¹³⁵⁾ 그리고 2014년 유엔인구기금의 「북한 사회경제인구 및 건강조사사업」 지원을 통해 통계기법 전수, 해외기관 견학 등을 통해 북한 통계인력 교육 등을 진행하였다.¹³⁶⁾

정부는 UNESCAP의 지식협력 사업에 대해 재정을 지원하고 UNESCAP이 사업을 시행하는 정부와 국제기구 간 협력형태의 지식 협력을 추진하였다. UNESCAP은 빈곤 종식, 환경오염 등 보편적인 세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통한 회원국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을 주관해오고 있다. 북한 주민에게 국제 통계원칙, 통계 이용성 향상 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UNESCAP의 ‘지속가능발전 역량강화’에 재정을 지원하였다.¹³⁷⁾

134) 통일부, 『통일백서 2009』, pp. 142~143; 통일부, 『통일백서 2013』, pp. 145~146; 통일부, 『남북협력기금백서 2008』, p. 80;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북한보건의료백서』, 2019, p. 337.

135) 통일부, 『통일백서 2009』, pp. 145~146.

136) 통일부, 『통일백서 2016』, p. 121; 통일부, 『통일백서 2017』, p. 134.

137) UNESCAP의 북한에 대한 지속가능발전 역량 지원 사업을 위해 6년간 남북협력기금 미화 49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의결하였다. 1차년도 사업비는 미화 72만 달러이며, 매년 사업계획에 따라 분할 지급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통일부 보도자료,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UNESCAP의 「지속가능발전 역량지원사업」 기금 지원(안) 의결,” 2020.5.27., <https://www.unikorea.go.kr/unikorea/news/release/?boardId=bbs_0000000000000004&mode=view&cntId=54737&category=&pageIdx=1> (검색일: 2021.6.7.).

정부는 국제NGO와의 협업을 통한 대북 지식협력 사업도 추진하였다. 정부의 지원 하에 한스자이델재단과 북한은 2017년 12월 8일부터 9일까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습지·입업분야 환경협력을 위한 국제워크숍」을 개최하였다. 국토환경보호성 관계자, 캄보디아, 중국, 독일 등의 전문가가 참석하였다.¹³⁸⁾

2. 국내NGO의 대북 지식협력 사업 추진 현황

국내 대북지원 단체에서도 북한에 대한 식량원조 및 다양한 물품 지원 차원을 넘어 기술 및 지식협력이 진행되어 왔다. 공여국 및 공여기관의 일방적인 인도주의 원조에서 개발협력으로의 전환 논의가 본격적으로 논의됨에 따라 대북지원 영역에서 이러한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특히 개발 분야에서 공여국에서 수원국으로의 일방적이고 시혜적인 지원이 아니라 대상국의 주체성과 주인의식이 적극 고려되기 시작하면서 대상국에 초점을 맞춘 역량강화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했다.¹³⁹⁾ 이러한 배경에서 대북 사업에 적극적으로 관여해 왔던 국내NGO와 시민사회에서도 북한에 대한 역량발전의 일환으로 지식공유와 기술지원들을 모색해 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연구방법의 일환으로 실시한 15개 국내NGO 대상 심층설문 조사결과 및 일부 문헌을 바탕으로 국내NGO의 대북 지식협력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분야, 추진 방식, 추진 형태, 추진 주체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38) 통일부, 『통일백서 2018』, p. 78.

139) 김태균, “북한의 개발역량 발전을 위한 시론: 남북협력 파트너십으로서 지식공유·역량발전의 유연성,” 『국가전략』 제20권 4호 (2014), pp. 5~35.

가. 추진 분야, 추진 형태 및 유형, 추진 주체

〈표 IV-2〉 국내NGO의 대북 지식협력 사업 추진 현황

기관명	주요 사업					세부 내용	분야	사업 유형	추진 방식 (부분/독자)	추진 주체	
월드비전	씨감자생산기술협력사업(1998~2010)					월드비전 농업자문단(학계, 전문연구 기관 기업 등) 중 관련 분야 전문가 동반 방북하여, 관련 사업장을 방문 하고 현장 북한 농업 관계자들에게 기술 전수	농업	기술전수	부분 사업	단독	
	채소생산기술협력사업(1998~2010)						농업	기술전수	부분 사업	단독	
	과수생산기술협력사업(1998~2010)						농업	기술전수	부분 사업	단독	
	유전육종교류사업(1998~2010)						농업	기술전수	부분 사업	단독	
	토양환경개선사업(1998~2010)						농업	기술전수	부분 사업	단독	
	벼생산기술협력(1998~2010)						농업	기술전수	부분 사업	단독	
	남북농업과학심포지엄(2001~2015)					감자, 병해충, 채소생산, 과수, 유전 육종, 과수, 토양, 벼 등 분야 관련 으로 남북 농업전문가가 모여 사업 평가 및 차년도 사업 계획 논의	농업	학술회의 (경험공유)	독자 사업	단독	
		구분	일시	장소	한국(명)						북한(명)
	1차	2001.12.19.~12.20	중국북경	21	8						
	2차	2002.12.14.~12.21	평양	8	14						
	3차	2003.12.14.~12.18	중국북경	26	7						
	4차	2004.12.19.~12.23	중국북경	20	6						
	5차	2005.12.16.~12.19	개성	39	22						
	6차	2006.12.15.~12.19	개성	37	18						
7차	2007.12.11.~12.15	평양	40	29							
8차	2008.12.17.~12.20	평양	41	30							
9차	2009.12.19.~12.21	중국북경	42	20							
10차	2011.5.22.~5.23	중국단둥	13	20							

기관명	주요 사업					세부 내용	분야	사업 유형	추진 방식 (부분/독자)	추진 주체
월드비전	구분	일시	장소	한국(명)	북한(명)					
	11차	2011.12.11.~12.12	평양	13	15					
	12차	2013.8.29.~8.30	중국단동	16	16					
	13차	2014.12.10.~12.12	중국단동	27	18					
	14차	2015.12.9.~12.11	평양	34	33					
		계		377	256					
	북한 채소 채종기술자 농업연수(2008~2015)					중국 단동에서 매 2년 주기로 북한 채종기술자들 초청, 채종기술 훈련 실시, 남한 전문가 중국 방문기술 전수	농업	교육 (제3국)	독자 사업	단독
	구분	일시	북한 연수단(명)	비고						
	1기	2008~2009	4	민경련 1명						
	2기	2010~2011	5	민경련 1명						
	3기	2012~2013	6	민경련 1명						
	4기	2014~2015	6	민경련 1명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	북한 10개군 농업지원사업(2000)					남측의 종자, 영농자재 지원을 통한 식량증산과 소득증대, 남측 물자 활용에 대한 지식전달	농업	기술전수	부분 사업	단독
	농기계지원과 농업기술협력사업(2001~2006)					농기계지원, 농기계수리공장 건립, 남측의 농기계운용과 수리기술, 농기계를 활용한 벼농사작법 공유	농업	기술전수	부분 사업	단독
	농기계조립생산공장 건립(2005~2008)					남측 농기계를 부품상태로 들여와 조립할 수 있는 공장 설립, 농기계 부품 생산 기술 지식공유	농업	기술전수	부분 사업	단독

기관명	주요 사업	세부 내용	분야	사업 유형	추진 방식 (부분/독자)	추진 주체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	남북공동 벼농사 시험재배사업(2005)	남측 벼종자와 북측 벼종자를 남측의 벼농사 작법으로 시험재배	농업	기술전수	부분 사업	단독
	당곡리 농촌현대화사업(2006~2008)	남측의 전문가와 북측의 농촌 주민이 함께 벼농사, 온실채소 재배를 통해 운영관리 능력 공유	농업	기술전수	부분 사업	단독
	양돈장 지원사업(2005~2006)	돼지 종축개량, 효율적인 돼지생산, 축분시설 활용에 대한 시범협력	축산	기술전수	부분 사업	단독
	남포,전북,우리민족 돼지공장(2007~2008)	돼지고기 연산 100톤 생산능력 돼지 공장 설립, 채소 전문생산 온실설치	축산	기술전수	부분 사업	단독
	자원순환형 농축산지원사업(2009)	평양돼지공장 개보수, 현대화된 양돈장 시범설치, 축분 활용 바이오 가스발전소 건립, 채소 생산 위한 온실설치	축산	기술전수	부분 사업	단독
	제약공장현대화사업(2002~2010)	북측 최초의 수액공장 설립과 운영 GMP 공정 제약공장 설립	보건 의료	기술전수	부분 사업	단독
	조선적십자병원현대화사업(2004~2008)	구강병동, 고려의학, 종합수술장, 이비인후과, 시경외과, 호흡기병동, 두경부외과 등 주요 병동을 연도별로 현대화 지원과 남북 공동 수술집도	보건 의료	기술전수	부분 사업	단독

기관명	주요 사업	세부 내용	분야	사업 유형	추진 방식 (부분/독자)	추진 주체
(사)어린이 어깨동무	평양 어깨동무어린이병원(2003~2009)	의료장비, 의료소모품 지원 후 사용 방법에 대한 기술협력, 환자 케이스별 후속 조치, 어린이치료와 병원운영에 대한 간담회 및 학술회의(8회), 의학서적 전달	보건 의료	기술전수 학술회의 (경험공유)	부분 사업	단독
	평양의학대학병원 어깨동무소아병동(2006~2014)	의료장비, 의료소모품 지원 후 사용 방법에 대한 기술협력, 환자 케이스별 후속 조치, 평의대 소아와 운영 현황 및 향후 소아병동 운영에 대한 간담회, '북한 의료인교육사업' (평양 1회, 해외 2회) 개최	보건 의료	교육(평양 및 제3국)	독자 사업	공동(보건의료 발전재단, 연변대 병원 (2009, 2014))
	장교리 인민병원(2006~2008)	의료장비, 의료소모품 지원 후 사용 방법에 대한 기술협력, 병원 운영에 대한 학술회의(1회), 간담회(2회) 진행, 의학서적 전달	보건 의료	기술전수 학술회의 (경험 공유)	부분 사업	단독
	남포소아병원(2009~2010, 2013)	의료장비, 의료소모품 지원 후 사용 방법에 대한 기술전수	보건 의료	기술전수	부분 사업	단독
	평양 어깨동무 콩우유공장(2001~2007)	콩우유 생산설비 지원 및 기술협력, 남북 영양 전문가 간담회	식품 영양	기술전수	부분 사업	단독

기관명	주요 사업	세부 내용	분야	사업 유형	추진 방식 (부분/독자)	추진 주체
(사)어린이 어깨동무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 공우유공장동 (2005~2007)	공우유 생산설비 지원 및 기술협력	식품 영양	기술전수	부분 사업	단독
	장교리 공우유공장(2006~2008)	공우유 생산설비 지원 및 기술협력	식품 영양	기술전수	부분 사업	단독
	평양 어깨동무학용품 공장(2005~2008)	학용품 생산설비 사용 및 제품 질 향상을 위한 기술협력 및 생산기술협력	교육	기술전수	부분 사업	단독
기아대책	식수위생 프로젝트 사업(2004~2010)	자원 개발, 오수정화시설 설치, 식수 정화 소독약 지원, 정수기기 지원, 우물 개발 및 급수시설 개선	식수 위생	기술전수	부분 사업	단독 및 공동 (정부, 단체 간 파트너십)
(사)어린이 의약품 지원본부	어린이영양관리연구소 지원사업(1997~2006)	어린이를 위한 기초의약품과 영양제 등 완제의약품을 지원, 2001년부터 연구소 측의 요청으로 직접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와 원료의약품 기증	보건 의료	기술전수	부분 사업	단독 추진
	대동강구역병원 지원사업(2003~2007)	의약품과 소아과 및 산부인과, 수술실 등을 중심으로 의료장비 등을 지원	보건 의료	기술전수	부분 사업	단독 추진
	철도성병원 현대화 사업(2005~2009)	각 과에 필요한 의료장비, 의료기구, 의료용 소모품, 의약품 기증, 증류수설비 등 정제, 환제설비 지원	보건 의료	기술전수	부분 사업	단독 추진

기관명	주요 사업	세부 내용	분야	사업 유형	추진 방식 (부분/독자)	추진 주체
(사)어린이 의약품 지원본부	만경대어린이종합병원 신축건설사업 (2008~2015)	병원 건설 관련 전문가 기술이전, 북측 보건의료인 대상 장비설치 및 기술이전	보건 의료	기술전수	부분 사업	단독 추진
	‘북한 제약 전문가 중국 교육사업’(2009)	북측 제약 관련자, 교육생 대상 교육	보건 의료	교육 (제3국)	독자 사업	공동(정부기관 파트너십)
(사)굿피플 인터내셔널	‘대북 안(眼)보건 워크숍’	협력기관(WHO, IAPB, 네팔협력 병원, 북한협력병원, 북한보건부)들과의 지식공유와 향후 사업계획을 위한 워크숍	보건 의료	학술회의 (경험공유)	독자 사업	공동(제3국 병원, IAPB (국제실명 예방기구))
(사)샘복지 재단	평양 제3인민병원 건립, 진료 및 운영(1995~)	북한의 병원 건립 요청으로 1995년 평양시 제3인민병원 준공, 건립 후 진료 및 운영 참여	보건 의료	기술전수	부분 사업	단독
	평양제약분 공장(2007) 및 영양치료제 공장 (2009) 준공	제조기술 전수, 원료 지원 북한 내에 의약품과 영양식 공급	보건 의료	기술전수	부분 사업	단독
	응급치료의약품세트 보급(2004~2011)	‘사랑의 왕진가방’ 보내기 운동 전개	보건 의료	기술전수	부분 사업	단독
	영양치료식품(Ready to Use Therapeutic Food, RUTF) 보급(2008, 2011, 2012~2015)	2008년 영천식품공장 설립(중국 단동)식품대기업 공동 영양치료식품 RUTF (Ready to Use Therapeutic Food) 개발 북한 어린이 입산부 보급	보건 의료	기술전수	부분 사업	단독
	단동복지병원(2000) 및 진료소(2001, 2004) 건립, 진료, 운영	중국의 북한 근로자들 대상 무료 진료	보건 의료	기술전수	부분 사업	단독

기관명	주요 사업	세부 내용	분야	사업 유형	추진 방식 (부분/독자)	추진 주체
(사)경남 통일농업 협력회	장교리협동농장(2006~2008), 천동국영농장 (2009~) 육묘장 사업	벼농사, 남새 온실 재배 등 경범방식의 농업기술 복측 주민들에게 전수	농업 (육묘)	기술전수	부분 사업	단독 추진 (2005~2011), 공동(해외동포 단체 파트너십) (2014~)
	딸기재배 사업(2016~)	딸기육묘 기술전수, 증식 생산 후 남측 반입	농업 (육묘)	기술전수	부분 사업	
(사)겨레의 숲	동북아국제산림협력회의(2014, 2015, 2017, 2018)	산림 포함 환경 분야 공동학술회 의 개최 및 현장 시찰	산림	학술회의 (경험공유)	독자 사업	공동(겨레의 숲(남)-중국 조선족과학 기술자협회 (중)-국토환경 보호성 산림 총국 및 산림 과학원(북) 파트너십)
(재)나이스 피플	천덕리온실 지원(3년)		농업	기술전수	부분 사업	공동(정부- 국제단체 파트너십)
	유산양 축사지원(3년)		축산	기술전수	부분 사업	공동(정부- 국제단체 파트너십)

기관명	주요 사업	세부 내용	분야	사업 유형	추진 방식 (부분/독자)	추진 주체
(재)나이스 피플	덕동돼지도축장 설립 협력사업(10년 이상)		축산	기술전수	부분 사업	공동 (국내 민간단체 파트너십)
	평양중앙연구소현대화 지원사업(10년 이상)		보건 의료	기술전수	부분 사업	공동 (국내 민간단체 파트너십)
	뇌전증(간질) 치료 협력사업(10년 이상)		보건 의료	기술전수	부분 사업	공동 (국내 민간단체 파트너십)
	평의대 개인기술지원 협력사업(10년 이상)		보건 의료	기술전수	부분 사업	공동 (정부 파트너십)
	평양시주변 병충해 방제사업(3년)		산림	기술전수	부분 사업	단독 추진
전남남북 교류평화 센터	평양 남새 비닐 온실 지원사업(2006~2007)	키친미생물 및 채소재배 자재지원, 아채재배 기술지도, 키친미생물, 친환경비료, 종자, 관수시설, 육묘 장비 등 지원	농업	기술전수	부분 사업	공동(국내 지자체, 대학 파트너십)
	발효공 공장 및 빵공장 사업(2007~)	자체 개발한 종균(특허)을 사용하여 청국장 생산 발효공 공법 기술 전수	식품 영양	기술전수	부분 사업	공동(국내대학 파트너십)

기관명	주요 사업	세부 내용	분야	사업 유형	추진 방식 (부분/독자)	추진 주체
하나누리	북한 라선특구 자립마을사업(2009~)	북측 농장 임대, 노동자 고용, 필요한 농기계, 비료, 종자 등을 공급, 2017년 이후 '무이자 대출-원금 100% 상환'이라는 일종의 '마이크로 파이낸싱' 추진	농업	기술전수	부분 사업	단독 추진
지구촌 농업 협력 및 식량 나누기 운동	강냉이 품종개량사업협력(1989~1994)	국가농업과학원 강냉이연구소 및 유전자원연구소와 강냉이 품종 개량사업협력	농업	기술전수	부분 사업	단독 추진
	농업 지원 및 개량사업(1996~1998)	봄보리 이모작, 사료작물적용시험 및 염소, 젖소, 고깃소 개량사업협력 등	농업	기술전수	부분 사업	공동 (국제 단체 파트너십)
	목화농장을 중심으로 한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개발사업(2003~)	목화농사 및 협동농장에서 필요한 모든 농업 기구재와 기술 보급 협약	농업	기술전수	부분 사업	공동 (국내 민간단체 파트너십)
	천덕리 온실 건설(2015)	북한 천덕리 온실 10개 건설	농업	기술전수	부분 사업	공동 (국내 민간단체 파트너십)

기관명	주요 사업	세부 내용	분야	사업 유형	추진 방식 (부분/독자)	추진 주체		
국제 푸른나무	장애인 복지(1년~3년)	장애인 관련 국제협력 포럼 개최	복지	학술회의 (경험공유)	독자 사업	공동(국내 및 국제 민간단체 파트너십)		
(사)통일농수산 사업단	금강산 및 개성지역 남북 공동영농사업 (2005~2007, 2007~2009)	북한 금강산지역 삼일포협동농장, 금천리협동농장 중심 기타 9개 협동농장(2005~2007) 및 개성시 소재 송도리협동농장(2007~2009) 대상 공동영농사업 추진	농업	기술전수	부분 사업	공동 (국내 민간단체 파트너십)		
	금강산 지역 공동영농 사업 규모							
	농장						사업내역	규모
	삼일포						논농사 밭농사 양돈장	320ha 180ha 250두
	금천리						논농사 밭농사 양돈장 시설채소 퇴비장	200ha 230ha 500두 50동 1개소
	9개 농장						논농사	180ha
	성북리						양돈장	250두
	온정리						농기계수리소	1개소
	고성읍						미생물공장	1개소

기관명	주요 사업	세부 내용	분야	사업 유형	추진 방식 (부분/독자)	추진 주체																	
(사)통일 농수산 사업단	개성 지역 공동영농 사업 규모																						
	<table border="1"> <thead> <tr> <th>농장</th> <th>사업내역</th> <th>규모</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5">송도리협동농장</td> <td>논농사</td> <td>200ha</td> </tr> <tr> <td>밭농사</td> <td>189ha</td> </tr> <tr> <td>양돈장</td> <td>250두</td> </tr> <tr> <td>시설채소</td> <td>50동</td> </tr> <tr> <td>과수원</td> <td>6ha</td> </tr> <tr> <td></td> <td>인삼포</td> <td>1ha</td> </tr> </tbody> </table>			농장	사업내역	규모	송도리협동농장	논농사	200ha	밭농사	189ha	양돈장	250두	시설채소	50동	과수원	6ha		인삼포	1ha			
	농장	사업내역	규모																				
	송도리협동농장	논농사	200ha																				
		밭농사	189ha																				
양돈장		250두																					
시설채소		50동																					
과수원		6ha																					
	인삼포	1ha																					

출처: 국내NGO 대상 심층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긴급구호성 대북지원은 제외함.

(1) 추진 분야

위의 <표 IV-2>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국내NGO들도 다양한 대북 지식협력 사업을 수행하여 왔다.¹⁴⁰⁾

국내NGO들이 수행한 대북 지식협력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농업 및 축산, 보건의료, 식품영양, 산림, 식수(WASH), 농촌 현대화 및 자립마을사업 등의 분야에서 지식협력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중에서 농업 및 축산, 보건의료 및 식품영양 분야의 대북 지식협력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 추진 형태

그동안 국내NGO들이 수행한 대북 지식협력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된다. 첫째, 개발협력성 대북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원 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기술을 전수하는 부분적인 지식협력 방식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장비 및 시설에 대한 기술 이전 및 전수, 농축산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이전 및 전수 등 남한의 전문가들이 북한의 관련 전문가들에게 기술이나 지식을 전수하거나 이전하는 ‘기술전수’ 형태가 대부분이었다. 민간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장기 프로젝트의 경우 부분 방식의 지식협력 사

140) 이는 민간단체 심층 면접과 조사에 의해 파악된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국의 민간단체에서 이루어진 모든 지식협력 사업 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밝혀둔다. 심층설문 조사대상 단체 이외에도 나눔인터내셔널은 2004년부터 서울대학교 병원과 공동으로 평양의료협력센터를 건립하였다. 평양의료협력센터는 ‘의료장비관리동’, ‘의료연구개발동’, ‘생산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의료연구개발동’은 진단실, 세척실, 제약실, 연구실, 세미나실로 구성되어 있고, 북측 연구사들이 배치되어 보건의료 각 분야 및 의료장비 수리, 생산 등에 대한 연구 사업과 남북한 보건의료협력 세미나, 회의 등의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2006년 1월~12월 기술전수 남북보건의료협력 관련 세미나를 2회 개최하였다. 또한 한국코리아는 2008년까지 평양의학대학병원에서 심장병환자, 간암환자 등 총 21명을 시술하였으며 남북 의료진 교육 및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대북지원 20년 백서』(서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2016), p. 149, p. 197.

업이 대부분 수반되었다. 대북 사업 프로젝트 진행 시 북한 사업담당 기술자와 현장에서 공동 작업을 수행하면서 관련 정보교류, 운용기술전수 등을 통해 지식협력이 추진되었다. 대북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지식협력 형태의 경우 ‘일방형태’의 성격을 띠고 있다. 부분사업의 형태이지만 전문가를 파견하고 노하우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2장에서 언급한 OECD CRS의 ‘전문가와 기술지원을 위한 일조’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식협력을 독자의 프로젝트로 기획하고 수행한 독자사업의 방식을 들 수 있다. 국내NGO가 지식협력을 주된 목적으로 수행한 지식협력은 학술회의나 워크숍 개최를 통해서 사업 현황을 공유하거나 현안을 파악하는 ‘경험공유’ 형태와 제3국 등에서 북한 기술자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관련 지식을 전수하는 ‘교육’ 유형을 들 수 있다.

교육 유형의 독자적인 지식협력은 북한, 제3국에서 추진되었는데, 제3국에서 추진된 사례가 대부분이다. 연변대학 등 제3국 기관과의 협업, 정부 정책 사업을 통한 민관협력 방식으로 일부 추진되기도 하였다.

〈표 IV-3〉 교육 유형 대북 지식협력 추진 현황

단체명	교육 및 연수
어린이어깨 동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의료인교육사업’ - 평양에서 1회, 해외연수로(중국) 2회 개최 * 북한 의료인교육 사업의 경우 독자적인 합의를 체결 후 독립 사업으로 추진
월드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채소 채종기술자 농업연수(유전 육종) - 2008~2015년까지 8년 동안 총 4기의 채종연수단이 중국 단동에 체류하면서 채종기술 훈련 실시 - 남한의 전문가들이 중국을 방문하여 기술 전수 - 중국 농업 관련 교육기관, 대학, 채종 및 종자 회사 등 방문

단체명	교육 및 연수
지구촌 농업 협력 및 식량 나누기 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헤퍼프로젝트와 염소 250마리 지원(중국 천두) 및 중국 사천성에서 기술훈련 ○ 전문가 미국 초청 현장 시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2년 농업과학원 농생명과학자 4명 미국농학회 참석 및 카길, 랜드오레이크, 필스베리, 제너럴 밀스등 굴지의 농업회사 방문 및 농가 방문 - 1997년 농업성 농업 전문가 6명 미국 중서부 농업시찰, 미네소타, 아이오와 등 농업시찰
어린이 의약품 지원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제약 전문가 중국 교육사업’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년 북측의 제약 관련자들 12명을 북경 한미약품에서 교육 - 하나제약 공장장이 강사로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주관 ○ 치과 분야 보건의료인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 북한 치과 분야 보건의료인들을 중국에 초청해 임플란트 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였음.

출처: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어린이어깨동무가 추진한 북한 의료인 교육사업의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 IV-4>와 같다.

<표 IV-4> 어린이어깨동무 북한 의료인 교육사업 현황

	일시	장소	참석자	주요 내용
1차 연수	2008년 9월, 10월	평양의학대학병원 어깨동무소아병동 의료교육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측: 서울대학교 의학 대학 교수 등 37명 - 북측: 평양의학대학 평원 의료인 등 약 300명(연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공별 발표, 이론 토의, 중례 토의 - 공동진료: 병원의 외래/입원 환자를 남북 의료진이 함께 진료 - 의료장비 설치 및 작동: 초음파, 내시경, 검사실, 치과 장비 등에 대한 실무 교육
2차 연수	2009년 4월	연변대학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측: 서울대학교 의학 대학 교수 등 8명 - 북측: 평양의학대학 평원 의료진 9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래진료 실습, 수술 실습 - 병원시스템 연구 - 의료장비 견학 및 연구: 전공별 의료장비 견학 및 실무교육

출처: 어린이어깨동무 홈페이지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가 작성 (<https://www.okfriend.org/nsttogether_1> (검색일: 2021.6.3).)

평양 또는 제3국에서 심포지엄이나 학술회의에 북한 관련 인사를 초청하여 지식공유 방식의 지식협력이 추진되었다. 먼저, 월드비전은 평양, 개성, 북경 등에서 남북 공동의 농업과학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표 IV-5〉 월드비전의 남북 농업과학 심포지엄 개최 현황

회차	일시	장소	한국	북한	발표주제
1	2001.12.19.~20.	중국 북경	21	8	12
2	2002.12.14.~21.	북한 평양	8	14	13
3	2003.12.14~18.	중국 북경	26	7	15
4	2004.12.19.~23.	중국 북경	20	6	13
5	2005.12.16.~19.	북한 개성	39	22	24
6	2006.12.15.~19.	북한 개성	37	18	22
7	2007.12.11.~15.	북한 평양	40	29	23
8	2008.12.17.~20.	북한 평양	41	30	21
9	2009.12.19.~21.	중국 북경	42	20	23
10	2011.	문서 교환으로 대체			11
11	2012.	문서 교환으로 대체			14
12	2013.	문서 교환으로 대체			10
13	2014.12.10.~13.	중국 단둥	27	18	17
14	2015.12.8.~12.	북한 평양	34	33	

출처: 이용범·김혜영, “월드비전의 북한 농업개발협력 사업이 전환기 북한농업에 미친 영향,” p. 28; 2015년 자료는 『월드비전 2015년 사업보고서』, p. 36; 이병일, “남북 농업 및 농업과학 교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제10호 (2014), p. 189.

국제대회를 활용하여 북한전문가를 초청하여 지식협력을 수행하는 사업들이 추진되었다.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굿피플인터내셔널, 국제푸른나무의 사례에서 보듯이 외국의 제3국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남북 지식협력을 위한 워크숍 및 포럼이 개최되었다. 그리고 거래의 숲 사례에서 보듯이 공동학술회의 및 현장시찰이 추진되었다.

〈표 IV-6〉 국제행사를 통한 남북 경험공유 사업 현황

단체명	지식협력 내용	파트너십
어린이 의약품 지원 본부	2019년 아부다비에서 개최한 세계약사대회에 북측 보건성 제약 담당자를 초청해 남북 제약 부문 기술 교류를 추진	세계약사연맹
굿피플인터내셔널	대북 안(眼)보건 현황 및 향후과제를 위한 워크숍	WHO, IAPB, 네팔협력병원
국제푸른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12월 싱가포르 '장애인을 위한 국제협력 포럼' - 2020년 런던에서 미래 KOREA를 위한 국제개발협력포럼(ICF)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싱가포르 장애인협회 - IDCF 조직위원회, 영국의 캐피탈시티 칼리지 그룹 (CCCG)
겨레의 숲	- 동북아국제산림협력회의	- 중국, 일본, 몽골, 독일의 관계 전문가

출처: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저작 작성.

겨레의 숲이 개최한 '동북아국제산림협력회의의 세부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겨레의 숲은 산림과학원 전문가와 조선족 과학자와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2010년 남북한, 중국, 몽골 전문가 참여하는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동북아 산림협력 국제회의를 추진하였고 2014년 10월 중국 연길에서 남북한, 중국, 일본, 독일(한스자이델재단)이 참여하는 '동북아 산림협력 국제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과정에서 북한 참가자들이 중국 과학자 기술협회의 주관으로 사과나무단지 등을 시찰하였다. 그리고 2015년 12월 연길에서 남북한, 중국, 일본, 몽골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였다. 북한에서는 북한 산림연구원 대신 국토환경보호성이 중심이 되어 참여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제회의를 토대로 북측에서 남한의 선진기술과 정보를 희망하였다. 남북한, 중국, 일본, 몽골 등 참여자들이 공동으로 합의하는 형태로 합의서를 채택하여 물자지원과 기술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특히 북중 국경지역에 '동북아 산림협력센터'를

건설하여 남쪽이 물자를 지원하고 중국에서 묘목을 생산하여 북쪽에 보내기로 합의하였다.¹⁴¹⁾ 그렇지만 2016년 핵실험 등으로 인해 합의 사항이 지켜지지 못하였고 아래 <표 IV-7>에서 보듯이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2017년, 2018년 두 차례 더 국제회의가 개최되었다.

<표 IV-7> 동북아 산림협력 국제회의 개최 현황

일시	장소	참석자	주요 논의 내용
2014년 10월	중국 연길	남북한, 중국, 일본, 독일(한스자이델재단)	사과나무 단지 시찰
2015년 12월	중국 연길	남북한(국토환경보호성), 중국, 일본, 몽골	동북아산림협력센터 건립 합의
2017년 12월 6일~8일	중국 항저우	북한 국토환경보호성 관계자 5명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등 5개국 24명의 전문가	북한의 양묘장 조성 및 산림병해충방제 사업
2018년 12월 15일~19일	중국 서안	북한 국토환경보호성 및 산림총국 관계자 6명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등 5개국 37명의 전문가	동북아 산림협력 네트워크 구축 발전 방향 및 다자협력을 통한 북한 산림복구 방안

출처: 겨례의 숲 관계자 인터뷰(2021.6.18., 통일연구원); 통일부, 『통일백서 2018』, p. 78; 통일부, 『통일백서 2019』, p. 159를 토대로 저자 작성.

제3국이 아닌 평양에서 개최되는 토론회에 남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지식협력을 수행한 사례로서 ‘평양의학과학토론회’를 들 수 있다. 1999년부터 평양에서 매년 열리는 평양의학과학토론회에 남측 보건의료기관들이 참여하게 되었다. 평양의학과학토론회의 공식 명칭은 ‘국내외동포들의 평양의학과학토론회’이다. 이 토론회는 미국과 유럽, 일본에서 활동하는 재외동포 의학자들과 북한의 의학자들이 1999년 5월부터 매년 진행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조선의학협회가,

141) 겨례의 숲 관계자 인터뷰(2021.6.18., 통일연구원)

미국에서는 재미동포의학자대표단이, 일본에서는 조총련계 일본의 학자대표단이 평양의학과학토론회의 조직을 맡고 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토론회에 참여한 것은 2003년 열린 제5차 평양의학과학토론회부터 2004년, 2006년, 2007년 등 총 4차례이다. 2003년 첫 참여 이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대한의사협회가 남측을 대표해 이 토론회의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매년 토론회 참여를 준비하고 협의했지만, 2005년 남북관계 경색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2008년 이후부터 토론회 참여가 무산됐다. 하지만 이 토론회는 남측의 참여가 없는 속에서도 매년 진행되고 있다.¹⁴²⁾

어린이어깨동무의 의학서적 제공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서적을 통한 지식협력이 일부 추진되었다.

이상에서 보듯이 세부적인 지식협력 프로젝트 수행 유형은 개발협력과 기술전수, 개발협력과 간담회, 학술회의, 교육 및 연수, 전문서적의 제공 등을 들 수 있다.

2장에서 살펴본 지식협력의 유형 중 사업목적에 기준으로 하였을 때 정부 및 국내NGO의 대북 지식협력 사업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표 IV-8〉 사업목적 유형에 따른 정부 및 국내 민간단체 지식공유 분류

유형 A. 사업의 효과적 추진	유형 B. 제도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국제기구 협력 대북 지식협력(유엔연구기금, WHO) - 정부-국제기구 협력 북한 의료인력 교육(M) - 월드비전 농업개발협력 - 우리민족서로돕기 농업·축산분야 지식협력 사업 - 우리민족서로돕기 농업지원사업, 농기계 및 공동 벼농사 - 우리민족서로돕기 제약공장 및 병원 현대화사업 - 어린이어깨동무 공우유, 학용품공장 - 기아대책 식수위생 프로젝트 -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보건의료사업 - 샘복지재단 보건의료사업 	<p>정부-국제기구 협력 역량강화 사업(UN ESCAP)</p>

142)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나눔과 평화의 길, 그 스무 해의 여정』, pp. 242~247.

유형 A. 사업의 효과적 추진	유형 B. 제도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남통일농업협력회 육묘사업 - 나이스피플 농업, 축산, 보건의로, 산림사업 -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농업 및 식품영양 사업 - 하나누리 자립마을사업 - 지구촌농업협력 및 식량나누기운동 - 통일농수산사업단 공동영농사업 	
유형 C-1. 개인역량 강화	유형 C-2. 교육 인프라 기반 전문인력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사업' 일환 민간단체 지식협력(GMP교육사업) - 남북 학술교류 지원을 통한 지식협력 추진 - 영유아 지원사업(보건의로 인력 국내외 연수 및 기술자문단 구성) - 월드비전 농업전문가 교류 및 역량강화 사업 - 어린이어깨동무 보건의로협력, 북한의로인교육 - 우리민족서로돕기 평양의학과학토론회 - 굿피플인터내셔널 안(眼)보건사업 -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제약 전문가 교육사업 - 나눔인터내셔널 북한인력 양성사업 - 겨례의 숲 환경 분야 학술회의 - 국제푸른나무 장애인 복지 사업 	<p style="text-align: center;">우리민족서로돕기 인 재양성센터 평양과학기술대학</p>

출처: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사업목적 분류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는 지식협력 유형은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목적으로 전문가 등을 파견하여 기술이나 지식의 격차를 해소하는 개발협력방식이다. 국내 민간단체의 경우 학술회의, 단기 연수, 토론회, 학술교류, 인력 양성 등의 형식으로 지식공유가 이루어졌고, 분야로는 보건의로와 농업 분야가 특히 많았다. 즉 남북한 간의 지식협력은 개인 혹은 전문 집단을 위한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업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지식 격차 해소를 위한 전문가 파견 형태가 있다. 여기에는 농업 및 의료 분야의 개발협력성 사업이 주로 해당된다. 우리민족서로돕기의 정성수액약품공장 사업과 월드비전에서 추진한 씨

감자, 채소 및 과수 생산 기술협력은 약품 및 농업 분야 전문 지식과 기술, 노하우 등이 이전되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분류가 해당 기관의 대북 사업을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제사회의 지식협력에서 개인 역량강화의 목적은 주로 수원국의 공무원 교육으로 이루어지나 현재 남북관계에서 남한이 북한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사업은 사실상 어렵다.

제도 개선을 목표로 하는 대북 지식협력 사업은 민간 차원에서는 많지 않았다. 다만 정부와 국제기구가 협력하는 형태로 UNESCAP이 추진한 사업은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발전목표(SDGs)를 이행하는 데 있어 북한의 통계역량을 구축하고 강화하는 데 기여하는 만큼 제도 개선 측면과 관련성을 갖는다.

사업목적 분류에서 한 가지 드러나는 특징은 교육 인력 및 인프라를 갖추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진된 인재양성 사업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우리민족서로돕기 인재양성센터 및 평양과학기술대학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우리민족서로돕기의 인재양성센터는 전문 영역인 IT분야 실무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강의를 다년간 제공해왔다. 평양과학기술대학은 남한의 비영리기구 사단법인인 이 주도 하에 북한에 세워진 특수대학으로 이공계 분야 인재양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OECD CRS에서 구분하는 원조 유형은 크게 1) ‘전문가와 기술지원을 위한 원조’와 2) ‘연수 및 장학금 원조’이다. 이 분류에 의하면 국내 민간단체에서 이루어진 대북 지식협력은 전자와 유사한 형태로 볼 수 있다. 후자의 경우 수원국 국적의 학생들에게 장학금 및 기타 비용을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주지하는 것처럼 이러한 형태는 현재 남한에서 수행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유형 분류로서의 큰 의미를 갖기는 어렵다.

(3) 추진 주체

추진 주체의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주관하는 남북 지식협력 사업이 거의 대부분이고 ‘평양과학토론회’ 사례에서 유일하게 북한이 중심이 된 지식협력 사업에 남한의 전문가가 참여한 형태가 발견되고 있다.

그동안 추진된 남북 지식협력 사업에는 정부, 공공기관, 국내 NGO, 국제기구, 국제NGO 및 제3국 기관이 추진 주체로 참여하였다. 대부분 국내NGO가 주관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파트너십이 구축되었고, 정부는 재정지원을 중심으로 국제기구, 국내NGO와 파트너십을 형성하였다.

첫째, 국내NGO들은 대부분 단독으로 대북 지식협력 사업을 수행하였다.

둘째, 국제기구 및 국제NGO 및 제3국 기관과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대북 지식협력 사업을 수행하였다.

〈표 IV-9〉 국내NGO와 국제기구·국제NGO·제3국 기관 파트너십 형성

단체명	파트너십
지구촌 농업협력 및 식량나누기운동	미국 ‘해퍼프로젝트’
굿피플인터내셔널	WHO, IAPB, 네팔 협력병원
국제푸른나무	- 싱가포르 장애인협회 - 영국 캐피탈시티 칼리지그룹(CCCG)
어린이어깨동무	연변대학병원
겨레의 숲	중국조선족과학기술자협회

출처: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셋째, 국내NGO들은 정부 및 공공기관과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대북 지식협력 사업을 추진하였다. 정부의 정책 사업, 합동 사업, 영유아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재정지원, 국내NGO는 실

행을 맡는 방식으로 파트너십을 형성하였다. 또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등 공공기관과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대북 지식협력 사업을 추진하였다. 2008년 정부 정책 사업 일환으로 추진한 교육 사업의 경우 어린이어깨동무가 사업기획과 진행을 담당하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을 통하여 남북협력기금이 집행되었다.

넷째, 정부와 국제기구가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대북 지식협력 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IV-10〉 대북 지식협력 추진 주체의 형태

구분	파트너십 기관
정부	- 공공기관·국내NGO - 국제기구
국내NGO	- 단독 - 국내NGO - 정부 - 정부·공공기관 - 국제기구·제3국 기관

출처: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지식협력 사업은 참여자들의 특징으로 남북협력, 남남협력, 삼각협력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남북관계가 국가대 국가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 관계로 규정되는 만큼 지식협력 사업도 민족내부의 거래와 협력으로 볼 수밖에 없다. 민족 내부 협력으로 규정하더라도 남북협력 형태의 남북 당국 간 지식협력은 거의 추진되지 못하였다. 다만 GMP 교육 사업의 경우 ‘독-조의학협회’가 관여된 만큼 제3국이 남북한과 협력하는 형태도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정부차원의 대북 지식협력은 국제기구가 참여하거나 독자적으로 주도하는 형태가 있었던 만큼 삼각협력 방식이 추진되었다.

나. 조직 설립과 지식협력 사업

독자적인 지식협력 사업의 형태이지만 학교나 센터 등 조직을 설립하고 교육을 실시한 대북 지식협력 사업이 추진되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인재양성센터와 평양과학기술대학을 들 수 있다.

(1)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인재양성센터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인재양성센터는 과학기술분야 남북교류협력 및 국제 표준에 의거한 북한 IT 인력 교육을 통해 남북 경협 활성화와 북한 인력 활용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목표로 2006년 6월 설립되었다. 2001년 문을 연 단동 ‘하나프로그램센터’를 모태로 시작된 인재양성센터는 2009년 남북관계 경색으로 교육이 중단되기 전까지 매년 두 차례씩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단동 ‘하나소프트교육원’에서 진행된 총 6기의 교육 과정에는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등 교육기관, 평양정보센터, 조선컴퓨터센터(KCC) 등 IT 전문기관에서 선발된 200여명이 참여하였다.¹⁴³⁾

인재양성센터는 2006년 8월, 4기 수료생(고급 네트워크 전문가 과정) 34명을 대상으로 중국 IT 참관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참관 교육은 단동시 투자유치국, 중국국제과기촉진회 우광종합연구소 등의 협조를 받아 진행하였다. 2006년 8월 총 4일간 베이징을 중심으로 진행된 참관 프로그램은 중국의 주요 IT 기업 및 기관 방문, 그리고 중국 IT 전문가 초청 강연 등으로 구성되었다. 주요 방문지와 방문 기관은 베이징경제기술개발구, 중관촌과학원, 청화동방, 대당전신, 연상집단 등이었다. 또한 산학협동의 산물로 칭화대학에서 분리된

143)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나눔과 평화의 길, 그 스무 해의 여정』, pp. 282~283.

청화동방, CDMA와 WCDMA보다 우수한 TD-SCDMA 기술을 개발한 대당전신 등도 방문하였다.¹⁴⁴⁾

〈표 IV-11〉 인재양성센터 교육 과정(2006~2008년)

기수	일정	교육 과정	강의 내용
4기	2006년 6월~8월	고급네트워크 전문가 과정	- 인터넷 프로토콜 및 기술동향, 리눅스 운영 체제, 네트워크 장비, 초고속통신망 기술, 네트워크 서버 구축, 네트워크 응용,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무선 네트워크, 네트워크 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등
5기	2006년 9월~12월	자바 전문가 과정	- 프로그래밍언어, HTML/Java Script, JDBC, JSP, Servlet, DB설계, XML, 개발환경 및 형상관리, Struts, JSF, OOAD, 디자인패턴, Enterprise Java Beans, 개발프로세스,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실무 프로젝트 등
6기	2007년 4월~9월	3D 그래픽 과정	- 포트폴리오디자인, 월드컨셉아트, 캐릭터 디자인, 3D모델링, 3D맵핑, 3D애니메이션, 디지털라이팅과 렌더링, 이펙트, 모션 캡처활용기술, 마야기술, 디지털 특수효과, 창작과 작품분석, 3D트래킹, 디지털영화 합성, 웹디자인, 고급게임 컨셉아트, 2D 게임그래픽, 3D그래픽과 엔진최적화, 게임 애니메이션, 프로젝트 등
7기	2007년 10월~12월	임베디드 시스템 소프트웨어개발 전문 과정	- C프로그래밍과 개발환경구축, 임베디드 C와 코드최적화, ARM명령어, ARM디바이스 제어, 임베디드 펌웨어 프로젝트, 임베디드 리눅스, 임베디드 리눅스 프로 그래밍, 디바이스드라이버
8기	2008년 6월~8월	임베디드 전문가 과정	- 개발환경구축 및 고급 임베디드C, 임베디드 리눅스 프로그래밍, 디바이스 드라이버, 임베디드 기반 프로젝트, QT 프로그래밍, 코드 최적화, ARM 프로세서 아키텍처, ARM 디바이스 제어, 임베디드 펌웨어 프로젝트 등
9기	2008년 9월~12월	시스템네트워크 전문가 과정	- 시스템 네트워크 기본, 네트워크 설정, 네트워크 트러블 슈팅, 테스트 및 시험 과정

출처: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나눔과 평화의 길, 그 스무 해의 여정』, p. 285, p. 288.

144) 위의 책, p. 284.

〈표 IV-12〉 인재양성센터 북한 수강생 소속 및 배출 인력 현황(2001~2008년)

소속	기수									계
	하나프로그램센터			인재양성센터						
	2001.8 ~ 2002.1	2002. 5~8	2005.10 ~ 2006.2	2006. 6~8	2006. 9~12	2007. 4~9	2007. 10~12	2008. 6~8	2008. 9~12	
	1기	2기	3기	4기	5기	6기	7기	8기	9기	
김일성종합대학	6	6	7	2	7		12	3	8	51
김책공업종합대학	6	6	14	2	11	2	7	15	13	76
리과대학	5	5	3	2	3		7	9	4	38
컴퓨터기술대	5	5	7		9		3		5	34
평양기계대학								1		1
회천공업대학								1		1
평양정보센터	8	10		6						24
KCC (조선컴퓨터센터)				14						14
평양미술대학						17				17
평양연극영화대학						5				5
평양김형직사범대학						2				2
한덕수경공업대학						1				1
김철주사범대학						1				1
평양인쇄공업대학						1				1
평양삼흥대학						1				1
민경련				2	2	1	1	1		7
삼천리				6						6
계	30	32	31	34	32	31	30	30	30	280

출처: 위의 책, p. 289.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IT 교육 사업은 시대를 선도한 북한 인력 교육이었다. 첫째, 하드웨어 지원을 넘어 소프트웨어 지원 및 전문가 양성 교육의 모델을 제시했다. 인재양성센터의 교육은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북한의 전문가들을 교육시킴으로써 지속가능한 인적 역량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안착되었다. 둘째, 향후 남북통합 과정에서 정보통신 및 기술 분야의 기술 표준화를 고민하는 장으로 기능했다. 셋째, 국내 IT 업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이론 교육을 넘어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이었다.¹⁴⁵⁾

145) 위의 책, p. 290.

(2) 평양과학기술대학

평양과학기술대학(Pyongya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PUST)은 북한의 요청에 의해 남한과 북한이 공동으로 2010년 10월 설립한 최초의 합작대학이자 이공계 분야 특수대학이다.¹⁴⁶⁾ 북한의 대학 분류에 의하면 평양과학기술대학은 특정 산업 분야에 필요한 학술형, 실천형 인재 양성을 위해 세워지는 부문별 대학에 속한다.¹⁴⁷⁾ 설립 목적은 세계적인 선진 과학기술에 정통하고 이를 현실에 활용할 수 있는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여 북한의 국제화와 경제 자립에 기여하는 것이다.¹⁴⁸⁾ 이를 위해 강의와 연구 내용에 세계적 수준의 방식을 도입하고 대학운영을 남북한 및 해외동포, 해외 교수들과의 공동운영이라는 방식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여타 북한의 대학들과 차이가 있다.

남한의 비영리기구 사단법인인 동북아교육문화협력재단은 학교 설립 계획을 북한 교육성에 제출하여 2001년 3월, 북한 교육성으로부터 설립을 승인 받고, 동년 6월 통일부로부터 대학설립협력 사업으로 승인을 받았다. 2002년 6월 착공식을 갖고 평양시 락랑구역 보성리 승리동의 100만 평방미터 부지를 북한으로부터 확보하여 1단계 건축을 진행하였다. 행정 및 강의동, 종합생활관, 복지관, 방문자 숙소, 교수 숙소, 대학원생 숙소, 학부생 숙소 등 18개 동을 완공하여 2009년 9월 16일 1단계 건물 준공식을 진행하고 개교하였다.¹⁴⁹⁾ 첫 입학은 2010년 10월 25일 학부생 100명, 대학원생 50명으로 출발해 공식 수

146) 북한은 1992년 중국 연변에 설립된 연변과학기술대학이 성공을 이루자 이러한 국제 대학 모델을 평양에 만들기 일했고 이를 연변과학기술대학 총장인 김진경 박사에게 요청하였다. 박찬모, “평양과학기술대학의 비전과 한반도의 미래,” 『북한과학기술 연구』 제9집 (2015), p. 130.

147) 조정아, 이춘근, 엄현숙, 『지식경제시대 북한의 대학과 고등교육』 (서울: 통일연구원, 2020).

148) 평양과학기술대학, 『서광』, 2017.1.18.

149) “평양과학기술대학 1단계 건물 준공식,” 『조선중앙통신』, 2009.9.16.

업이 시작되었다.¹⁵⁰⁾ 개교 3년 7개월 만인 2014년 첫 졸업생 44명을 시작으로,¹⁵¹⁾ 2019년 660명의 학부 졸업생과 160명의 석사 졸업생이 배출되었다. 개교 10년인 2019년 3월 기준 평양과학기술대학에는 학부 497명, 대학원 152명 총 649명 재학하고 있다. 교수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중국 등의 출신으로 전원 외국인으로 채용하고 있으며 2018년 기준 약 75명이다.¹⁵²⁾

현재 개설된 학부는 전자컴퓨터공학부, 농생명과학부, 국제금융경영학부, 의학부이며, 대학원은 전자컴퓨터공학대학, 농생명과학대학, 국제금융경영학대학, 의학대학원이 운영되고 석사 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건설공학부, 보건학 등은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 IV-13〉 평양과학기술대학 대학 및 대학원

구분	개설 전공
학부	전자컴퓨터공학부 Electrical & Computer Engineering (ECE)
	농업생명과학부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국제금융경영학부 International Finance & Management (IFM)
	의학부 Medical Sciences
대학원	전자컴퓨터공학 Electrical & Computer Engineering (ECE)
	농업생명과학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국제금융경영학 International Finance & Management (IFM)
	의학대학 Medical Sciences

출처: 평양과학기술대학 홈페이지, 〈<https://pust.co/>〉 참조하여 작성.

평양과학기술대학은 북한의 고등교육 기관으로서 서구 선진국 출신의 교수들에 의한 전문 지식과 기술이 학생들에게 전달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첫째, 전공 차원에서 전달되는 과목의 지

150) “평양과학기술대학,”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18.5.8.,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70464>〉 (검색일: 2021.5.28.).

151) “‘북한 유일의 사립대’ 평양과학기술대 지금은?” 『한국대학신문』, 2018.5.8.,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89169>〉 (검색일: 2021.12.27.).

152) “와이파이 터지는 北 유일한 학교… 교수 전원 무보수,” 『중앙일보』, 2018.3.17., 〈<https://news.joins.com/article/22449226>〉 (검색일: 2021.5.28.).

식과 정보, 영어 학습은 학교 차원에서 중요하게 고려된다. 둘째, 평양과학기술대학의 정규 교과 과정 이외에 이루어지는 국제학술대회 및 특성화 교육은 지식공유의 장을 제공한다. 셋째, 평양과학기술대학은 지식산업연구소 및 디지털 캠퍼스를 구축하는 등 외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기술협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왔다. 특히 지식산업복합단지(Academy-Industry Complex)는 한국 및 외국의 기업, 연구소, 대학 분소를 유치하여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고 학생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구축되었다.¹⁵³⁾

평양과학기술대학의 설립 취지 및 교육 체계, 국제화 활동 등은 과학기술 분야 인재양성 및 지식공유 확산에 유의미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외국인 교수들에 의한 이공계 및 경제·경영 분야 교육 및 실습은 선진 과학기술 및 지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다. 향후 평양과학기술대학 내 지식산업복합단지를 통한 ‘지식의 산업화와 상업화’가 활성화 된다면 산학협력을 통한 지식공유 및 기술협력은 본격화될 것으로 예측된다.¹⁵⁴⁾

평양과학기술대학은 국제화 감각 증진 및 국제적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 배양 차원에서 학생들의 국제 교육 프로그램 참가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¹⁵⁵⁾ 2012년에 첫 해외 유학생을 배출한 이후, 학교 설립 9년 만에 30여명의 학생들이 영국 웨스트민스터대학,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스웨덴의 옅살라대학, 스위스 취리히응용과학대학 등에서 석사 및 연수를 마쳤고 2명의 평양과학기술대학 출신 해외 박사를 배출하였다.¹⁵⁶⁾

153) 박찬모, “평양과학기술대학의 비전과 한반도의 미래,” p. 131.

154) 위의 책, p. 131.

155) “평양과학기술대학 첫 해외유학생 배출,” 『The YUST PUST Foundation Newsletter』, Spring 2013, p. 1.

156) “평양과기대 박찬모 명예총장(1),” 『VOA』, 2016.5.26.,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social-issues/3346052>> (검색일: 2021.5.28.).

구조적인 한계도 분명히 존재한다. 우선 학교 재원을 사실상 외부의 지원과 후원금에 의존하고 있는바 대학운영의 안정성은 외부의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유엔 안보리대북제재 및 미국의 양자제재가 지속되면서 학교에 대한 외부의 송금도 어려운 상황이다. 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육과 연구 기자재도 여전히 부족하며 교수 수급도 원활하지 않다.¹⁵⁷⁾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로 인해 외국인 교수들의 북한 입국이 차단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과 대내외적 도전에도 평양과학기술대학은 과학기술 및 경제·경영 분야 인재양성 및 국제사회와의 지식공유 허브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평양과학기술대학이 북한 사회의 국제화를 견인하기 위한 젊은 인재를 양성하는 유일한 사립 국제대학이라는 점, 국제사회를 접할 수 있는 기회와 북한사회 발전에 대한 동기부여를 제공하는 점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다. 특징 및 시사점

II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사회의 지식협력은 중장기적인 거시적 관점에서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까지 우리 정부와 국내NGO가 추진한 대북 지식협력의 현황을 살펴볼 때 거시적인 관점에서 북한의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을 궁극적 목표로써 구체적으로 추진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개발협력으로의 전환과 개발협력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지식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대북 지식협력을 추진하여 왔으나 지식협력 자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157) “평양과기대 “국무부, 미국인 교수 46명 방북신청 거부”, 『VOA』, 2017.11.7.,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4103805>> (접속일: 2021.5.29.).

정부의 직제 규정에서 보듯이 인도적 지원, 개발협력이 분산되어 편제되어 있고 직제규정 내 기술협력 등 지식협력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도 않다. 정부 차원에서 남북한 통합을 염두에 둔 대북 지식협력의 큰 그림 속에 대북 지식협력이 기획되고 추진되지는 못하였다. 정책사업, 합동사업, 영유아지원 사업 등 재정을 지원하면서 사업의 실행은 민간이나 국제기구가 담당하는 방식의 지식협력 구상 및 실행 수준에 머물러 있다. 남북 당국 간 경색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대북 지식협력을 구상하기보다는 민간이나 국제기구의 사업을 수용하여 재정을 지원해주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 국내 민간단체, 국제기구가 수행한 지식협력 사업은 주로 북한 보건의료, 산림, 농축산 분야에 집중되어 있고, 교육, 세미나, 토론 등을 중심으로 지식협력이 진행되었다. 기 추진된 대북 지식협력 사업들은 농업, 보건의료, 산림 등 북한이 필요로 하는 분야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대학 및 인재양성 센터 등 체계를 갖춘 지식협력이 추진되기도 하였다. 주로 사업 추진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대북 지식협력이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대북 지식협력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대한 인식의 정립이 필요하다. 주로 개인의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면서 조직 역량 강화도 추진하였지만 제도나 정책 개선을 위한 지식협력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민간단체의 지식협력은 조직 및 제도의 역량 강화보다는 개인의 역량 강화에 더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무엇보다 남북관계 경색과 대북제재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코로나19 상황으로 국경이 봉쇄되면서 대북 지식협력은 다른 교류협력 사업과 마찬가지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추진되지 못하였다.

전체적으로 한국의 민간단체에서 이루어진 지식협력 사업은 남북한 간의 지식 격차 해소를 위해 해당 사업의 전문가를 북한 및 제3국에 파견하여 관련 지식을 전수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유형이 두드러졌다. 또한 북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은 개인과 집단의 역량을 강화하는 효과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제도 개선을 목표로 이루어진 대북 지식협력 사업은 민간 차원에서는 많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OECD CRS의 ‘연수 및 장학금 원조’ 유형의 경우 수원국 국적의 학생들에게 장학금 및 기타 비용을 지급할 수 있어야 하는데, 북한의 소극적 태도로 인하여 국내NGO가 주관하는 형식의 대북 지식협력은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조직을 설립하여 체계적인 지식협력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속성을 확보하고 지식협력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지식협력 사업들이 시도되었다. 이러한 독자적인 교육 형태의 지식협력 사업이 추진되었지만 주로 제3국에서 이루어졌다. 국제사회의 개인 역량 강화를 위한 지식협력과 같이 북한 관료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 및 교육 형태의 지식협력 사업은 추진되지 못하였다.

가장 큰 한계는 지속성의 문제이다. 민간단체에서 활발하게 시도되어 온 기술협력이 남북한의 정치적 상황과 교류의 단절, 대북제재 국면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

추진 주체의 측면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함으로써 북한의 참여 가능성을 제고하는 지식협력 사업들이 추진되었다. 거래의 숲이 주최한 ‘동북아국제산림협력회의’는 다양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국내NGO가 주관하면서도 다자 형태로 추진함으로써 북한의 참여 가능성을 제고하였고 신뢰를 바탕으로 국토환경보호성이 북한 주체로 나서는 등 북한 당국의 태도를 이끌어내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남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정부 정책 사업의 일환으로 민간형태로 추진됨으로써 국내, 남북한 당국, 다자가 복합적으로 참여하는 사업형태로 추진되었다.

지식협력과 경험의 연계의 관점에서 일부 지식협력 사업이 추진되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인재양성센터는 과학기술분야 남북 교류협력 및 국제 표준에 의거한 북한 IT 인력 교육을 통해 남북 경험 활성화와 북한 인력 활용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목표로 2006년 6월 설립되었다. 또한 ‘동북아산림협력센터’ 건립 합의에서 보듯이 다자협력과 제3국에서의 이행을 통해 지속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경험과의 연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국제사회의 대북 지식협력의 현황과 마찬가지로 대북 지식협력의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체계는 수립되어 있지 못하다.

다만, 지식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식협력의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도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예를 들어 북한 참가자들이 직접 작성함으로써 북한이 민감해할 수 있는 상당한 수준의 모니터링, 평가 자료(문서, 데이터, PPT)를 확보하고 축적할 수 있었다.¹⁵⁸⁾ 또한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지속적인 학술회의 개최 과정에서 산림분야에 있어 북한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현안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¹⁵⁹⁾

월드비전의 인재 양성 프로그램, 겨레의 숲의 동북아산림협력센터 설립에 대한 합의에서 보듯이 지식협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프로그램과 조직의 설립으로 확장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158) 월드비전 심층 설문조사 (2021.8.).

159) 겨레의 숲 심층 설문조사 (2021.8.).

V. 남북 지식협력 추진 방향



1. 지식협력과 북한의 입장 및 여건

앞으로 남북 지식협력을 추진하는 데 북한의 태도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지식협력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북한이 제시하는 ‘지식경제’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 북한은 ‘지식경제’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북한에서 말하는 지식경제는 우리의 21세기 지식기반사회, 정보화 사회 개념과 맥을 같이 한다.¹⁶⁰⁾

‘지식경제’는 ‘지식’과 ‘경제’의 두 개의 핵심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 지식과 경제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북한은 ‘지식경제’를 “새로운 지식의 발견(정보)과 기술보급(지식)이 사회경제발전의 위력한 수단으로 되는 시대, 지식산업이 사회경제발전을 주도하는 시대”로 규정하고 있다.¹⁶¹⁾ 또한 지식경제시대에는 첨단과학기술의 발전에 기초해서 경제가 발전하고 지식산업이 경제발전을 주도하는 핵심 산업이 된다고 하면서 첨단과학기술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¹⁶²⁾ 지식이 경제의 기반이라는 점을 확고하게 연계하면서 ‘첨단과학기술’을 지식과 경제를 연계하는 핵심 지식의 기반으로 설정하고 있다. 지식과 경제를 연계하는 북한의 인식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과학기술혁명’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¹⁶³⁾ 김정은 정권 들어 정보통신 인프라에 기초한 정보통신기술의 활용과 확산에 주력하면서 ‘새 세기 산업혁명’ 추진의 기반으로 관련 분야의 지식과 기술력을 갖춘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강조하고 있다.¹⁶⁴⁾ 특히 지식을 소유할 뿐 아니라 새로운 지식을 생산, 전파, 응

160) 조정아·이춘근·엄현숙, 『‘지식경제시대’ 북한의 대학과 고등교육』, p. 30.

161) 장금란·박광철, 『교육발전의 세계적 추세 교육의 정보화』, p. 7.

162) 손영석, 『지식경제시대와에 제기되는 몇가지 경제리론문제』, pp. 122~124.

163) 조정아·이춘근·엄현숙, 『‘지식경제시대’ 북한의 대학과 고등교육』, p. 33.

164) 위의 책, p. 37.

용할 수 있는 다양한 능력을 지닌 인재의 양성을 강조한다.¹⁶⁵⁾

북한이 강조하는 지식경제의 개념과 전략, 과학기술혁명과 인재 양성의 방향성은 향후 남북 지식협력을 추진하는 핵심적인 정책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제2장에서 지식협력의 ‘지식’은 과학적 그리고 기술적 정보로서 특정 국가 혹은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들로 정의하였다. 지식과 경제를 연계하는 북한의 ‘지식경제’에는 2장에서 정의한 ‘지식’의 구성요소를 일부 내포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식경제와 지식협력에서의 지식을 매개로 하는 경제적 관점은 민간단체를 통한 심층설문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북한은 대북지원과 경협이 결합되거나 점차 경협으로 전환되기를 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관광을 매개로 하는 이윤 창출의 관점에서 인프라 및 법률에 관한 지식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또한 농업 분야의 경우에도 선진 영농기술의 도입이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적 경협과 결합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¹⁶⁶⁾

지식경제, 과학기술 혁명과 과학기술 인재 양성은 일정 정도 남북 지식협력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심층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간단체들이 북한 파트너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식협력의 필요성을 인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농업의 과학화, 기계화, 현대화라는 슬로건 아래 북한도 농업 분야에서 지식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¹⁶⁷⁾

“북한도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의료진 양성과 의료수준 향상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지식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¹⁶⁸⁾

165) 위의 책, p. 38.

166)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통일농수산사업단·지구촌농업협력 및 식량나누기운동 심층 설문조사 (2021.8.).

167) 지구촌농업협력 및 식량나누기운동 심층 설문조사 (2021.8.).

168) 샘복지재단 심층 설문조사 (2021.8.).

“최근 사업 영역별로 과학기술혁명의 과제가 부여되어 모든 사업 분야마다 지식협력 사업에 대한 요구와 열의가 높아졌다.”¹⁶⁹⁾

“2015년 이후 협의 과정에서 북한은 기본적으로 외부의 새로운 지식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상당히 진솔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 방안에 대해 문의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¹⁷⁰⁾

“2018년 방북과 2019년 제3국에서의 북측 인사들의 면담을 통해 선진기술 확보와 보건의료의 물적 토대를 강화해 북측의 보건의료를 질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김정은 집권 이후 과학과 교육을 강조하며 선진기술과 의료산업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자 한다. 특히 선진 의료기술을 통해 주체화 즉 향후 자립의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¹⁷¹⁾

그렇지만 북한과 지식협력을 협의하여 추진할 경우 북한 내 여건에 대한 심층 설문 조사와 각종 연구에 따르면 여러 가지 제약 요소도 동시에 발견된다.

첫째, 개혁·개방과 시장경제에 대한 입장과 체제 및 정권유지라는 본질적 요소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남북 지식협력에 제약을 가하는 요소로 지속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당국도 지식협력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여전히 외부와의 접촉, 정보 교류, 인적 교류에 민감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제금융기구와 자본주의 선진국의 개발역량 프로그램 도입을 북한의 교육체제에서 수용하기는 여전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¹⁷²⁾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형태의 지식협력에 대해 북한은 여전히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169) 어린이어깨동무 심층 설문조사 (2021.8.).

170)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심층 설문조사 (2021.8.).

171)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심층 설문조사 (2021.8.).

172) 김태균, “북한의 개발역량 발전을 위한 시론: 남북협력 파트너십으로서 지식공유·역량 발전의 유연성,” p. 15.

제한된 범위에서 북한 유학생과 실습생을 개발역량 강화를 위하여 해외에 파견하고 있을 뿐이다. 대부분 북한에 정치적으로 우호적인 국가에서 초청하는 역량강화 연수프로그램과 과학·기술·문화교류 협정 하에 실시하는 해외파견 교육행사가 주요 대상이 된다. 해외에서 전문가를 평양이나 북한 내부의 특정 지역으로 초빙하여 필요한 분야의 교육연수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시장경제에 대한 지식을 수용하는 데는 본질적인 제약이 여전히 존재한다.¹⁷³⁾ 다만, 북한은 남북 당사자 사이의 해외 연수나 교육 형태의 대북 지식협력에 대해서는 까다로운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국제 행사를 매개로 북한 인사를 초청하는 대북 지식협력 형태에 대해서는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¹⁷⁴⁾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성사 비용, 초청 인력의 교통비와 체류비 이외에 추가 요구 비용 등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¹⁷⁵⁾

자본주의 시장 경제 및 공공행정 등 북한당국의 정책 및 제도 형성과 관련된 교육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북한당국의 태도로 인해 지식협력이 경제개발프로그램과 같은 대규모 개발협력정책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¹⁷⁶⁾

지식협력을 수행하는 지역에 대한 제약이 여전히 존재한다. 북한은 여전히 평양 이외 지역에서의 지식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¹⁷⁷⁾

둘째, 북한당국이 원하는 방식과 내용을 일정 정도 수용하여 지식협력을 구상하더라도 북한당국과의 지식협력 협상 과정에서 여전

173) 위의 글, pp. 16~17.

174) 겨례의 숲·하나누리·국제푸른나무·지구촌농업협력 및 식량나누기운동 심층 설문조사 (2021.8.).

175)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심층 설문조사 (2021.8.).

176) 김태균, “북한의 개발역량 발전을 위한 시론: 남북협력 파트너십으로서 지식공유·역량발전의 유연성,” p. 15.

177) 어린이어깨동무 심층 설문조사 (2021.8.).

히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¹⁷⁸⁾ 지식협력 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또 다른 북한의 태도는 지식협력 사업으로 북한의 현실이 공개될 수 있으므로 반복되는 협상과 설득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¹⁷⁹⁾

셋째, 북한은 아직까지 외부에서 유입되는 선진정책이나 개발협력 사업을 수용하고 내재화하는 역량이 적절하게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¹⁸⁰⁾ 북한 자체의 열악한 시설이 지식협력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종군 배양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실험실의 전력이 불안정하여 북한에서 별도 전기 생산 기기를 요구하였는데, 비용 문제로 성사되지 못하였다.¹⁸¹⁾

다만, 북한이 현 시점에서 적극적인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지는 않더라도 단기적으로 북한이 개혁·개방을 추진하는 데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시장경제 요소들에 대한 지식협력은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¹⁸²⁾

178) 김태균, “북한의 개발역량 발전을 위한 시론: 남북협력 파트너십으로서 지식공유·역량발전의 유연성,” p. 13.

179) 어린이어깨동무 심층 설문조사 (2021.8.).

180) 김태균, “북한의 개발역량 발전을 위한 시론: 남북협력 파트너십으로서 지식공유·역량발전의 유연성,” p. 9.

181)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심층 설문조사 (2021.8.).

182) 김태균, “북한의 개발역량 발전을 위한 시론: 남북협력 파트너십으로서 지식공유·역량발전의 유연성,” p. 19.

2. 추진 방향

가. 남북 지식협력 방향의 설정

남북관계가 복원 및 개선, 심화 단계에 접어들 경우 개발협력 아래 남북 지식협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사전에 수립해두어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 남북한 통합이라는 궁극적 목표 아래 중장기적인 거시적 남북 지식협력 종합계획과 세부 추진방안을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남북 지식협력 사업을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 지식협력 사업은 남북 모두의 미래비전을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¹⁸³⁾ 궁극적으로 남북한 통합과 산업구조의 재편까지 고려하여 중장기 지식협력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¹⁸⁴⁾

정부 차원의 남북 지식협력 총괄 계획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담도록 수립하도록 한다. 먼저 남북 지식협력을 추진하는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제2장 국제논의에서 보듯이 남북 지식협력의 궁극적 목표도 북한의 경제발전, 사회발전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이 궁극적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편입될 수 있는 토대와 제도적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¹⁸⁵⁾

다만, 이 경우에도 북한의 태도, 특히 사회주의 체제 유지에 대한 우려, 개혁·개방에 대한 태도를 핵심 요소로 고려하여 지식협력의 분야는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정치적 분야에서 시작하여 남북관계 개선 및 신뢰의 수준에 따라 시장경제와 연

183)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심층 설문조사 (2021.8.).

184)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심층 설문조사 (2021.8.); 예를 들어 농업 분야 지식협력의 경우 ‘농산업과 기술의 발전’ ‘시장접근’ ‘남북공동식량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접근할 수 있다. 통일농수산업단 심층 설문조사(2021.8.).

185) 김태균, “북한의 개발역량 발전을 위한 시론: 남북협력 파트너십으로서 지식공유·역량발전의 유연성,” p. 7.

결될 수 있는 과도적 분야를 거쳐 시장경제 발전과 전환을 지원할 수 있는 분야로 심화·확대해나가도록 한다.

초기 단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남북 지식협력 분야를 선정하는 기준 및 요소를 살펴보면 첫째, 제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무엇보다도 북한의 주인의식(ownership) 제고와 북한의 수요(needs)를 최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북한은 SDGs의 VNR에서 에너지(SDG 7), 농림업(SDG 2), 물과 위생(SDG 6), 환경(SDG 13, 14, 15)을 4대 우선 분야로 내세우고 있으며, 산림협력, 인민의 지식노동자 양성 등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당과 내각의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서적, 교육영상 등 기술적·전문적 자료에 대한 수요가 존재한다.¹⁸⁶⁾

둘째, 제2장에서 살펴본 대로 국제사회의 추세를 고려하여 ‘이슈의 포괄성’을 주요 요소로 설정해야 한다.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특정 범주로 제한되지 않으며, 전 지구적 발전을 목표로 이슈를 포괄하는 지식협력 사업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이슈의 포괄성’이라는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지식협력 분야로서 ‘기후 변화’를 들 수 있다.¹⁸⁷⁾

셋째, 유엔과 북한당국이 공식적으로 합의한 ‘유엔전략계획 2017-2021’에서 강조한 분야를 들 수 있다.

넷째,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 분과회담에서 합의가 도출된 분야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요소를 고려할 때, 기후변화, 산림, 농업, 보건의료, 식수 및 위생, 에너지, 통계, 인력 양성 등을 1단계 남북 지식협력을 위한 주요 분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분야 협력을 통해 신뢰가 축적되고 남북관계가 심화되면 점차 교역, 세법, 비니지스 영역 등으로 지식협력 분야를 확대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단절된 형태의 단계가

186)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심층 설문조사 (2021.8.).

187) 북한도 기후변화, 산림황폐화 방지 및 복구, 탄소배출권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겨례의 숲·기아대책 심층 설문조사 (2021.8.).

아니라 남북관계 등 상황에 따라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을 것이다.

2장에서 살펴본 대로 ‘사업대상의 다양성’이라는 추세를 반영하여 대북 지식협력을 통한 북한 내 역량 강화를 추진해나가야 한다. 지식협력은 지식이나 정보 공유를 넘어 수원국의 제도 구축과 정책 기획에 필요한 개인, 조직, 국가 역량을 제고하는 목적도 갖고 있다.¹⁸⁸⁾ 70년대 지식협력 사업은 ‘행위자’ 개인의 역량강화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80년대 행위자가 속해 있는 ‘조직’ 및 ‘기관’의 역량강화에 역점이 두어졌다. 90년대 이후 지식협력 사업은 ‘행위자’와 ‘조직’ 및 기관의 역량을 결정하는 ‘제도’의 역량 강화로 관심이 확장되었다. 따라서 개인이나 특정 기관의 능력 향상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제도적 환경 변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지식협력이 구상되어야 한다. 우선적으로 북한의 수용 역량 제고 차원에서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와 접점을 찾는 북한 관료들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다. 점차 개인의 역량이 기관 수준의 제도적 역량으로 확산되는 방향으로 지식협력이 추진되어야 한다.¹⁸⁹⁾

수원국이 자국의 상황에 부합하는 최적의 모델에 대해 주인의식을 갖고 스스로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지식협력 사업의 전제조건이다.¹⁹⁰⁾ 따라서 수원국의 주인의식 및 참여적 개발정신 고양이라는 원칙에 입각하여, 일방향의 기술전수 혹은 이전을 넘어 동등한 파트너십, 주인의식을 고려하여 지식협력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북한 내에서 북한 인력이 주도하는 지식협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식협력을 추진해야 한다.¹⁹¹⁾

188) 최창용, “남북 지식협력(공유) 추진 방향,” 통일연구원 서면자문, 2021.9.21.

189) 김태균, “북한의 개발역량 발전을 위한 시론: 남북협력 파트너십으로서 지식공유·역량 발전의 유연성,” pp. 9~13.

190) 최창용, “남북 지식협력(공유) 추진 방향.”

191) 김태균, “북한의 개발역량 발전을 위한 시론: 남북협력 파트너십으로서 지식공유·역량 발전의 유연성,” p. 13.

또한 지식협력과 이윤 창출이 연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식협력
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2장의 지식협력과 사회발전의 효과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에
서 보듯이 지식협력이 북한 내 특정 집단에만 혜택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정보와 자원을 독점하고 있는 특정 엘리트 집
단의 부정부패로 인해 북한 내 기득권 세력의 자산증식에 기여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투명성과 선한 거버넌스를 구축해나가되, 지
식협력을 통해 제공되는 다양한 지식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북한
내 행정 역량을 고려하여 접근하도록 한다.

제2장에서 살펴본 인도네시아 기업에 대한 일본의 기술 지원의 사
례는 참여기업의 기술향상에 기여하였지만 비참여자에 대한 파급효
과는 제한적이었다. 지식협력의 수혜가 골고루 확산될 수 있도록 접
근해야 한다. 따라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역량 강화가 북한 내부
로 확산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초기 피교육자는
교육훈련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들 현지
피교육자들이 교육 담당자로서 자국 내 인력 양성을 담당하도록 하
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나가도록 한다.¹⁹²⁾

남북 지식협력 사업의 실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인적 교류나 외부 정보 유입에 대한 북한당국의 민감성
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남북의 역량개발
사업 추진 시 프로그램의 내용과 참가자 수 등의 논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지점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협의 주체, 지
식협력 수행 장소 등 갈등의 여지를 줄일 수 있는 대안들을 마련해야
한다.¹⁹³⁾ 예를 들어 제3국이 주관하는 국제 지식협력 네트워크를 구

192) 임을출, 최창용, “북한 개발지원 방향과 전략,” 『통일정책연구』, 제14권 2호, 2005, p. 59.

193) 김태균, “북한의 개발역량 발전을 위한 시론: 남북협력 파트너십으로서 지식공유·역량
발전의 유연성,” pp. 28~29.

축하고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고 신뢰가 구축되면 남북 직접 지식협력으로 확산하는 것도 구체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나. 대북 지식협력 추진 방향의 구축

(1) 대북 지식협력 거버넌스의 구축

통일부 중심의 정부협업, 민관협력, 국제사회와의 협력 방향, 민간단체의 대북 지식협력 추진을 위한 역량 제고 방안 등 대북 지식협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역할을 수행할 대북 지식협력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독일은 양자 차원에서 지식협력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협력공사(GIZ)라는 조직을 독립적으로 운영하였다. GIZ는 다양한 국가와 지식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국가조직이지만 우리의 경우 ‘남북’ 양자 사이의 지식협력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조직이라는 점에서 GIZ의 조직을 참조하여 남북 양자 사이의 지식협력을 전담하는 조직을 통일부 내에 편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 지식협력 수행을 위한 정부 체계는 남북관계 발전의 수준, 대북 개발협력과 지식협력의 수준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구상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단기적으로 통일부 직제 내에 지식협력 사업의 관장을 명시적으로 추가하고 전담 인력 배치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단계로 남북관계와 개발협력, 지식협력이 점차 확대되면 개발지원협력과 내에 지식협력 전담팀을 두도록 한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대북 개발협력과 지식협력 사업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조정 및 관리할 수 있는 정부 조직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우선적으로 3개 과에서 분산되어 관할하고 있는 대북지원 직무를 통합하여 국 단위로 확대 개편하되, 지식협력을 전

담하는 ‘남북 지식협력과’(가칭)를 추가로 신설하도록 한다. 국내 개발협력과 지식협력을 전담하는 조직을 편제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위해 조직을 재편하도록 한다. 개발협력, 인도적 지원, 지식 협력을 포괄하는 ‘대북협력국’(가칭)은 남북 통합을 궁극적 목표로 정부 차원에서 개발협력, 지식협력을 총괄하는 실무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또한 통일부 차관이 책임을 맡는 관련 정부 부처의 대북 개발협력 및 지식협력 업무를 총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되 대북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대북협력국’이 실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남북 지식협력의 효과가 제고되기 위해서는 대북 지식협력을 추진하는 다양한 주체들 사이의 협력 메커니즘의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

우선 국내적으로 정부와 국내NGO와의 지식협력을 위한 민관협력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기존의 ‘대북지원민관정책협의회’의 역할에 지식협력을 추가하여 확대하거나 남북 지식협력을 협의할 수 있는 별도의 ‘남북 지식협력 민관협의회’(가칭)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 지식협력은 다양한 전문 분야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특히 남북 지식협력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때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도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으므로 정부-지자체-국내NGO(북민협) 사이에 지식협력을 협의할 수 있는 3자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한다. 3자 민관협의체를 바탕으로 ‘민관학’의 유기적 네트워크도 구성하도록 한다.¹⁹⁴⁾ 학계를 포함하는 전문가는 영유아지원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건의료 분야 ‘기술지원단’을 구성하였던 통일부 운영 사례를 참조하여 구성하도록 한다. 특히 학

194) 겨례의 숲 심층 설문조사 (2021.8.).

계의 경우 KSP 경험에서 시사점을 도출하여 대북 지식협력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KSP 사업을 수행하였던 국책연구기관 합동 대북 지식협력 연구체를 구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남북 지식협력과’를 중심으로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유엔, 개별 국가, 국제NGO 등 대북 지식협력을 수행하는 주체와 사업 현황을 파악하고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나가도록 한다.

남북 차원에서는 북한이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SDGs를 매개로 지식협력의 장을 마련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유엔이 참여하도록 구성함으로써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유엔과 남과 북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SDGs 협력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식협력 논의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¹⁹⁵⁾

아래에서 언급할 지식협력 플랫폼을 활용하여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남북 지식협력 사업을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한다. 대북 지식협력의 현황과 평가를 위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성하고 지식협력 백서를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¹⁹⁶⁾

KSP 경험에서 시사점을 도출하여 대북 지식협력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KSP 사업을 수행하였던 국책연구기관 합동 연구체계를 구성하도록 한다.

통일연구원을 주관 연구기관으로 하여 지식협력의 전문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식협력 국책연구기관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한다. 정부의 종합계획 수립과정에서 분야별 세부 추진방안을 수립하는 자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195) 하나누리 심층 설문조사 (2021.8.).

196) 통일농수산사업단 심층 설문조사 (2021.8.).

(2) 남북 지식협력 효과성 제고를 위한 플랫폼의 구축

유엔과 세계은행 등 다자 기구들은 회원국들이 지식협력을 추진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식협력을 위한 플랫폼 구축을 활성화하는 추세에 있다. 이들 다자기구들은 분야별, 지역별, 파트너십의 종류별로 사업을 주선하거나, 파트너십을 주선하는 등의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를 반영하여 한반도 개발 협력을 위한 지식협력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들 기구들은 다자 기구라는 점에서 한반도의 현실을 고려한 정부 차원의 플랫폼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 지식협력 플랫폼 구축을 위해 국제사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지식협력 플랫폼 사례를 연구하여 참조할 필요가 있다.

정부 차원에서 대북 지식협력을 위한 플랫폼은 제2장에서 살펴본 대로 국제사회의 추세를 반영하여 ‘사업대상의 다양성’, ‘이슈의 포괄성’을 포괄하는 형태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최우선적으로 대북 지식협력과 관련한 과학적 정보와 디지털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한다.

지식협력 플랫폼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자문 및 컨설팅을 제공하는 지식 허브 역할을 수행하도록 구상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이해 당사자들에게 자문 및 컨설팅을 제공하는 지식허브의 기능을 하고 있는 UNOSSC의 사례를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프로젝트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컨설팅을 구하는 역할이 포함되도록 한다. UNOSSC가 제공하는 글로벌 지식공유를 위한 파트너십 중개 플랫폼인 South-South Galaxy의 사례를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초기 단계에서 수원국 사용자가 자신의 개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사한 솔루션을 찾아보도록 하며, 찾지 못하게 되는 경우 해당 과제의 솔루션에 대한 컨설팅을 요청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유사한 문제를 해결한 파트너와 연결하거나 자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해당 주제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유엔 전문가와 연결한다. 이를 통해 혁신적인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설계하도록 한다.

국제사회의 사례를 참조하여 역할과 기능을 구체적으로 구상하되, 플랫폼은 단계적으로 기능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구축해나가도록 한다.

1단계로 현재 다양한 행위자들이 진행해온 사업들의 범주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이들의 사업 결과물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축적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한다.

사업별, 지역별, 파트너십 형성을 위한 기초 자료 및 정보, 국제적인 모범 사례의 추적 및 공유를 위한 지식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한다.

2단계로 온라인 학습 콘텐츠를 개발하여 플랫폼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플랫폼 내에서 지속적으로 파트너십이 확장되도록 한다.

3단계로 관련 콘텐츠들이 경제행위와 연동될 수 있도록 국제개발기구 혹은 민간 기업과의 매칭 사업을 추진하며, 성공 사례를 지속적으로 공개하도록 한다. 끝으로 남북관계 진전과 신뢰의 심화 및 개발협력과 지식협력의 진전 수준을 고려하여 궁극적으로 플랫폼에 북한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앞에서 언급한 범정부 협의체, 민관협의체 등 대북 지식협력 거버넌스를 적극 활용해나가도록 한다.

다. 민간단체의 대북 지식협력 추진 방향

민간단체의 대북 지식협력 추진 방향 제안과 관련하여 먼저 민간단체들의 구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심층 설문조사를 통하여 단체들이 구상하고 있는 대북 지식협력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아래 <표 V-1>과 같다.

〈표 V-1〉 국내NGO 대북 지식협력 추진계획

단체명	대북 지식협력 추진계획
지구촌농업협력 및 식량나누기 운동	○ 2019년 8월 농민 12명과 목화전문가 행정원 등 15명과 중국 신강성을 방문할 계획 수립 * 코로나19로 중단 상태
어린이의약품 지원본부	○ 북한 제약산업 현대화에 필요한 지식협력의 추진 - 다국적 제약회사를 포함하여 선진 제약산업에 대한 방문 및 교육 프로그램의 추진 ○ 임플란트 공장의 공동 운영과 기술이전 및 판매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기획 ○ 의료관광을 매개로한 사업 추진과정에서 대북 지식협력 모색
굿피플 인터내셔널	○ 북한 내 백내장으로 인한 실명률 감소를 목표로 하는 백내장 수술 캠프와 북한 의료진 역량강화 교육의 추진
샘복지재단	○ 평양시 제3인민병원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북한 의료진 양성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추진중 - 한국과 미국의 샘복지재단의 협력하여 기술전수 및 교육을 실시할 계획
경남통일농업 협력회	○ 북한 상황에 맞는 스마트팜 육묘장의 구축 및 기술협력의 추진 - 남북 순환농업체계의 구축
겨레의 숲	○ 2022년 제5회 동북아국제산림협력회의 개최 추진 * 남북관계 경색 및 코로나 등 대내외적 상황으로 연기 중 ○ 중국 등 제3국에 남북공동연구센터 등을 설립하여 기술이전, 공동연구, 공동시험단지 조성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업의 추진
한국국제기아 대책기구	○ 양묘장 건축 및 묘목 생산지원(양묘기술, 재배기술) - 생산물 가공시설지원(가공기술, 판매방법)
어린이어깨동무	○ 보건의료분야 지식협력 사업의 추진 - 북한의 원재료를 활용, 영양, 보건의료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공동연구 및 공동생산
월드비전	○ 상황을 감안하여 중국에서 실시했던 북한 농업기술자 채종연 수 재개 고려 * 평양에 훈련장을 만들고 훈련을 지속하자는 초기 논의
하나누리	○ 라선시에 사회적 금융 센터 기능을 하는 금융조직을 설립하고 지식협력을 병행하여 추진
전남남북교류 평화센터	○ 신북한농업단지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미생물 배양 사업을 추진하면서 GCM 농법을 활용한 미생물 배양 기술 전수 추진
통일농수산사업단	○ 북한의 신년사에서 언급되는 종자혁명, 과학영농을 중심으로 육종, 종축사업, 스마트팜 등 경험과 자본 및 기술이 필요한 농업기술분야의 협력 구상

출처: 심층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위의 <표 V-1>에서 보듯이 심층 설문조사를 통하여 국내NGO들이 구상하고 있는 지식협력 계획은 보건의료, 농업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산림협력, 금융관련 지식협력도 포함되고 있다. 지식협력의 세부 추진방식(형태)을 살펴보면 부분 사업으로서의 기술 전수, 교육 프로그램, 학술회의 및 공동연구 등의 방식을 구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 및 지식협력과 생산 및 이윤과의 연계를 구상하는 계획도 보이고 있다.

남북 직접 지식협력에 대한 북한의 민감성을 고려할 때 국내NGO 차원에서 남북 간 무역, 금융, 경제, 관광, 법률 등으로 지식협력이 단기적으로 확대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¹⁹⁷⁾ 따라서 민간단체들의 구상과 위에서 제시한 정부 차원의 대북 지식협력 추진 방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내NGO들은 기존에 추진해 왔던 분야를 중심으로 북한의 필요를 반영하여 보건의료, 농업, 기후변화 및 산림을 중점 추진 분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분야를 중심으로 지식협력과 이윤창출의 연계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지식협력을 추진해나가도록 한다. 특히 남북의 공동 연구, 경험으로의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식협력을 구상해야 한다.¹⁹⁸⁾ 이를 바탕으로 과도기적 단계로 점차 시장경제 분야에서 북한이 덜 민감한 분야로 지식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가도록 한다. 이러한 과도기 단계에서 지식협력이 경영에 대한 혁신 및 변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구상해나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북한 보건의료인들의 의료장비를 다루는 기술이 향상되었는데, 북한 전체 방사선과의 운영에도 변화를 준 요소로 작용하였다.¹⁹⁹⁾

개발협력의 일환으로 지식협력이 수반되는 부분사업의 형태로 지식협력을 추진하더라도 반드시 지식협력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개발

197) 나이스피플 심층 설문조사 (2021.8.).

198)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심층 설문조사 (2021.8.).

199)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심층 설문조사 (2021.8.).

협력 이행을 위한 합의를 체결해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독자적인 지식협력 사업에 대한 별도의 합의를 체결하는 등 독자사업 형태의 지식협력 사업을 점차 확대하여 지식협력 사업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확대해나가도록 대북지원의 방향을 설정하도록 한다.

북한 파트너와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경우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국제NGO와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여 지식협력의 범위를 확산해나갈 필요가 있다. 굿피플 인터내셔널의 ‘대북 안(眼)보건 현황 및 향후과제를 위한 워크숍’, 국제푸른나무의 ‘장애인을 위한 국제협력 포럼’의 사례에서 보듯이 초기 단계에서 북한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북한과 기존에 신뢰를 형성하고 있는 제3국의 협력기관과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지식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신뢰가 형성되면 남북한 사이의 직접 지식협력으로 전환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겨레의 숲의 ‘동북아국제산림협력회의’ 사례에서 보듯이 남북한을 포함한 다자가 참여하는 특정 분야 공동학술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제3국에 센터를 설치하여 지식협력 및 사업을 시행하고 궁극적으로 북한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중장기적 사업의 경우 단계적 접근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단계적 접근이란 연구 집단과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성을 입증하고 시범 사업을 확대하며, 주민과 함께 하는 사업으로 전환하고 지속성을 위해 경협사업으로 재편해나가는 과정을 말한다. 특히 연구 집단과 시범 사업을 할 때 남북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동협의회를 구성하여 활성화하도록 한다.²⁰⁰⁾

200)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심층 설문조사 (2021.8.).

단기적으로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 지식협력을 모색하고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코로나 시대에 국경을 초월한 비대면 국제학술대회 및 비대면 교육 세미나가 활발하게 개최되고 있다. 북한도 비대면 회의에 익숙한 것으로 알고 있다. 코로나19 상황 아래 중단기적으로 화상 학술회의를 통한 지식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북한과 물리적인 교류의 방법과 수단 이 제한 받고 있는 현실점에서 국제적인 남북한 교류 및 교육 플랫폼을 통해서 지속적인 남북 지식교류 협력 사업이 일어날 수 있도록 민간의 지식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한다.²⁰¹⁾

현장에서 지식협력을 수행하는 파트너의 성격과 북한체제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세한 부분에서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지식 협력이 인적 교류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지식협력을 위한 인적 교류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개방적이고 열린 태도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²⁰²⁾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인적 접촉면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상해나갈 필요가 있다.

북한의 사업을 담당하는 중앙의 당일꾼, 지역의 행정일꾼, 해당 사업장의 책임자가 필요로 하는 지식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행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²⁰³⁾ 이와 관련하여 민화협 참가, 대상지역의 당과 행정일꾼, 해당사업장의 책임자, 해당사업장의 주민 등 북한 참여자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기획해야 한다.²⁰⁴⁾ 무엇보다 외부 정보에 민감하고 통제가 강한 북한의 특성을 고려할 때 대북 지식협력을 실제로 담당하는 우리 전문가의 절

201) 겨례의 숲·국제푸른나무 심층 설문조사 (2021.8.).

202) 월드비전 심층 설문조사 (2021.8.).

203)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심층 설문조사 (2021.8.).

204) 위의 자료.

제된 자세와 태도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정치적 중립, 인도적 가치에 대한 중시를 바탕으로 하되, 언론 인터뷰 등 홍보의 자세 등 대북 지식협력에 참여하는 전문가에 대한 사전 교육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²⁰⁵⁾

성과중심의 지식협력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국내 NGO의 내적 역량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²⁰⁶⁾

이를 위해 남북 지식협력 사업의 핵심 주체의 하나인 국내 NGO의 역량 강화를 위한 민관의 협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NGO의 자율성과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간단체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재정을 지원하도록 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이하 북민협)의 주요 사업의 하나가 ‘회원단체 대상 역량강화 사업’이다. 따라서 구심점 역할을 강화하고 북민협을 중심으로 민간의 역량 강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또한 북민협도 민간 차원에서의 지식 협력 역량 강화, 효율적인 지식협력 민관협력을 위해 지식협력 관련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북민협은 분야를 중심으로 ‘농축산위원회’, ‘환경산림위원회’, ‘일반구호위원회’, ‘보건의료복지위원회’ 등 4개의 소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직능을 고려하여 ‘지식협력위원회’를 추가적으로 신설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보건의료분야에서 남북의학용어사전 제작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공유되었듯이,²⁰⁷⁾ 남북 지식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분야별 다양한 사전을 제작하는 것도 포함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식협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분야별로 시행을 위한

205) 월드비전 심층 설문조사 (2021.8.).

206) 샘복지재단 심층 설문조사 (2021.8.).

207)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나눔과 평화의 길, 그 스무 해의 여정』, p. 264.

매뉴얼을 만들고²⁰⁸⁾ 지속적으로 현장의 상황을 반영하여 수정·보완해나가도록 한다.

민간단체들이 그동안 지식협력을 통해 축적해 놓은 신뢰 및 인적 교류와 접촉은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²⁰⁹⁾ 우선 국내NGO의 대북 지식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식협력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재정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식협력 사업은 다년도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보다 효과를 볼 수 있으며, 북한도 다년에 걸친 지속사업을 요청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정 지원도 다년도 사업의 성격에 맞게 개편할 필요가 있다.²¹⁰⁾

정부와의 역할 분담 아래 국내NGO는 관료가 아닌 전문가, 주민 등을 지식협력의 파트너로 상정하되, 조선익스체인지의 사례에서 보듯이 대상도 젊은 층으로 확대하고 여성의 비율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208)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심층 설문조사 (2021.8.).

209) 월드비전 심층 설문조사 (2021.8.).

210) 굿피플인터내셔널 심층 설문조사 (2021.8.).

VI. 결론



국제사회는 개발협력 추진 과정에서 역량을 형성하고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지식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지식협력 사업은 수원국의 정책 및 제도개선, 그리고 이와 관련된 종사자들의 역량개발 등을 목표로 하며, 최종적으로 수원국의 사회, 경제적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그런데 국제사회의 사례에 대한 연구를 통해 지식협력 사업이 수원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수원국의 필요, 수원국의 수용역량, 수원국의 현지 여건 등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앞으로 대북 지식협력을 추진할 때 남북한 통합이라는 궁극적 목표 아래 대북 지식협력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한계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국제사회와 우리 정부 및 국내NGO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유형의 대북 지식협력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렇지만 지식협력 사업의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하고 추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개혁·개방에 대한 북한당국의 민감한 태도가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였다고 판단된다. 이로 인해 분명한 목표 아래 수원국인 북한의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투명하게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연속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못하였다.

특히 우리 정부와 국내NGO에서 추진한 대북 지식협력 사업을 살펴보면 대북지원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필요한 부분 사업의 성격이 대부분으로 독자적 형태의 지식협력 사업이 추진되기는 하였지만 지식협력 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대북 지식협력을 총괄해야 할 통일부에는 직제상으로 지식협력이 명시되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남북 통합을 염두에 두고 경제발전, 사회발전이라는 분명한 목표 아래 대북 지식협력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세부방안을 마련

하여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 가장 우선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식협력 분야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국제사회의 최근 추세를 반영하여 ‘이슈의 포괄성’을 반영해야 한다.

둘째, 주인의식에 입각하여 북한의 수요를 가장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셋째, 북한의 수용역량을 고려하여 접근해야 한다. 특히 개혁·개방에 대한 북한의 수용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식협력 사업의 추진 분야는 비정치적인 분야 → 시장경제적 요소를 반영한 과도기 분야 → 시장경제 및 사회발전을 위한 분야로 단계별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비정치적 분야는 이슈의 포괄성, 북한의 수요(유엔 등과 합의한 분야, SDGs에 대한 입장, 남북 분과회담 합의 등 포함)를 종합하여 볼 때 기후변화, 산림협력, 농업협력, 보건의료협력, 식수 및 위생협력, 에너지협력 등의 분야를 최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을 것이다.

역량 형성과 여건 조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국제사회는 개인역량 강화 → 조직 및 기관 역량 강화 → 규칙 및 규범 등 제도적 환경의 조성 등 시기별로 지식협력 사업의 중점에 변화를 겪어 왔다. 그동안 우리 정부와 국내NGO들이 추진한 지식협력 사업을 살펴보면 주로 개인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일부 기관역량 강화 사업이 추진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대북 지식협력 사업은 개인역량, 조직 및 기관 역량강화를 넘어 규칙 및 규범 등을 반영한 제도적 환경 조성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미 북한 당국도 유엔과 합의한 ‘유엔전략계획 2017-2021’에서 보듯이 국제규범 및 국제기술 표준을

수용하여 개발협력 및 지식협력을 추진한다는 데 동의한 바 있다.

국제사회는 지식협력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플랫폼 등 기관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추진 방향을 구축하여 오고 있다. 우리도 대북 지식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 차원의 추진 방향, 민관협력 체계, 국제사회와의 협력체계 등 대북 지식협력 추진 거버넌스를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또한 FAO, UNECE, 세계은행 등의 사례를 참조하여 한반도 현실에 맞는 지식협력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해야 할 것이다.

대북 지식협력 사업은 남북관계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초기 단계에서는 국내NGO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다. 단계적 분야의 확산 방식과 관련하여 비정치적 우선 분야를 중심으로 국내NGO의 대북 지식협력 사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재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남북협력기금 등 국내NGO의 대북 지식협력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지식협력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절차를 포함하여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전히 국내NGO의 역량이 취약하다는 점에서 북민협을 중심으로 민관협력을 통해 국내NGO의 대북 지식협력 사업 추진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만 보다 본질적인 대북 지식협력 추진의 장애 요소는 남북관계 경색, 제재 등 외부 정치적 변수로 인한 인적 교류 및 접촉의 제약, 금지되는 상황이 지속된다는 점이다. 대북제재는 물자를 넘어 인적 교류까지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대북제재의 본질적 제약 요소를 완화할 수 있는 국제협력이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대북지원 20년 백서』. 서울: 대북민간단체협의회, 2016.
- 손영석. 『지식경제시대와에 제기되는 몇가지 경제리론문제』.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4.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나눔과 평화의 길, 그 스무 해의 여정』. 서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2016.
- 윤미경·김종일·이재인. 『지식공유사업을 위한 개발도상국 발전제약요인 진단』. 세종: 한국개발연구원, 2020.
- 이금순. 『대북 인도적 지원 개선방안: 개발구호를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2000.
- 이용범·김혜영. 『국제사회복지연구, 북한편』. 서울: 한국월드비전, 2013.
- 장금란·박광철. 『교육발전의 세계적 추세 교육의 정보화』. 평양: 김형직사범대학출판사, 2012.
- 조정아·이춘근·엄현숙. 『‘지식경제시대’ 북한의 대학과 고등교육』. 서울: 통일연구원, 2020.
- 최춘흠·김영운·최수영. 『UN 기구의 지원체계와 대북활동』. 서울: 통일연구원, 2008.
- 통일부. 『남북협력기금백서 2008』. 서울: 통일부, 2008.
- _____. 『통일백서 2006』. 서울: 통일부, 2006.
- _____. 『통일백서 2007』. 서울: 통일부, 2007.
- _____. 『통일백서 2008』. 서울: 통일부, 2008.

- _____. 『통일백서 2009』. 서울: 통일부, 2009.
- _____. 『통일백서 2010』. 서울: 통일부, 2010.
- _____. 『통일백서 2013』. 서울: 통일부, 2013.
- _____. 『통일백서 2015』. 서울: 통일부, 2015.
- _____. 『통일백서 2016』. 서울: 통일부, 2016.
- _____. 『통일백서 2018』. 서울: 통일부, 2018.
- _____. 『통일백서 2019』. 서울: 통일부, 2019.
- _____. 『통일백서 2020』. 서울: 통일부, 2020.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북한보건의료백서』. 서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2019.
- _____.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10년사: 2006~2016』. 서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2016.
- ActonAid. *Real Aid: Making Technical Assistance work for the poor*. London: ActonAid International(UK), 2006.
- Bickerton, Christopher et al. *Politics Without Sovereignty: A Critique of Contemporary International Relations*. Oxon; New York: University College London Press, 2006.
- Centre for Governance and Development (CGD). *New law: Political parties to be funded by the state*. Nairobi: Centre for Governance and Development, 2005.
- Cox, Marcus and Gemma Norrington-Davies. *Technical assistance: New thinking on an old problem*. Ukraine: Open Policy Foundation, 2019.
- Easterly, William. *The Tyranny of Experts: Economists, Dictators, and the Forgotten Rights of the Poor*. New York: Basic Books, 2013.

- Evenett, Simon. *The effectiveness of technical assistance, socio-economic development, and the absorptive capacity of competition authorities*. United Nations, Mexico, D.F.: UN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Caribbean, 2006.
- Gibbon, Peter, Yusuf Bangura, and Arve Ofstad eds. *Authoritarianism Democracy and Adjustment*. Uppsala: The Scandinavian Institute of African Studies, 1992.
- Greijn, Heinz et al. eds. *Capacity Development Beyond Aid*. The Hague: SNV Netherlands Development Organisation, European Centre for Development Policy Management, 2015.
- Harrison, Graham. *The World Bank and Africa*. The Construction of Governance States. London: Routledge, 2004.
- Hornidge, Anna-Katharina and Antweiler eds. *Environmental Uncertainty and Local Knowledge. South East Asia as a Laboratory of Global Ecological Change*. Bielefeld: Transcript, 2012.
- Koch, Susanne. *The impact of foreign experts on policymaking in young democracies - a comparative analysis of South Africa and Tanzania*. Bielefeld: Universitätsbibliothek Bielefeld, 2015.
- Koch, Susanne and Peter Weingart. *The Delusion of Knowledge Transfer*. Cape Town: African Minds, 2016.
- UNESCO. *Declaration on Science and the Use of Scientific Knowledge*. Paris: World Conference on Science Budapest, 1999.
- Williams, Peter. *British Aid: Technical Assistance*. London: Overseas Development Assistance, 1963.

World Bank, *Kenya - Financial technical assistance projects*.
Washington, DC: World Bank, 1995.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Report 1998/99: Knowledge for
Development*. Washington DC: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2. 논문

김태균. “북한의 개발역량 발전을 위한 시론: 남북협력 파트너십으로서
지식공유·역량발전의 유연성.” 『국가전략』. 제20권 4호, 2014.

박찬모. “평양과학기술대학의 비전과 한반도의 미래.” 『북한과학기술
연구』. 제9집, 2015.

이병일. “남북 농업 및 농업과학 교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제10호, 2014.

임을출·최창용. “북한 개발지원 방향과 전략.” 『통일정책연구』. 제14권
2호, 2005.

Berman, Sheri. “Ideational theorizing in the social sciences
since Policy, paradigms, social learning and the state.”
Governance, vol. 26, no. 2, 2013.

Dijkstra, Geske. “The PRSP approach and the illusion of improved
aid effectiveness: Lessons from Bolivia, Honduras and
Nicaragua.” *Development Policy Review*, vol. 23, no. 4,
2005.

Gibson, Clark C., Barak D. Hoffman, and Ryan S. Jablonski.
“Did Aid Promote Democracy in Africa? The Role of
Technical Assistance in Africa’s Transitions.” *World
Development*, vol. 68, 2014.

- Godfrey, Martin et al. "Technical Assistance and Capacity Development in an Aid-dependent Economy: The Experience of Cambodia." *World Development*, vol. 30, no. 3, 2002.
- Holtom, Duncan. "The challenge of consensus building: Tanzania's PRSP 1998-2001." *The Journal of Modern African Studies*, vol. 45, no. 2, 2007.
- Land, Tony. "Joint Evaluation Study of Provision of Technical Assistance Personnel What can we learn from promising experiences? European Center for Development Policy." *Management Discussion Paper*, No. 78, 2007.
- Owen, David. "The United Nations Program of Technical Assistance."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vol. 270, 1950.
- Park, Jin and Seung-Ho Jung. "Ten Years of Knowledge Partnership with North Korea." *Asian Perspective*, vol. 31, no. 2, 2007.
-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uncil. "Science in underdeveloped countries: World plan of action for the applic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to development." *Minerva*, vol. 9, no. 1, 1971.
- Yasuyuki, Todo. "Impacts of Aid-Funded Technical Assistance Programs: Firm-Level Evidence from the Indonesian Foundry Industry." *Discussion papers from Research Institute of Economy*, 2008.

3. 기타 자료

『서광』.

『연합뉴스』.

『전자신문』.

『조선중앙통신』.

『중앙일보』.

『통일신문』.

『한국대학신문』.

『BBC 코리아』.

『CBS 노컷뉴스』.

『The YUST PUST Foundation Newsletter』.

『VOA』.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겨레의 숲 <<https://blog.naver.com/greenonekorea0402>>.

국제푸른나무 <<http://www.gti.or.kr>>.

굿피플인터내셔널 <<https://www.goodpeople.or.kr>>.

나이스피플 <<http://www.nicepeoplefoundation.kr>>.

어린이어깨동무 <<https://www.okfriend.org>>.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http://www.healthchild.org/new>>.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http://ksm.or.kr>>.

삼복지재단 <<http://www.samcare.org>>.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https://www.unijn.or.kr>>.

지구촌농업협력 및 식량나누기운동 <<http://www.agglobeinternational.org>>.

통일농수산사업단 <<https://tong1nong.modoo.at>>.

통일부 <<https://www.unikorea.go.kr>>.

하나누리 <<http://www.hananuri.org>>.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https://www.kfhi.or.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한국월드비전 <<https://www.worldvision.or.kr>>.
FAO <<http://www.fao.org>>.
GSSD Expo <<https://www.expo.unsouthsouth.org>>.
GIZ <<https://www.giz.de>>.
Harry S. Truman Library & Museum <<https://www.trumanlibrary.gov>>.
Knowledge Sharing Program <<http://www.ksp.go.kr>>.
OECD <<https://www.oecd.org>>.
South-South Galaxy <<https://www.southsouth-galaxy.org>>.
UN <<https://www.un.org>>.
UN CC:Learn <<https://www.uncclearn.org>>.
UNECE <<https://unece.org>>.
UN-INSTRAW <www.un-instraw.org>.
UNITAR <<https://unitar.org>>.
UNOSSC <<https://www.unsouthsouth.org>>.
UN University <<https://unu.edu>>.
World Bank <<https://www.worldbank.org>>.

제1차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 공동보도문, 2018.7.4.
겨레의 숲 관계자 인터뷰 (2021.6.18., 통일연구원).
남상민 UNESCAP 동북아시아사무소 부대표 인터뷰 (2019.9.25., 인천 송도).
박경애 UBC 한국학연구소 소장 인터뷰 (2019.11.28.~30., 캐나다).
국내NGO 대상 심층 설문조사 (2021.8., 서울).
최창용, “남북 지식협력(공유) 추진 방향,” 통일연구원 서면자문,
2021.9.21.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June 2021.

UNESCAP 내부 자료.

UN Country Team in DPRK, “Strategic Framework for Cooperation Between the United Nations and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17–2021.” 2016.12.20.

Reaz, Mahmood, “The Effect of Technical and Non-technical Aid on the Economic Growth of Bangladesh and other Developing Countries.” Conference: 4th Summer Conference on Economic Research, Economic Research Group (ERG), 2018.7.7.

부록



부록. 국내 NGOs 대상 지식협력 질문리스트

통일연구원에서는 2021년도 『남북 지식협력』이라는 주제로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과제 수행의 일환으로 국내 민간단체에서 진행한 대북 지식협력의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추진방안에 견해를 수렴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대북 지식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상황에 대비하여 적실성 있는 추진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합니다.

- ※ 첨부한 문서에 포함된 기관의 경우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심층 질문의 개별 항목에서 추가로 기술 요망
- ※ 첨부한 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첨부 내용을 참조하여 심층 질문의 개별 항목을 기술해 줄 것을 요망

I. 대북 지식협력 추진 현황

1. 기관명:

2. 귀 기관에서 추진한 대북 지식협력의 개략적인 내용과 경과를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된 사업이 복수일 경우 복수로 응답)

※ 다음과 같은 요소가 포함되도록 기술 요망

- 대북 지식협력의 분야: 농업, 축산, 보건의료, 산림, 식수위생 (WASH), 교육, 통계, 과학기술, 정보통신, 통계 등
- 추진한 대북 지식협력 사업의 유형: 기술전수, 공동토론회 및 학술회의, 인재양성 등
- 기 추진한 대북 지식협력 사업은 대북지원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포함되어 추진되었는가, 아니면 독자적인 지식협력 사업으로 추진되었는가?

* 예: 제약공장 건립 후 운영을 위한 기술전수 혹은 독자적인 인재 양성 센터 등

- 대북 지식협력 사업을 수행한 기간: 1년~3년, 3년~5년 이내, 6년~10년 이내, 10년 이상 등
- 대북 지식협력 사업을 추진한 주체의 유형: 단독, 국내 민간단체와의 파트너십, 정부와의 파트너십, 정부-국제단체와의 파트너십 등
- 대북 지식협력의 북한 파트너, 북측의 태도 등 성사 과정 및 개략적인 사업 내용 등
- 대북 지식협력을 추진할 때 장애 요소 및 어려웠던 점
- 대북 지식협력이 미친 영향에 대한 평가: 북한 내 역량 형성, 지식협력에 대한 인식의 변화, 제도의 변화, 신뢰 형성 등

※ 지식협력: 한 지역에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협력사업을 의미. 여기서는 기술지원, 기술협력, 역량강화 사업, 경험공유 사업 등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

II. 대북 지식협력 추진 방향에 대한 견해

1. 귀 기관에서 구상 중인 대북 지식협력 사업이 있다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식협력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등
2. 지식협력을 위한 북한 내 여건과 북한의 인식에 대한 귀 기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북한이 선호하는 지식협력의 분야 및 유형 등
 - 무역, 금융, 경제, 관광, 법률 등으로 지식협력 확대 가능성 등
3. 효과적인 대북지식 협력 추진을 위한 국내 인프라 구축 방향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북 지식협력 추진을 위한 추진 방향: 통일부 등 정부의 추진 방향, 민관협력, 국제사회와의 협력 방향 등
 - 대북 지식협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대북 지식협력 관리 체계 구축 방안 등
 - 민간단체의 대북 지식협력 추진을 위한 역량 제고 방안 등
- ※ 국제사회는 지식협력을 위한 플랫폼 구축을 강조하는 추세
 ※ 지식협력 플랫폼: 정보의 공유 및 사업별, 지역별, 파트너십별 사업 주선 등을 담당
4. 대북 지식협력 사업의 효과에 대한 평가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가의 요소는?
5. 정부에 대한 건의 등 남북 지식협력 확대 및 발전을 위해 개선하기를 원하는 사항이 있다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발간자료 안내

연구보고서

2019년도 연구보고서

<연구총서>

2019-01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전략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전망: 미국의 적대국 관계정상화 사례와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	이기태 외	8,000원
2019-02	남북관계 2023: 도전요인과 대북정책 추진방향	김갑식 외	17,500원
2019-03	한반도 평화협정의 법적 쟁점과 과제	도경욱, 안준형	8,500원
2019-04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	이재영, 김주리	8,000원
2019-05	화해협력 이론과 사례 그리고 한반도	서보혁 외	12,000원
2019-06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중협력방안	이재영 외	11,500원
2019-07	북한 여성의 일상생활과 젠더정치	조정아 외	11,000원
2019-08	북한 변화의 변수와 경로: '핵문제'와 '개혁·개방'의 조합을 중심으로	박영자 외	11,000원
2019-09	남북연합 연구: 이론적 논의와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이무철 외	15,000원
2019-10	뉴노멀시대 미중관계 변화와 한국의 대북·통일전략	신중호 외	18,000원
2019-11	남북한 인도협력 방안과 과제: 인도·개발·평화의 트리플 넥서스	홍석훈 외	9,000원
2019-12	남북 사회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교류거버넌스 구축방안: 체육교류를 중심으로	이우태 외	9,000원
2019-13	분권형 대북정책 추진 전략과 실천과제: 대북교류협력정책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중심으로	나용우 외	10,000원
2019-14	북한 외교정책: 정책패턴과 북핵외교 사례분석	김진하 외	10,000원
2019-15	김정은 정권 핵심집단 구성과 권력 동학	오경섭 외	9,500원
2019-16	북한이탈주민 가치적응 실태연구: 지역사회통합 중심으로	김수경 외	7,500원
2019-17	변화하는 통일환경에 따른 대북·통일정책 개선과제: 신한반도체제 구상을 중심으로	조한범 외	14,500원
2019-18	남북교류협력 재개 과정에서의 신변안전 보호에 관한 연구 - 영사접견 기능의 제도화를 중심으로 -	이규창 외	11,500원
2019-19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대북 정책	이상신 외	24,000원
2019-20	한반도 평화와 남북 협력 종합연구 총론: 평화·경제·화해 협력 구상	서보혁	10,000원
2019-21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쟁점과 이행방안	서보혁 외	14,000원
2019-22	2019 한국인의 평화의식	박주화 외	19,000원

2019-22-01	평화의식 문항별 분석	박주화	18,500원
2019-22-02	평화의식 문항별 테이블	박주화	14,500원
2019-23	평화교육의 실태와 쟁점: 통일교육과의 접점을 중심으로	조정아 외	12,000원
2019-24	북한 실태 연구: 도시경제의 네트워크와 로지스틱스	홍 민 외	10,500원
2019-25	김정은 시대 서부 주요 도시의 기업현황 및 가동률 결정요인 분석	정은외	14,000원
2019-26	남북경협 발전 잠재력과 정책 과제	김석진, 홍제환	10,000원
2019-27	한반도 평화·변영 실현을 위한 국경 협력	현승수 외	14,000원
2019-28	한반도 접경국과의 초국경 관광·교통 협력	최장호 외	10,000원
2019-29	주변국의 사이버 환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채재병 외	8,500원
2019	제3세대 인권과 북한	인도협력연구실 편	16,500원

<정책연구시리즈>

2019-01	한반도 평화협정문 구상과 제안	김상기 외	
2019-02	국제전략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신남방정책	이기태, 배정호	
2019-03	국제 비교를 통해 본 북한의 생활수준	김석진, 홍제환	
2019-04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가 한국인의 주요 인접국가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미동맹과 한일관계를 중심으로	이상신 외	

<Study Series>

2019-01	North Koreans' Current Living Conditions Based on UNICEF Survey Results: With a Focus on the Status of Infant Nutrition	Hong, Jea Hwan	
2019-02	The Impact of Sanctions on the Enjoyment of Human Rights	Do, Kyung-ok · Baek, Sangme	
2019-03	South Koreans' Perception on Peace: With a Focus on Peace, War, the Way Peace is Realized, and the Attitude for Inter-Korean Reconciliation	Kim, Kap-Sik · Park, Juhwa	

2020년도 연구보고서

<연구총서>

2020-01	평화경제 실현방안: 국제협력을 중심으로	김석진, 홍제환	10,000원
2020-02	남북한 주민 왕래 및 이주와 혼인에 관한 법적 연구	이규창, 문선혜	10,000원
2020-03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에 관한 연구	김수암 외	9,000원
2020-04	평화-인권-발전의 트라이앵글: 이론적 검토와 분석틀	홍석훈 외	11,000원
2020-05	중·러 협력과 한반도 평화·변영	현승수 외	11,500원
2020-06	한반도 평화변영과 북일관계 연구	이기태 외	8,000원

2020-07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 정치적 배경과 법적 기반 분석	민태은 외	8,500원
2020-08	남북기본합정 체결방향과 과제	도경옥 외	9,000원
2020-09	남북연합 구상과 추진방안	이무철 외	11,000원
2020-10	새로운 한반도 구상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김갑식 외	13,000원
2020-11	평화공감대 확산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박주화 외	12,500원
2020-12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정성윤 외	15,500원
2020-13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정은이 외	11,000원
2020-14	신남방정책·신북방정책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나용우 외	14,500원
2020-15	해외의 시각으로 본 신남방·신북방정책의 평가와 과제	나용우 외	17,500원
2020-16	2020 한국인의 평화의식	박주화 외	14,500원
2020-16-01	2020 한국인의 평화의식: 문항별 분석	박주화	16,500원
2020-16-02	2020 한국인의 평화의식: 문항별 테이블	박주화	16,500원
2020-17	'통일에 대한 태도'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박주화 외	12,500원
2020-18	평화경제의 비전과 추진방향: 남북 육상·해양협력을 중심으로	서보혁 외	20,000원
2020-19	국제 평화경제 사례와 한반도	조한범 외	11,500원
2020-20	북한의 발전전략과 평화경제: 사회기술시스템 전환과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홍민 외	18,000원
2020-21	강대국 경쟁과 관련국의 대응: 역사적 사례와 시사점	신종호 외	23,000원
2020-22	북한의 인구변동: 추세, 결정요인 및 전망	홍제환 외	14,000원
2020-23	체제전환 과정에서의 인구구조 변화 연구	최창호 외	7,000원
2020-24	'지식경제시대' 북한의 대학과 고등교육	조정아 외	13,000원
2020-25	KINU 통일외식조사 2020: 주변국 인식 비교연구	이상신 외	24,500원
2020-26	김정은 정권 통치담론과 부문별 정책 변화: 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한 담화·연설 분석	오경섭 외	14,500원

〈정책연구시리즈〉

2020-01	감염병 공동대응을 위한 남북인도협력	이규창 외
2020-02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분석과 국내외 정책 전망	민태은 외

〈Study Series〉

2020-01	The Peace Agreement on the Korean Peninsula: Legal Issues and Challenges Do, Kyung-ok·Ahn, Jun-hyeong
2020-02	Variables and Pathways of Changes in North Korea: Focused on Different Combination of 'Nuclear Issues' and 'Reform·Opening' Park, Young-Ja·Jeong, Eun Mee·Han, Ki Bum
2020-03	Daily Lives of North Korean Women and Gender Politics Cho, Jeong-ah·Yee, Ji Sun·Yi, Hee Young
2020-04	2019 Annual Reports of Attitude of Koreans toward Peace and Reconciliation Park, Juhwa et al.

2021년도 연구보고서

〈연구총서〉

2021-01 남북 민생협력의 효율적 추진방안: 추진체계, 사업기획 및 성과관리	김석진·홍제환 8,000원
2021-02 북한의 사회불평등 연구: 건강 및 교육 불평등과 인권	최규빈 외 9,000원
2021-03 국가상징의 문화적 형상과 북한의 브랜드 전략	이지순 외 9,000원
2021-04 남북 지식협력: 현황 및 추진방향	김수암 외 9,500원
2021-05 유네스코 공동등재를 활용한 남북 문화유산협력	이우태 외 11,000원
2021-06 미국의 평화정책과 전망: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한미관계	민태은 외 10,000원
2021-07 평화·통일 공공외교 추진기반 조성을 위한 민간의 역할과 개선방안: 주변 4국을 중심으로	전병곤 외 14,500원
2021-08 동아시아 평화·번영을 위한 비전통 안보 협력	이재영 외 11,500원
2021-09 국제협력 성패 결정요인에 대한 이론 연구	정성윤 10,500원
2021-10 북한의 정보화와 주민생활 변화	정은미 외 10,500원
2021-11 김정은 지배체제 구축과 권력 안정화	오경섭 외 10,500원
2021-12 김정은 정권의 핵 외교와 대외정책 변화	김진하 외 18,000원
2021-13 김정은 시대 북한경제: 경제정책, 대외무역, 주민생활	홍제환·김석진 10,000원
2021-14 김정은 시대 북한의 사회정책: 복지와 통제를 중심으로	정은미 외 9,500원
2021-15 KINU 통일외식조사 2021: 통일·북한 인식의 새로운 접근	이상신 외 22,500원
2021-16 통일준비를 위한 북한의 SDGs 소개와 지표분석	황수환 외 16,000원
2021-17 남북 재해재난 공동관리시스템 구축 필요성과 추진방향	나용우 외 16,500원
2021-18 남북 접경지역 재해·재난 대응력 제고를 위한 '방재전이공간(TSDP)' 조성방안 기본 연구	김형수 외 9,500원
2021-19 북한의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I: 여성과 섹슈얼리티	박영자 외 13,500원
2021-20 북한의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II: 모성과 양육	이윤진 외 11,000원
2021-21 평화의 인권·발전 효과와 한반도	서보혁 외 11,000원
2021-22 미중 전략경쟁과 한국의 대응: 역사적 사례와 시사점	신종호 외 23,500원
2021-23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주변국 협력 방안	이기태 외 13,000원
2021-24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일본의 대한민국 협력 방안	최희식 외 11,000원
2021-25 세계질서의 재편과 신한반도체제	박은주 외 19,000원
2021-26 북한발전모델과 한반도 컨센서스	이재영 외 23,000원
2021-27 한반도 군비경쟁과 평화 정착	장철운 외 14,000원
2021-28 한반도 생활공동체 형성을 위한 남북협력 방향 모색	최지영 외 16,500원
2021-29 북한 일상생활 공동체의 변화	최지영 외 12,000원
2021-30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을 위한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김갑식 외 12,000원
2021-31-01 평화공동대 확산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박주화 외 10,000원
2021-31-02 2021 한국인의 평화의식	박주화 외 11,500원

2021-32	한반도 평화·비핵 프로세스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이무철 외 14,000원
2021-33	한반도 신경제구상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정은이 외 14,000원
2021-34	신남방정책·신북방정책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조한범 외 16,500원

<정책연구시리즈>

2021-01	2020년 미 대선 이후 한미관계 전망에 대한 여론조사	이상신 외
---------	--------------------------------	-------

<Study Series>

2021-01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Peace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Suk-Jin Kim
2021-02	North Korea's Income-Population Puzzle	Jea Hwan Hong · Suk-Jin Kim
2021-03	North Korea's College and University and Higher Education System in an 'Era of Knowledge Economy'	Jeong-ah Cho · Choon Geun Lee · Hyun-suk Oum
2021-04	A Study on the Access to Information of the North Korean People	Soo-Am Kim et al.

KINU Insight

2018-01	2018년 김정은 신년사 분석과 정세 전망	홍 민 외
2019-01	2019년 김정은 신년사 분석과 정세 전망	홍 민 외
2019-02	김정은 정권의 정보화 실태와 특징: ICT 부문을 중심으로	정은미
2019-03	미국의 INF조약 탈퇴 의미와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안보 전략에 대한 함의	김주리
2019-04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문화예술적 표상과 시사점	이지순
2019-05	중국의 4차 산업혁명과 북한에 주는 함의	이재영
2019-06	한반도 국제정세의 역동성과 한국의 대응 방향	서보혁
2019-07	신한반도 체제 구상의 이해	조한범
2019-08	최근 한반도 정세 평가와 정책 과제	김갑식 외
2020-01	북한의 제7기 제5차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분석과 정세 전망	홍 민 외
2020-02	평화의 경제적 가치: 2018 남북 간 주요 군사합의를 중심으로	장철운
2020-03	미국의 對北성공 관계정상화 프로세스와 대북정책	김유철
2020-04	대북제재 강화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 북중무역 감소의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최지영
2021-01	북한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분석	홍 민 외
2021-02	김정은 시대 주요 전략·정책용어 분석	홍 민 외
2021-03	2014~2020년 북한시장의 소비자물가 및 환율 변동: 추세, 특징, 시사점	최지영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18	한동호 외	2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8	한동호 외	24,000원
북한인권백서 2019	김수경 외	2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9	김수경 외	24,500원
북한인권백서 2020	이규창 외	21,5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20	이규창 외	27,000원
북한인권백서 2021	오경섭 외	21,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21	오경섭 외	27,000원

연례정세보고서

2018	2019 한반도 정세 전망	통일연구원
2019	2020 한반도 정세 전망	통일연구원
2020	2021 한반도 정세 전망	통일연구원
2021	2022 한반도 정세 전망	통일연구원

정기간행물

통일정책연구, 제27권 1호 (2018)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7, No. 1 (2018)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7권 2호 (2018)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7, No. 2 (2018)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8권 1호 (2019)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8, No. 1 (2019)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8권 2호 (2019)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8, No. 2 (2019)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9권 1호 (2020)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9, No. 1 (2020)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9권 2호 (2020)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9, No. 2 (2020)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30권 2호 (2021)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30, No. 2 (2021)	10,000원

기타

2018	한반도 평화체제 및 비핵화 관련 자료집	박주화, 윤혜령 53,500원
2018	북한의 건강권	이금순 외
2018	The Right to Health in North Korea	Lee, Keumsoon et al.
2018	미·중·일·러 한반도 정책 연구 네트워크 디렉토리	김진하 외
2020	동서 화해사상으로 본 통일공동체의 상과 과제	김범수 외
2020	DMZ 접경지역의 비평화 실태에 관한 인문학적 연구: 전략촌을 중심으로	정근식 외
2021	국제 평화문서 번역집	서보현·옹혜민 엮음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협동연구총서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통일연구원 발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담당자
- 나)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3, E-Mail: books@kinu.or.kr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 변경 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회원 가입신청서

* 표는 필수항목입니다.

신청자 성명* (입금자가 다를 경우 별도 표기)		소 속*		
간 행 물* 받 을 주 소	(우편번호 :)			※ 도로명 주소 가입必
연 락 처*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메일 서비스	수신 ()		수신거부 ()	
회 원 구 분*	학생회원 ()		일반회원 ()	기관회원 ()
본인은 통일연구원의 연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인)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통일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연구원 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위탁하는데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도서회원 서비스 제공**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소속, 주소, 연락처, 회원구분**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입금일로부터 1년 (회원자격 갱신 시 보유기간은 1년 연장)**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안내
5. 개인정보 취급업무 위탁 내역(고지사항)

위탁 받는 업체(수탁업체)	업무내용
(주) 코리아디엠	발간물 발송 업무 처리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도서 회원 가입 및 발송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인)

※ 정보주체가 만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본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보내주세요.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담당자앞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8, E-Mail: books@kinu.or.kr

※ 온라인 신한은행 140-002-389681
(예금주: 통일연구원)



남북 지식협력:
현황 및 추진 방향

